2014 ARKO
Cultural Policy Conference
White Paper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

백 서

여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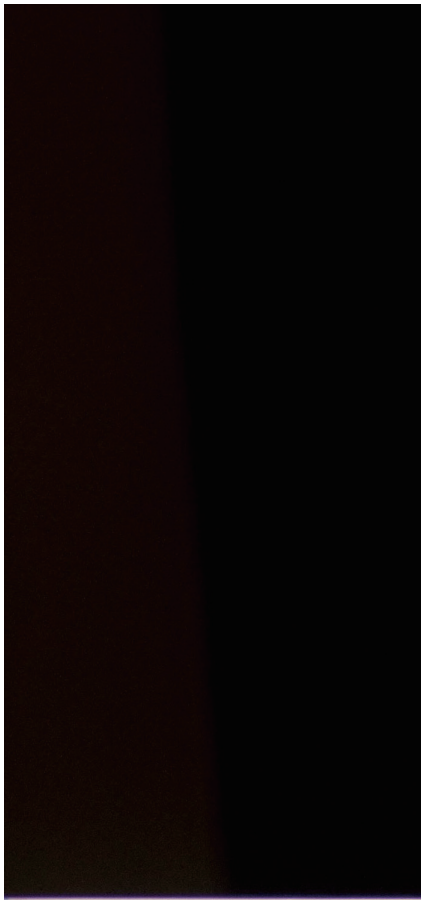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번 컨퍼런스가 문화융성 시대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2014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국정기조로 설정된 '문화융성'이라는 아젠다가 현재 우리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증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진단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정책이 가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정책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최되어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계 및 학계의 문화정책전문가, 문화재단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 등 총 42명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 문화정책의 현황과 비전을 두루 논하는 담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300여명의 문화예술인 및 일반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덕분에 보다 생생하고 폭넓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현황점검, 문화예술의 가치 제고방안, 국제교류, 지역문화정책, 문화재정 등 여러 주제를 놓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정책제언들을 모아 '2014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문화융성 시대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내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

백서

행사 개요

행사 목적

문화예술 관련 정책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여 문화재원 확보, 예술의 가치 제고 및 확산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예술위원회의 현안 과제 해결 및 미래 발전방안을 모색

행사 개요

행사명	2014 아르코 문화예술정책 컨퍼런스
일시	2014년 11월 21일(금) 14:00~17:10
장소	전남대학교 광주은행홀 및 박물관(111호, 112호)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주관	한국문화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전남대 공공행정연구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참석	문화예술 분야 학자, 지자체, 지역재단, 예술인, 학생, 유관기관 관계자 및 일반인 등 300여 명

추진 효과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정책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협력 계기 마련

현장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문화예술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담론의 장을 형성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및 문예기금 고갈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둘러싼 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

세부 내용

구분	장소	주관	내용
개회	광주은행홀	예술위원회 문화정책학회	**개회사** 이용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축사** 지병문(전남대 총장) **기조연설** 정홍익(한국문화정책학회 회장)
제1부	광주은행홀	행정학회	**문화정책 진단과 전망** **사회_** 이형환(중앙대 국악교육대학원) **발제_** 한승준(서울여대), 주효진(꽃동네대) **토론_**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상언(대전문화재단) 오자현(국립발레단), 이석환(국민대)
	박물관 111호	문예경영학회	**문화예술의 가치 제고 및 확산** **사회_** 박신의(경희대 경영대학원) **발제_** 추미경(문화다움), 김규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토론_** 이용관(대전예술의전당 관장), 신형덕(홍익대) 변지혜(서울시립미술관), 서우석(서울시립대)
	박물관 112호	문화경제학회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한류가능성** **사회_** 이흥재(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발제_** 이상빈(한국외대), 김인설(전남대) **토론_** 송희영(서울예대), 박종달(한국예술종합학교) 김재범(성균관대), 최영호(용인대)
제2부	광주은행홀	전남대 문화전문 대학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융성 정책** **사회_** 김진아(전남대) **발제_** 이무용(전남대), 장세길(전북발전연구원) **토론_** 최정한(공간문화센터), 박호재(광주문화재단) 김광욱(광주발전연구원), 김대성(전남발전연구원)
	박물관 111호	예술경영학회	**문화재정의 진단과 개선방안** **사회_**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제_** 안성아(추계예대), 서우석(서울시립대) **토론_** 하계훈(단국대), 양지연(동덕여대), 김지원(광주문화재단) 윤현석(컬쳐네트워크)
	박물관 112호	거버넌스학회 전남대행정연	**문화예술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문화발전** **사회_** 김호균(전남대) **발제_** 서순복(조선대), 이병훈(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토론_** 김경아(호남대), 한강희(전남도립대), 김용민(송원대)

2014 ARKO
Cultural Policy Conference
White Paper



2014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 백 서

기조연설 문화예술의 공공가치와 문화정책 8

Session 1 문화정책 진단과 전망

발제 1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평가와 미래 정책과제 20
발제 2 문화예술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 · 단체장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38
토 론 문화정책의 현황점검 및 방향성

Session 2 문화예술의 가치 제고 및 확산

발제 1 예술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 vs. 예술의 자율성 54
발제 2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가 및 문화도시흐름 66
토 론 문화예술의 가치 제고 및 확산 방안

Session 3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한류 가능성

발제 1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제 전략 연구 84
발제 2 한류의 변화와 방향: 사회자본적 접근과 커넥티드 플랫폼 100
토 론 문화예술 국제교류의 현황 및 방향성

Session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융성 정책

발제 1 창조적 문화도시 디자인을 위한 지역문화융성 정책 방향 112
발제 2 문화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에서의 새로운 전략 모색 126
토 론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문화융성 정책

Session 5 문화재정의 진단과 개선방안

발제 1 공공예술지원 현황과 과제 140
발제 2 문화융성 시대 문화재정 :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중심으로 156
토 론 문화재정의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Session 6 문화예술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문화발전

발제 1 문화예술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172
발제 2 문화정책 변천에 따른 지역문화 발전 방향 186
토 론 문화예술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문화발전 방안

기조연설

문화예술의 공공가치와 문화정책

정홍익

한국문화정책학회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1. 서론

문화예술은 국민 세금으로 지원 받을 가치가 있는가? 정부 개입은 바람직한가? 부작용은 없는가? 개입 형태와 정도는 어느 수준이 적정하며, 바람직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비록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화예술 자체와 그를 둘러싼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이 변해 왔기 때문이다. 소수 유한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문화예술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그 소비가 확장되기 시작하여, 현대에 와서는 대중이 그 소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 와중에 문화예술은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전대미문의 변혁을 겪었고, 본질과 기능에도 심각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정부의 문화정책도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더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이용으로 촉진된 세계화와 문화예술의 대량 생산, 유통, 소비는 정부와 문화예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화예술에 의해서 발생되는 공적가치와 혜택(public benefits)을 평가함으로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정부역할 재조명의 배경

정부예산 압박과 문예기금 고갈 위기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실제로 2016년 초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위 : 억 원)

	2013년도 말	2014년도 말 (추계, 요구액 기준)	2015년도 말 (추계, '14 기준)	2016년도 말 (추계, '14 기준)
수입	1,190	970	970	970
지출	1,223	1,875	1,875	1,875
수지 차	△33	△905	△905	△905
유동성 적립금	1,897	992	87	△818

오락, 여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의 문화예술 수요 증가 세계화의 결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문화예술 상품과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등장하고, 소득 수준 향상, 여가 시간 증가,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문화예술 상품과 서비스 생산, 유통, 소비가 크게 증가

순수, 고급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 필요 순수, 고급 문화예술에 대한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양적, 질적으로 답보하고 있어, 시장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순수, 고급 문화예술을 보호, 진작하기 위한 공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가 문화경쟁력(National Cultural Competitiveness) 강화 필요 문화예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국격의 중요한 상징, 21세기 Creative City 육성을 위해, 또 선진국가 도약을 위한 사회적 자본과 시민정신 배양을 위해 문화예술을 진작하고 보급해야 한다.

문화산업과 창조경제를 위한 문화예술 활용 필요 예술은 인간만이 가진 상징적 능력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조적 활동으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산업 육성과 창조적 역량을 배양하여 21세기 지식창조 경제를 뒷받침할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1]

교육 역량 특히 청소년 교육을 위한 문화예술 활용 필요 문화예술은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지적 능력 향상에 필요한 효과적인 수단, 청소년의 인성교육에 효과적인 규범 교육수단, 그리고 청소년의 정서, 감수성 교육에 필요한 교육수단이다.

건강증진과 정서안정을 위한 문화예술 활용 필요 음악, 미술, 무용, 문학 등은 질병의 치유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특히 임산부, 노약자, 청소년 등 취약 인구에 효과가 있고, 정신 질환의 치료와 예방, 정서적 안정 증진에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수단이다.

[1] 문화예술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은 OCED 국가의 국내 총생산에서 5~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선진시민의식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활용 필요 문화예술 경험은 감정이입(empathy) 능력을 배양하여 바람직한 공동체와 '좋은 이웃'을 조성하는 수단이며, 지식과 교양의 구비, 바람직한 시민의식 조성, 특히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격형성을 지원한다.

2. 문화예술과 국가역할

국가(정부) 권력의 속성과 한계 강제성(주권적 권력은 최상의 권력, 전제적 폭력권, 사유재산의 제한과 몰수, 세금의 부과 등)과 비효율성(개인의 자유를 제약,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제한, 문화예술의 창의적 특성과 정부 개입 등)

문화정책 모형

모형	개입수준	정책목표	해당국가
후원정책	불개입	예술의 자유	미국
지원정책	수동적 개입	예술의 수월성	영국
견인정책	능동적 개입	예술의 혜택	프랑스
독제정책	소유와 통제	정치, 이념의 도구	북한

정부(공공)의 문화예술 지원근거 긍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공적 혜택론(사회적 효과, 국격 향상, 청소년 교육효과, 경제효과, 동료효과 – 예술과 예술가간 융합효과, 후세를 위한 투자효과), (준)공공재론, 가치재론, 기회 균등론, 생산성 격차론, 신생 산업론 등

3. 문화예술의 공공 혜택:기존 평가 틀의 검토

1) 경제, 사회, 문화적 효과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Impact of the City Arts and Culture Cluster, 2013

London 시가 의뢰한 이 연구로, London 시내에 위치한 문화예술기관들이 London시에 기여한 효과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로 분류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 직접 효과(문화예술기관의 총수입), 간접 효과(공급자들에 대한 문화예술기관의 지출), 유도효과(문화예술기관 종사자들의 지출)

사회적 효과 교육 · 자원봉사 · 능력개발과 경험의 기회, 노인에게 건강 증진과 사회활동의 기회, 보람 있는 삶 · 즐거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능력 있고 봉사정신이 강한 시민을 양성하며, 이용 기관에게는 관객과 시민에 다가 가는 기회를 제공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효과 세계적 수준의 문화와 도시 창출 효과, 국제적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활동과 위상 확립, 세계적으로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을 선도하는 역할

2) 문화예술 정책의 실증적 기반
The evidence base for arts and culture policy, 2008

Scotland 정부의 5대 전략 정책에 문화가 기여하고 있는지를 2004~2007년 기간에 발표된 연구에 기초하여 평가한 보고서이다.

Scotland 정부의 5대 전략목표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5대 전략목표는, '보다 부유하고 공정하게'(Wealthier and fairer), '보다 건강하게'(Healthier), '보다 안전하고 튼튼하게'(Safer and stronger), '보다 명석하게'(Smarter), '보다 친환경적으로'(Greener)이다.

3) 문화를 위한 증언
Making the Case for Culture, 2006

Canada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Creative City Network of Canada)에서 발간한 보고서로 Arts Advocacy, Impacts of the Arts, Arts and Health 등 6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의 효과와 혜택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경제적 효과 고용 창출과 산업, 지역의 관광산업 촉진 기반, 창조도시 건설, 고급 두뇌 유치의 수단, 광범위한 경제적 · 산업적 창구효과

도시 재개발, 활성화 효과 도시 핵심(city core) 재생, 쇠락한 상업지구의 미관 개선, 중심지구에 새로운 도시공간 구축, 도시 이미지 향상과 새로운 정체성 형성, 문화유산과 역사 복구로 도시 재생,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 · 건물 재활용화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 향상

지역사회 정체감과 자긍심의 강화 효과 예술은 주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의 기회와 수단을 제공,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고 특화하는 수단을 제공,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봉사활동을 촉진, 집단기억(collective memory)을 보전하고 과거를 반추

지역사회의 삶(Well-being)을 향상시키는 효과 예술은 공공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수단, 공동체의 창조적 학습 능력을 배양하는 수단, 공동체의 집단적 · 자조적 활동을 위한 수단,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 지역사회의 활력과 리더십을 배양

문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 지역사회의 화합과 의식수준을 고양,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평생교육을 촉진하며 이로서 삶의 질을 향상,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수집단의 사회참여를 촉진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성과 사회성 개발 효과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학교나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하는 효과, 학습능력 향상, 인내심과 자신감 향상, 청소년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성숙과정을 돕고 취업 지원 기능, 리더십 개발과 지역봉사 촉진

2) 문화, 예술, 스포츠 정책을 위한 실증적 근거에 대한 문헌조사

A Literature Review for the Evidence Base for Culture, the Arts, and Sport Policy

이 보고서는 Scotland 정부의 National Cultural Strategy, Sport 21과 The Partnership for a Better Scotland 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효과와 기여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사회적 효과(Social Impact) ① 새로운 재능 획득, 공식 · 비공식 학습 기회, 자신감 회복, 활발한 사회생활, 지역공동체 의식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 강화, ② 청소년들의 비행억제와 학습활동 개선, 취업자질과 능력 개선, ③ 소수집단의 사회참여 촉진, 자신감과 책임감 증진, 집단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 ④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개선 효과 등

사회정의 구현 효과 문화예술이나 스포츠가 반사회적 행동성향을 억제하는 효과,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스포츠 프로그램이 지역 청소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

보건 · 건강 증진 효과 문화나 스포츠 참여가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 환자들의 자신감 강화와 의사전달 능력 향상, 사회생활 활성화와 그로 인한 만족감 향상 효과

교육효과 문화활동이나 음악, 미술 등 예술활동은 읽기, 수학, 사회 등 학업능력을 향상, 스포츠나 예술학교의 학생들이 평균보다 높은 학력, 문화예술 활동은 학생들의 자신감,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

2) 뮤즈의 선물

Gifts of the Muse :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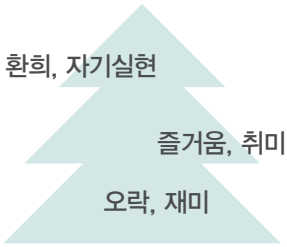
예술의 기능 · 혜택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미국 Rand 연구소 발간 보고서로, 예술의 본질적 혜택과 수단적 혜택을 분석하고 그 중에서 본질적 혜택의 중요성을 강조, 또 예술의 혜택을 개인에 대한 혜택과 사회에 대한 혜택으로 나누고 있다.

수단적 혜택(instrumental benefits) ① 인지적 혜택(Cognitive benefits, 성적과 학업 실적 향상, 읽기와 수학 같은 기본 학습능력 향상과 창의력의 향상, 학습태도와 가치관의 개선), ② 태도와 행동 개선 효과(Attitudinal and behavioral benefits, 자기 통제와 자신감 같은 태도의 개발과 학업관련 행동 개선, 책임과 의무를 인식 · 수용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 가치관 개발, 비행소년들을 순화하고 사회화하는 효과), ③ 건강 보건 효과(Health benefits, 치매증세가 있는 노인환자의 정신 · 신체적 건강 회복, 정신 · 지체 장애자, 파킨슨 병자, 급성 우울증 환자의 회복 촉진, 간호사 · 자원봉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능률향상, 수술 · 분만 · 치과 환자의 불안 해소, ④ 공동체 차원의 사회적 혜택(Social benefits, 구성원들 간 교류를 촉진, 지역 정체감 조성, 그리고 사회자본을 형성, 시민단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리더십과 인간관계 능력을 개발하여 공동체의 조직 역량을 강화, ⑤ 경제 효과(Economic benefits, 직접 효과 – 예술단, 프로그램의 고용, 수입과 지출 효과, 간접 효과 – 인구나 기업의 유인 효과 등, 공공재 효과 – 지역사회의 질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후대를 위한 문화유산 등)

본질적 혜택(Intrinsic benefits) ① 사적 혜택[Private benefits, 감동(captivation)과 즐거움(pleasure)], ② 공사의 혼합 혜택(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입 능력의 향상, 사물과 현상에 담긴 의미를 파악할 인지력의 향상), ③ 공적 혜택(공감을 통한 사회적 연대감의 조성, 공감, 공동 정체성의 표현의 촉진 – Expression of communal meanings)

4. 문화예술의 공공 가치, 혜택의 평가

1)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 (사적, 감성적 가치) : 공적 가치의 선정



2)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수단가치, 공적 혜택)

경제 발전, 공동체 조성 · 활성화 · 사회자본 강화, 도시재개발 · 활성화, 도시국제화 · 경쟁력 강화, 보건과 건강 향상, 청소년 육성, 관광산업 발전, 창조력 증대와 창조도시 개발, 다문화, 소외계층 통합, 국격 향상

3) 문화예술 가치평가 모형

고정 객관적 모형(Fixed Objective Model)



$Aa + Ha + Sa + Ea = \sum Ha$

문화재a의 가치의 총화 = (a의) 미학적 가치 + 역사적 가치 + 사회적 가치 + 경제적 가치 * 전통적 일반모형, 가치 불변적 모형, 대상 중심적 모형, 인간 배제형 모형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Dynamic Interactive Model)



문화예술의 가치는 가변적, 문화예술의 가치는 작품 속에만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예술의 가치는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결정됨, 문화예술의 가치형성 과정은 그 자체가 창조과정이다.

5. 사례와 평가 : 문화예술의 효과 [1]

[사례와 평가 1] 문화예술의 효과

1. 문화예술과 도시재생
   1) 런던 해링턴 웨이(Harrington way), 2) 런던 웸블리(Wembley)
   3) 리우데자네이루 빈민가(Favela), 4) 라이프치히(Leipzig)
   5) 도시재생 선도 지역(한국)
2. 문화예술과 도시관광
   1) 베를린(Berlin), 2) 게이츠헤드(Gateshead)
3. 문화예술과 아동 · 청소년 교육
   1)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 드럼 클럽활동
   3) The delta Blues Education, 4) 드라마 테라피(Drama Therapy)

[사례와 평가 2] 문화예술의 경제

1. 문화예술의 경제적 효과 2. 창조산업 및 융복합 효과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수입 확대 4.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5. 사회적 비용 감소를 통한 정부재정지출 절감

[사례와 평가 3] 문화예술의 효과

1. 창조도시 형성과 창의성 증진
   1) 집단 및 커뮤니티에 대한 긍정적 효과, 2) 개인의 능력개발
   3) 창조산업 발전, 4) 창조도시 형성
2. 건강 증진 및 치유 촉진
   1) 예술 활동 참여와 치유 효과, 2) 문화예술 활동 효과
3)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한 치유 효과

[2]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 「2014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 20~37쪽을 참조하기 바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Session 1

문화정책 진단과 전망

발제 1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평가와 미래 정책과제**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 2 **문화예술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 · 단체장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주효진 꽃동네대 복지행정학전공 교수

토 론 **문화정책의 현황점검 및 방향성**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오자현 국립발레단 공연기획팀 팀장

이석환 국민대 행정대학원 원장









2014 ARKO Cultural Policy Conference

White Paper

발제 1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평가와 미래 정책과제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1. 서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문화융성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문화와 문화융성을 매우 중요한 국정철학으로 강조해 왔다.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의 가치가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며, 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의의를 역대정부의 문화예술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주요 문화예술정책의 현황을 기술하였다. 둘째, '문화융성' 관련 국정과제를 평가하였고, 과제 추진기반 평가를 위해 '문화융성 국정과제 체계성', '추진조직', '재원',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추진 기반 평가를 토대로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미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국정과제 평가를 위해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통해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2.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의의와 현황

1)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의의

문화예술정책의 위상 강화

정부의 국정철학은 부처나 정책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정철학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문화정책은 여러 정책 기둥 중의 하나가 아닌 여러 정책 기둥을 덮는 지붕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역대 정부들이 국정 철학의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 등 거시조직을 강조한데 반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철학은 그 대상이 개인에 맞추어져 있다. 즉, 역대 정부에서 강조되던 근대화, 정의사회, 민주화, 세계국가, 문화국가, 계급, 민족, 신자유주의와 같은 거대 담론은 '삶', '행복'과 같은 미시 담론으로 변화하였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문화가 있는 삶'이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활동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다.

'문화' 개념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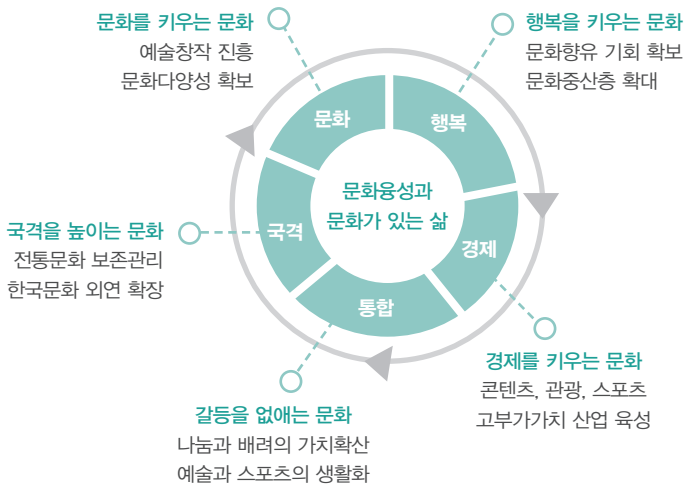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볼 때 경제강국에 진입하여 있으나,[3] 행복지수로 표현되는 국민의 삶의 질은 2013년 기준 OECD 36개국 중 27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 등 사회 ·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문화적, 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국민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인식 패러다임을 물질과 기능 중심에서 정신과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에서 일상적 삶의 현장을 강조할 경우, 문화예술의 범주는 기존의 순수 문화예술 뿐 아니라 대중문화, 일상 생활문화가 모두 포함된다.

그 결과 문화예술 중심으로 좁게 해석되었던 '문화' 개념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의 가치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삶의 주체인 개인 스스로 문화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상향식 문화정책 모델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다.

[3] 우리나라는 2013년 말 현재 무역규모가 1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7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천불로 세계 32위, 국가 신용등급은 2014년 현재 3대 평가기관 등급 '더블에이' 등으로 경제강국에 진입하여 있다.

〈그림 1〉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 개념



자료: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국가주도적

현 정부에서 문화의 가치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매개체이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으로, 삶에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 즉, 문화융성에 담긴 문화의 의미는 경제, 사회, 인류, 삶과 연관하여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을 담고 있다.[4]

[4] 그 결과 문화융성의 개념은 지나치게 경제발전의 근대적 패러다임에 종속되어 국가주의적인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며, 발전주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문화융성이 내포하고 있는 '번영'으로서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확산'으로서의 문화의 의미 중, 전자는 성장주의와 개발주의 혹은 국가주도형 문화개발과 민족창달의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현황

주요 내용

국정과제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문화융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들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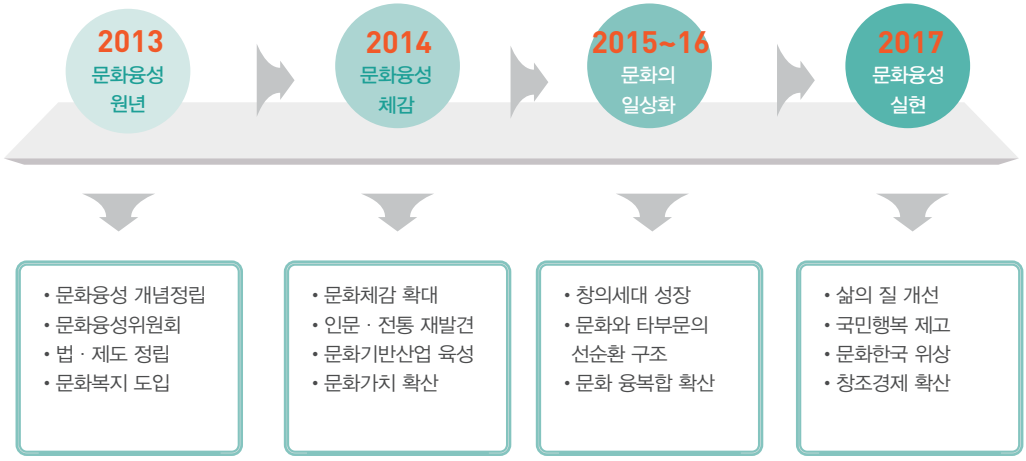
〈표 1〉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 분야 주요 정책과제

박근혜정부 문화분야 국정과제	국정기조	3대 전략	10대 과제
	문화융성	문화참여 확대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생활문화공간 조성, 문화참여 기회, 문화격차 해소, 문화다양성 증진
		문화 · 예술 진흥	예술인 지원, 문화유산 보존 강화, 인문정신 문화 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 고부가 관광 실현, 스포츠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2014 주요업무계획	정책비전	4대 전략	13개 세부정책과제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문화체감 확대	생활 속 문화 확산, 지역별 맞춤형 문화정책 시행, 체감형 예술지원 확대
		인문 · 전통의 재발견	인문 · 정신문화 진흥,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활용, 문화재 수리 · 관리체계 전면 개편
		문화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문화로 일자리 창출,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관광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문화가치의 확산	문화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국민체감 홍보
문화융성위원회 2014 문화융성 정책비전	비전	8대 정책과제	
	문화가 있는 삶	인문가치 정립 및 확산, 전통문화의 생활화, 생활 속 문화 확산, 지역 문화의 생성 및 발전, 균형 있는 예술 생태계 형성, 문화와 IT기술의 문화융성, 국내외 문화적 가치 확산, 아리랑의 체계적 전승을 위한 기반 마련	

추진현황

정부는 〈그림 2〉에 요약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문화융성의 단계별 실현 전략을 마련하였고, 2013년 한 해 동안 문화융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그림 2〉 문화융성의 단계별 실현 전략



자료: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융성, 국민 체감의 시작"(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첫째,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관한법률, 예술인복지법의 제 · 개정 등 문화융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특히, '문화기본법'의 제정은 그 의미가 크다.

둘째,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했고, 맞춤형 문화복지가 확대되었으며, 외래관광객이 2012년 대비 9% 증가하였고 관광분야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셋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수혜자 100만 시대를 열면서 문화활동이 크게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 차상이 계층 가운데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는 이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카드를 세대 당 1매씩 발급하고 있다.

넷째,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2013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예술인 실업자 월 10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 산재보험료의 30% 지원,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중지 명령제 등이 이루어졌고, 예술인 복지 예산도 지난해 대비 39%가 증가했다.

3.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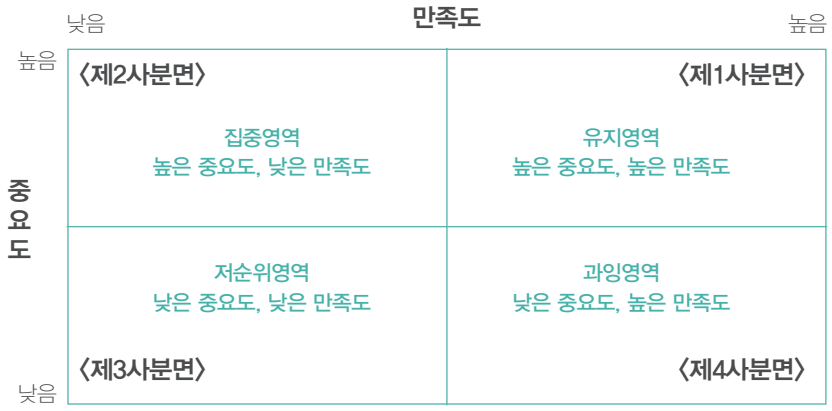
1) 국정과제 평가: IPA를 중심으로

분석틀 설정 및 조사설계

① 중요도–성취도 분석(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의 의의

Martilla와 James(1977)에 의해 소개된 IPA는 시각적 구분이 쉽고, 활용빈도가 높으며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며, 정해진 인력과 예산의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영역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해 준다.

〈그림 3〉 IPA 분석틀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위한 분석틀은 〈그림 3〉과 같이 격자 모형으로 제시되는데, X축은 만족도(성취도) 수준을, Y축은 중요도 수준을 나타내며,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1사분면은 계속해서 '유지(Keep up the good work)'하면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또 2사분면은 '집중(Concentrate here)'해야 할 상태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영역을, 3사분면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저순위(Low Priority)' 상태를, 4사분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과잉(Possible overkill)'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문화예술분야 국정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할 IPA분석에 있어서, 중심점은 전체 평균값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을, 그리고 중요도와 성취도의 매트릭스를 그리기 위한 격자 설정에는 각각의 표준편차를 접점으로 사용했다.

② 측정문항 선정 및 표본추출

문화예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IPA분석을 위해, 한국행정학회 문화행정특별위원회 소속 회원, 한국문화정책학회 임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공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원 등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총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48명 중 28부의 설문을 회수(회수율 58.3%)하여, 사회과학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version 21)와 엑셀(Excel 2007)을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설문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판단은 Likert 5단계 척도로 측정하였다.

국정과제 항목으로는 문화융성 분야 10대 과제와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주요업무계획 13개 세부과제에서 중복되는 5개 과제를 고려하여 총 18개 변수들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에 의거,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 과제에 대한 중요도는 5점 만점에 3.92점, 만족도는 2.98점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는 '문화재정 2% 달성(4.39)', '문화참여기회, 문화격차 해소(4.39)', 가장 낮은 중요도는 '국민체감 홍보(3.25)', 'K-Culture로 신한류 창출(3.28)'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정과제는 '생활문화공간 조성(3.25)',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3.25)'이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국정과제는 '문화재정 2% 달성(2.57)', '문화로 일자리 창출(2.75)'로 나타났다.

〈그림 4〉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과제1: 문화재정 2% 달성
과제2: 문화기본법 제정
과제3: 문화참여기회, 문화격차 해소
과제4: 문화다양성 증진
과제5: 문화유산 보존 강화
과제6: 생활문화공간 조성
과제7: 지역별 맞춤형 문화정책 시행
과제8: 예술인 지원
과제9: 인문 · 정신문화 진흥
과제10: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활용
과제11: 문화재 수리 · 관리체계 개선
과제12: 문화로 일자리 창출
과제13: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
과제14: 관광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과제15: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과제16: 문화영향 평가 및 협업 강화
과제17: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과제18: 국민체감 홍보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 관련 국정과제들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변환한 중요도–만족도 분석틀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4분면에 위치시켜 보면 〈그림 4〉와 같다. 이러한 결과를 전략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사분면에 위치한 국정과제는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참여기회 및 문화격차해소, 문화다양성 증진, 생활문화공간 확산, 지역별 맞춤형 문화정책 시행, 예술인 지원 확대, 콘텐츠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화로 분석되었다. 이들 국정과제들은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은 상태라 할 수 있다. '문화참여 확대' 전략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정과제들이 1사분면에 속해 있어, 문화융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전략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사분면에 위치한 국정과제는 문화재정 2% 달성, 문화유산 보존 강화, 문화재수리 · 관리체계 개선, 문화로 일자리 창출로 분석되었다.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이에 '집중'해야 할 상

태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문화재정 2% 달성'은 문화융성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며, 폭넓은 문화예술정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긴급성 측면에서 후순위로 밀려 아직 뚜렷하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 3사분면에 위치한 국정과제는 인문 · 정신문화 진흥,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활용, 스포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문화영향평가 및 협업강화, 국민체감 홍보로,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아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Low Priority) 상태이다. 인문 · 정신문화 진흥 과제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고, 정책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특히 정부에 의한 정신문화 진흥은 인문 · 정신문화의 독립성이나 다양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문화영향평가는 우리나라의 문화기반이 안정되지 못한 실정에서 오히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이념 구도에서 '문화영향평가제'는 환경영향평가제와 마찬가지로 국민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우려가 존재한다.

넷째, 중요도는 낮고 만족도는 높은 4사분면은 관광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K-Culture로 신한류 창출 등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과잉'상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간접 플랫폼 역할만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전문가 집단별 IPA 분석결과에서 교수, 연구원, 공무원 집단에서 동일하게 평가한 각 사분면 과제로는, 1사분면의 경우 문화참여기회 및 문화격차해소(과제3), 문화다양성 증진(과제4), 생활문화공간 조성(과제6)이고, 2사분면의 경우 문화재정 2%달성(과제1), 3사분면의 경우 문화영향평가 및 협업강화(과제16), 4사분면의 경우 K-Culture로 신한류 창출(과제17)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국정과제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2) 국정과제 추진기반 평가

문화융성 국정과제의 체계성

문화융성 관련 국정과제들의 체계성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정기조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가 있는 삶' 간의 연계성과 위계가 모호하며, '행복한 대한민국'과의 관련성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둘째, '문화융성'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3대 전략,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유사한 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전략의 명칭을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어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문화융성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8대 정책과제 중 일부 과제는 문체부 과제와 중복(3개)되고, 일부 과제(1개)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다. 문화융성위원회 과제는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과제와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과제가 공존하고 있다.

추진조직

문화융성위원회는 15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업무가 많은 편으로,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를 네 번 열었고, 매달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과 관련 기관 간 협력, 수시로 이뤄지는 지역문화현장 방문 등도 전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원회 운영지원팀은 총 12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문체부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형태라 정규직원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위원회의 기능, 조직,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이름뿐인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재원

기획재정부가 2013년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문화재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재정을 늘려 2017년에는 정부재정 대비 1.95%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재정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표 2〉 기획재정부 문화재정 2% 확보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문화재정 점유율(%)		1.47%	1.48%	1.5%	1.69%	1.95%
정부재정(조원)	3.5%	342.0	357.7	368.4	384.2	400.7
문화재정(a+b+c+d)	11.7%	50,276	53,144	57,132	65,182	78,138
순증규모			2,868	3,988	8,050	12,956
전년대비 증가율			5.7%	7.5%	14.1%	19.9%
문체부 재정(a)	12.8%	41,048	43,384	47,764	5,149	6,530
문화재청 재정(b)	11.0%	5,848	6,030	6,483	7,410	8,870
미래부 문화분야(c)	4.0%	1,909	2,219	1,556	1,590	1,623
방통위 방송분야(d)	6.7%	1,471	1,511	1,329	1,133	1,115

자료 : 기획재정부(2013),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먼저, 일반적으로 문화재정은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만을 포함하는데, 기획재정부의 문화재정 2% 확보계획에 따르면 미래부의 문화분야, 방통위의 방송분야 예산까지 단순하게 합산만 함으로써 구색을 맞추는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재정 증가율이 '14년 5.7%, '15년 7.5%, '16년 14.1%, '17년 19.9%로 책정돼 있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기 말 2년 동안 문화부 예산을 거의 36% 증액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희박하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문체부 재정(4조 1,723억, 미래부 이관분 675억 포함) 구성은 예산 2조 2,876억, 기금 1조 8,847억이고, 2014년도 재정(4조 3,384억) 구성은 예산 2조 2,837억, 기금 2조 547억 원으로, 국고 예산은 오히려 39억 원이 감액되었다.

특히 2014년도 기금 편성액 1,700억 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고사업들을 산하단체에 이관하고 해당 재원은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문화예술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5]

정부의 문화재정 2% 의지와는 상관없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고갈위기에 처해 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2,395억 원의 기금이 남아 있지만, 매년 900억 원의 기금이 투입될 예정이므로 2017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 후 문체부가 일반회계예산으로 매년 1천억 원 이상 문화예술위원회에 편성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위원회는 국고와 타 기금(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전출을 통한 재원 조성을 요청하고 있다.

거버넌스 체계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은 그 속성상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과 체계성 확보가 중요하며,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여 문화융성 정책을 연계 · 조정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에 집행기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무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문체부의 기능과 중복되며, 국민통합위원회와 달리 인력구성이 범부처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제약이 있다.

또 문화융성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평적 협력체계와 함께 수직적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즉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정책을 만드는 발전소, 각 광역지자체는 송전소, 각 기초지자체는 배전소의 역할을 담당하는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예컨대, 문화예술기금사업비는 2013년 1,094억 원에서 2014년 1,748억 원으로 654억 원, 59.8%가 증액되었으나, 이중에는 문화체육부가 국고 예산으로 추진하다 사업만 이관한 민간 예술단체지원 국고사업 (241.5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 전략과 함께, 전국적인 문화지도를 그리고 각 가정에 문화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재원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지역문화 정책은 많은 재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역문화예산을 배분하면서 사업내용도 정해 배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역문화의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4. 결론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하고,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문화예술정책과 타 정책과의 관계에서 '문화적 관점'이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 정부는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물질적, 기능적 가치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문화예술의 개념 역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으로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문화융성'은 국가주도적, 발전주의적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나 획일주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 문화예술분야 18개 과제에 대한 중요도-성취도 분석(IPA)과 국정과제 추진기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앞에서 요약 제시한 바 있는 몇 가지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발제 1에 대한 토론 1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화는 레토릭(rhetoric)이 아니라 구체적 '실천'이다

한승준 교수의 발제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과 전략을 재점검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 연구로 판단된다. 발제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들과 토론자가 평소에 고민했었던 부분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였다.

국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문화융성이 추상적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국정기조의 하나로 원대하게 시작했던 문화융성의 의미가 지금쯤은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면서 체감되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당초의 계획들이 구체적인 방향성과 전략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책대상인 국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실현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나, 정부는 여전히 문화융성의 궁극적 지향점만 반복했다.

협의의 문화정책과 광의의 문화정책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

문화융성의 정책기조는 문화를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 의도와 가치는 충분히 인정할만하지만 장기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비전과 당장 실천해야 하는 정책은 구분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광의와 협의의 문화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광의의 문화개념을 정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 ·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현실이므로 협의 문화정책에 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화는 개인들이 각자의 욕구를 쏟아내고, 문화정책은 이것을 받아서 구체화하고 가속화하는 것

정부는,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 자발성, 창조성, 내발성, 연대성, 소통의지 등을 가진 개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듣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융성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문화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이 제시되면서, 문체부 업무의 대부분이 타 부처와 협의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문체부의 역량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로서보다는 한계점이 더 부각되고 있다. 이 한계를 문화융성위원회가 해결해줘야 하나 위원회는 또 하나의 문체부처럼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결국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정책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융성위원회가 정책자문의 역할을 한다면 그 자문결과를 문체부가 받아서 정책적으로 실현시키면 될 일인데, 그러한 부분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문제들은 수많은 문제들 중에 단지 소수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발제 1에 대한 토론 2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평가와 미래 정책과제'에 덧붙여

발제문은 그 방법론에서부터 강한 설득력이 있어 현 문화예술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본 토론자는 이견 제시보다는 발제문 제3장을 중심으로 궁금한 점, 좀 더 강조하고 싶은 점 세 가지만을 들고자 한다.

먼저, IPA 응답자 집단을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만으로 한정하였는데, 상세한 설명과 함께 다른 분야 전문가들까지 포함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하다. 국정기조란 모든 정책의 '지붕'일진대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확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음, 문화융성위원회가 범부처적 성격을 띠고 있지 못한 데다 문화 이외 분야 위원이 거의 없다는 데서 그 역할과 위상이 문제가 된다. 또 타 부처 공무원이 위원회에 파견되어 통합적 문화정책 · 행정의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문화를 행정의 각도에서 보면 '문화의 행정화'이고 행정을 문화의 각도에서 보면 '행정의 문화화'이다.[6] '행정의 문화화', '정책의 문화화'를 위해 문화융성위원회뿐 아니라 각급 정부에 부서들을 망라하는 문화분야 횡단 조직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앙정부의 지역대상 문화정책'은 실제에 있어서는 위임사무 성격을 띠게 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위임되는 사업들이 깔때기처럼 아래로 모아지는 지역문화재단은 중앙기관별 상이한 방침의 이행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7]

심하게 말해 지역문화재단은 택배회사인데, 그 역할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버겁다. '(중앙정부 주도의 강력한) 문화정책 서비스 전달체계'와 '(지역 현장으로부터의) 상향식 문화정책 모델'은 일견 모순될 수 있기에 정치한 고민과 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역문화정책에 대하여는 보다 전향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분권 및 문화자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비전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

6 '행정의 문화화'는 행정 스스로가 문화적으로 바뀔 뿐 아니라 모든 행정이 문화적 관점에서 세워지고 전개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는 1970년대 말 일본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7 문화체육관광부를 정점으로 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하는 문화예술정책과 문화복지정책(복권기금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정책의 정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정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예술인복지정책 등이다.

발제 2

문화예술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 · 단체장 경영평가를 중심으로

주효진

꽃동네대 복지행정학전공

교수

1. 서론

30년 이상 진행돼 온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제도와 맥락을 같이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 · 단체장 경영평가는 201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가 5년째로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8]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의 목적은 기관 경영개선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과 노력 및 그 적정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장에게 합리적인 경영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대효과로는 기관의 활동 성과물에 대한 질적 제고로 문화향수의 질적 향상, 공공기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수단 마련, 연도별 점검을 통하여 기관장의 업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학습 기회 제공 등이다.

본 논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 · 단체장의 경영평가제도의 변화과정 및 평가결과들을 제시하고 경영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경영평가의 추진과정 및 평가내용

1) 경영평가 추진경과 및 평가대상 기관장

문화체육관광부는 '09년도에 기타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경영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16개 기타공공기관장과 경영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고, 2010년에 '09년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 실시 등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체육 등 고유한 업무성격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11년 2월에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12년에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지침을 확정하였다.

[8] 평가의 법적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그리고 『문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 · 단체장 경영평가단 구성 · 운영 규정』 등이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기타공공기관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리더십 · 경영효율화 · 주요사업 부문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지표를 대폭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2012년에 '11년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부터 적용하였다.[9]

평가대상 기관장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제외한 기타공공기관장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지정한 법인으로서 경영계약을 체결한 기관 · 단체장이다. 즉 기타공공기관 23개, 민법상 법인 및 공익법인으로 보조금 또는 임면권을 갖는 기관 10개를 평가대상기관으로 하며, 평가기준일('13.12.31) 현재 임명된 지 6개월 미만이거나 공석중인 기관장은 당해 연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2) 경영평가의 내용과 평가유형

평가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 · 단체장의 경영평가는 평가내용과 평가등급을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즉 평가내용은 평가대상 기관장의 리더십, 경영효율화 및 주요사업과제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 규모의 문제가 평가결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평가부문을 간략화 해 경영효율화 부문은 제외하고 리더십, 주요사업과제의 2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등급은 6등급 체제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표 1〉 리더십부문 평가내용

(단위 : 억 원)

부문	평가지표	가중치					
		문화진흥	문화시설	예술단체	심의검사	체육진흥	소규모
리더십	기관장 리더십	10	10	15	10	10	15
	고객만족도	10	10	10	10	10	10
	환류노력	5	5	5	5	5	5
	소계	25	25	30	25	25	30

[9] 2013년에는 '12년도 평가결과와 기관장 성과급을 연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규모 기관 유형 신설 및 평가지표를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표 1〉 리더십 부문의 평가지표인 '기관장 리더십'은 기관장의 비전제시 및 경영전략의 수립과 반부패 투명성 확보, 조직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며, 서면 보고서와 기관장 현장 면접, 직원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활용한다.

'고객 만족도'는 '13년 고객 만족도 조사의 결과와 개선실적을 계량평가하고 고객만족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정성평가 한다. 그리고 '기관의 환류 노력'은 전년도 국회, 감사원, 기관장 평가 결과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표 2〉 경영효율화부문 평가내용

(단위 : 억 원)

부문	평가지표	가중치					
		문화진흥	문화시설	예술단체	심의검사	체육진흥	소규모
경영 효율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조직성과, 인적자원 관리)	10	5	3	7	10	평가 제외
	공정성 제고 노력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 평가체계의 적절성)	5	5	2	13	5	
	전문역량 제고 노력 (홍보노력, 역량제고 노력)	10	10	10	10	10	
	소계	25	20	15	30	25	–

둘째, 〈표 2〉 경영효율화 부문의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는 기관의 핵심역량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절성, 직원 역량강화 노력,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 · 운영 노력 및 실적을 포괄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공정성 제고 노력'은 기관의 핵심역량 수행을 위한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평가체계의 적절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전문역량 제고 노력'은 홍보 노력, 정부3.0 구현, 기관의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표 3〉 주요사업과제부문 평가내용

(단위 : 억 원)

부문	평가지표		가중치					
			문화진흥	문화시설	예술단체	심의검사	체육진흥	소규모
주요사업과제	계획	• 계획수립의 적절성 (소규모 기관 평가제외) • 성과지표의 적절성	20	15	15	10	15	20
	집행	• 시행과정의 적절성 • 문제점 등 대응적절성	10	10	10	10	10	10
	성과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사업 효과성 (소규모기관 평가제외)	20	30	30	25	25	40
	소계		50	55	55	45	50	70

셋째, 〈표 3〉 주요사업과제 부문은 기관장 경영계획서에서 해당 기관장이 제시한 주요사업과제별로, 산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제의 전반적인 추진프로세스를 점검하는 계획(Plan)→집행(Do)→산출/성과(See)의 순환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계획단계에서는 계획수립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집행단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해결 여부,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장의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산출/성과 단계에서는 성과 달성도와 함께 정성적으로 사업 효과성을 평가한다.

〈표 4〉 주요사업과제의 복수 성과지표 평점 예시

주요사업 현안과제 I	가중치	적정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등급
(1) 계량지표 1	35.0%	75.50	보통(B)
(2) 계량지표 2	35.0%	82.50	우수(A)
(3) 비계량지표	30.0%	72.50	보통(B)
계	100.0%	77.05 *	보통(B)

* ① 계량지표 + ② 계량지표 + ③ 비계량지표 ⇒ 평점 = (0.35 × 75.50) + (0.35 × 82.50) + (0.3 × 72.50) = 77.05점

한편, 〈표 4〉 예시에서 보듯 과제별 복수의 성과지표 평정방법은 복수의 계량지표나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계량지표 평가방법과 비계량지표 평가방법을 각각 활용하되, 복수의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각각 반영하여 평점을 산출한다.

평가유형

평가유형은 총 33개의 기관을 진흥기관, 서비스제공기관, 규제기관 등 3개로 구분한 다음, 문화진흥, 문화시설, 심의 · 검사, 체육진흥, 소규모기관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평가유형별 평가대상기관들은 〈표 5〉와 같다.

〈표 5〉 평가유형의 구분 기준과 대상기관

구분	유형	유형구분 기준	기관명	기관수
진흥기관	문화진흥	문화 · 예술 관련 조사연구, 교육훈련, 진흥 지원 등 주로 문화 · 예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정보센터('13년 신규지정), 세종학당재단('13년 신규지정)	8
	체육진흥	체육 관련 진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	5
서비스제공기관	문화시설	공연장, 전시장, 자료원 등 문화시설을 운영 · 관리하여 국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 국악방송, 한국공연예술센터, 한국영상자료원, 예술의전당, 국립박물관문화재단	7
	예술단체	국립예술단체를 운영 · 관리하여 국민에게 공연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는 기관	–	–
규제기관	심의검사	영상물 · 게임물 등급심사 및 저작권 심의, 도핑 검사 등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는 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3
소규모기관	기관 규모를 고려, 기타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립예술자료원, 국립현대무용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극단, 국립극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	10

3. 경영평가의 변화내용 분석

1) 평가지표의 개선

2013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에서 활용된 평가지표체계는 〈표 6〉과 같으며, 2012년도에 비해 두 곳에서 평가지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6〉 평가지표 개선

구분		(개선) 평가지표(2013년)
리더십	❶ 리더십	① 비전 제시 및 경영전략 수립의 합리성 ② 반부패 및 투명성 확보와 소통의 적절성 (⇐ 2012년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적절성')
	❷ 고객 만족	① 고객만족도 개선도 ② 고객만족도 개선 노력
	❸ 기관 환류 노력	①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경영 효율화	❶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① 조직성과 관리 ② 인적자원 관리
	❷ 공정성 제고 노력	① 업무처리과정의 공정성, 객관성 ② 평가체계의 적절성
	❸ 전문역량 제고 노력	① 정부3.0 구현 및 기관 · 주요사업 홍보 노력 (⇐ 2012년 '기관 및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노력') ② 기획/연구/지원 등의 역량/질적 제고 노력
주요 사업	❶ 주요사업 계획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② 성과지표 적절성
	❷ 주요사업 집행	① 시행과정의 적절성 ② 문제점 등에 대한 대응 적절성
	❸ 주요사업 성과	①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② 사업 효과성

2) 소규모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평가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민법상 법인 또는 공익 법인으로 보조금 또는 기관장 임면권을 갖고 있는 기관 10개(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립예술자료원, 국립발레단 등 예술단체 7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경영실적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매년 평가하였다. 하지만 10개 기관의 평균 직원 수가 적고 국고 의존비율이 높아 조직 및 인적자원, 재정 운용 측면에서 매우 영세하며, 특히 기획파트 인력의 부족으로 기관의 부담이 너무 커서 소규모 기관들에 대한 평가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먼저 소규모 기관을 독립평가군으로 재분류하고 '소규모 기관' 평가유형을 신설했고, 다음으로 주요사업 부분을 성과중심 지표 위주로 지표체계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기관이 통제 · 관리하기 어려운 '경영효율화' 평가지표를 삭제하였다.

3)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의 체계화

경영평가를 담당한 평가단의 역할과 위상을 더욱 명확히 함과 동시에 평가단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평가단 구성이 이루어졌다.

첫째, 평가단의 역할을 평가와 자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둘째, 경영평가단의 구성절차 및 기준에서 있어서는 추천 절차를 거쳐 평가 경력 및 업무 이해도 등을 종합 고려하고, 행정 · 경영 전문가와 문화 · 예술 · 콘텐츠 · 체육 등 분야별 전문가로 혼합 구성하였다. 셋째, 평가단은 단장, 총괄간사, 분과위원장들로 구성된 총괄반과 분과위원장과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였고, 서면평가와 함께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최종 평가결과 확정 전 문체부 각 실 · 국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넷째, 전년도까지는 평가결과 '미흡'기관만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였으나, 올해에는 전체 기관에 경영평가 결과 통보 이후에 기관장들과의 질의 및 응답과 함께 전체 기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피드백 기회를 제공하였다.

4. 경영평가의 결과분석 및 논의

1) 평가결과 총괄 분석

평가대상기관인 25개의 기관장 평가결과, 평균 점수는 75.13점(양호)으로 전년도에 비해 5점 정도가 증가하였고, S(탁월), E(아주미흡) 기관은 없으며, A(우수) 6개 기관, B(양호) 12개 기관, C(보통) 6개 기관, D(미흡) 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표 7〉 기관장 평가등급 결과

구분	기관수	평균	점수분포					
			90점 이상 (S, 탁월)	80~90점 미만 (A, 우수)	70~80점 미만 (B, 양호)	60~70점 미만 (C, 보통)	50~60점 미만 (D, 미흡)	50점 미만 (E,아주미흡)
'13년도(a)	25개	75.13	–	6	12	6	1	–
'12년도(b)	27개	70.17	–	3	9	10	3	2
증감(a–b)	–2개	+4.96	–	+3	+3	–4	–2	–2

2) 평가부문별 분석

평가대상기관 25개 전체기관을 평가부문별로 평가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보면 〈표 8〉과 같이 '비계량지표' 중에서는 주요사업 2지표인 집행이 71.52%로 가장 높고, 리더십 1지표인 리더십이 67.9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사업과제' 부분에서는 비계량 평가인 계획 · 집행 단계는 각각 70.41%, 71.52%이지만 계량/비계량 평가인 성과단계(목표달성도 지표)의 평균이 81.31%로서 "우수" 수준(80~90)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평가부문별 분석(전체)

구분	리더십			경영효율화			주요사업			총점(100)
	리더십	고객만족	환류	조직 및 인적자원	공정성	전문역량	계획	집행	성과	
평균(%)	7.42	8.03	3.41	2.80	3.06	2.97	11.27	7.15	23.16	69.28
	(67.90)	(80.33)	(68.23)	(69.04)	(70.73)	(67.02)	(70.41)	(71.52)	(81.31)	
최고(%)	9.50	8.67	4.17	3.67	5.60	3.60	14.71	8.61	31.82	–
	(63.33)	(86.67)	(83.33)	(74.17)	(72.50)	(71.00)	(73.57)	(86.11)	(79.56)	
최저(%)	6.20	7.54	3.10	1.65	1.80	2.10	6.50	6.17	17.13	–
	(62.00)	(75.40)	(62.00)	(67.00)	(58.75)	(72.50)	(65.00)	(61.67)	(82.02)	

3)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첫째, 전년도 대비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상승했고, '양호' 이상 등급은 전체 44.4%에서 72.0%로 증가했다.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리더십 부문의 리더십과 환류, 주요사업 부문의 계획과 집행 관련 평가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전체적으로 고객만족도와 주요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성과의 경우는 아직도 투입이나 과정, 산출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달성이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업의 성과지표를 성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관의 경영성과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기관이 처한 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경영비전 및 전략을 도출해야 하는데, 일부 기관의 경우 경영환경 분석과 전략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넷째, 주요사업에서 성과를 창출하려면 기관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역량의 정의와 구성원의 역량 수준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하에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도 기타공공기관장 및 단체장 경영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장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지정한 법인으로서 경영계약을 체결한 기관 · 단체장 등 총 25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다.

경영평가 결과는 '우수'기관 평가 유공직원 포상, 기관 포상금(1천만 원 이내) 지급 및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기관장의 '13년도 성과급 지급률 통보' 등의 후속조치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영평가가 갖는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평가지표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 사업 목표달성도가 100%이므로, 목표 적절성과 난이도에 대한 뚜렷한 평가기준을 강화하거나 점수 비중을 높이면서 목표달성도 배점은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별 표본수가 200명 또는 공연 당 100명 미만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을 주장할 수 있는 최소표본의 크기(30명)는 넘겼다 해도,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파악한 개선된 고객만족도 모형 및 조사가 필요가 있다.

둘째,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경영관리 시스템을 돌아보고, 사업성과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는 기회, 다시 말해 기관(단체)의 체질, 전년대비 개선사항,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성과의 도출이 어려웠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셋째, 경영평가 이후에 기관장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및 피드백 기회에 대해 기관장과 실무자들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 상황 및 주요 사업성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넷째,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기관장 평가에서 기관 평가로 바뀌면서 모든 기관에 경영평가가 적용된다. 기관 특성에 따라 지표체계와 가중치를 달리하는 등 평가체계를 재설계하고 유형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평가기관 수가 늘어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강화돼야 한다. 또 평가의 공정성 · 객관성의 보장을 위해 모든 과정들이 투명해야 하며,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 제도와 방식의 지속적인 보완 · 개선이 필요하다.

발제 2에 대한 토론 1

오자현 국립발레단 공연기획팀 팀장

'문화예술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에 덧붙여

경영평가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경영평가라는 것을 한번 치르려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게 되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 상황이겠지만 소소한 기록까지 작성해 놓기가 정말 쉽지 않다.

문제는 개량적 성과의 측정은 유료 관람객수 정도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설정할 때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공연회수를 늘려야 하는데 횟수를 늘리면 단원들에게 무리가 가게 되고, 또 진행자가 3명밖에 되지 않아 공연을 꾸려나가기가 버겁다.

발레단에 대한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급여가 많지 않다. 국고지원 70%, 자체지원 30%인데, 매번 공연할 때마다 스태프와 계약하다 보니 나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발레단 입장에서 보면 발레단원의 처우가 좀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발제 2에 대한 토론 2

이석환 국민대 행정대학원 원장

'문화예술기관의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현재의 경영평가체계는 많은 보완이 있어왔고 평가단의 평가역량 또한 꾸준히 강화되어 왔음에도,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평가지표 선정 및 산출식의 확정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단순히 공연예술 관람객 수를 늘리라는 지표는 투입(인력, 예산)에 대한 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어려운 목표일 수 있다.

평가는 학습과정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경영평가의 목적은 각 기관이 스스로 자기 완결형 조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립시키는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며 지표 측정 결과를 가지고 개선을 위해 피드백을 해 나가는 조직의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

경영평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비전, 전략이라는 전문용어가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지다가, 이제는 구멍가게도 비전이 있고 전략목표가 있어야 하는 세상이 되어 구성원들이 이에 대해 학습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문화예술분야에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이러한 시각에서 앞으로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Session 2

문화예술의 가치 제고 및 확산

발제 1 **예술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 vs. 예술의 자율성**

추미경 문화다움 상임이사

발제 2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가 및 문화도시흐름**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문화예술의 가치 제고 및 확산 방안**

이용관 대전예술의전당 관장

신형덕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변지혜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2014 ARKO Cultural Policy Conference

White Paper

Session 2 문화예술의 가치 제고 및 확산

발제 1

예술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 vs. 예술의 자율성

추미경

문화다움
상임이사

1. 21세기, 예술이 기업후원을 받는 이유

– 예술의 사회적 지원의 정당성 그리고, 존재적 궁색함

현대사회에서 문화 · 예술의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들은 예술과 문화가 지닌 공공재적 성격을 파악함으로 시작된다. 특히 1966년 보몰과 보웬은 수지격차와 혼합재라는 개념을 통해 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확산시켰다.

딕 네처(Dick Netzer)는 예술이 사적 이익과 함께 공공적 이익에도 기여하는 혼합재라는 주장을 더 진전시켜 예술의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논의를 뒷받침했다.[10]

이처럼 1970년대 전후에 나타난 문화 ·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긍정적 외부성에 대한 논리들은 모두가 '사회 ·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문화의 가치로, 1980년대에 일어난 문화산업의 열풍은 예술과 문화에서의 시장원리는 더욱 큰 비중으로 다가오게 된다.즉, 문화 · 예술을 정신이나 내면적 에너지의 활동과 연관시키기보다 사회적인 역할과 경제적 기능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으로, 이 경우 예술과 문화의 존재이유는 재화의 유통을 넓히고 그 양을 최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21세기 자본주의 시장원리 속에서 예술은 자신의 공공재적 속성으로부터 정부의 공적 지원 외에 사적 영역(private sector)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을 받는 정당성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예술의 내면적 본성이나 정신적 차원의 문화적 가치는 점차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존재적 궁색함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기업을 통해 사회적 지원을 받는 예술의 딜레마가 시작된다.

[10] 즉 , 특정 예술 지원이 다른 예술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적 효과, 예술이 지닌 실험성으로 인한 실패 가능성과 그 이후 창조적 노력을 위한 지식 제공의 효과, 현재의 예술활동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혜택, 도시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효과 등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패러다임 전개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자선적, 시혜적 차원으로부터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기업이 사회적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장기 비전이나 전략 목표 등과 연계하여 전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11] 즉,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조직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 기업 이미지 개선, 제품판매 기여 등 경영적 차원에서의 부수적 효과도 얻게 되는 win-win 패러다임이 바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사회적 의무, 사회적 반응, 사회적 민감성, 사회문화 개혁의 주체라는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개념으로 확장되기도 한다.[12]

한편,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은 예술기반창조경영이라는 영역으로 확장되어 기업의 내부적 문제를 통합(내지 통섭)적인 접근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으로 설명된다.[13] 기업의 예술기반창조경영은 기업 내부 경영활동과의 연관성과 사회적 니즈(Social Needs) 부합도의 차원에 따라 조직경영형, 마케팅형, 사회공헌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실제 기업들은 이들 유형들 간 융합적인 형태로 예술기반창조경영을 실행한다.

이러한 예술기반창조경영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조직원 개인의 창의성과 열정 촉진, 조직 내 소통의 활성화, 관계 증진과 화합력 증대, 동기부여 등 조직 내부적 문제의 해결, 그리고 브랜드 등 회사의 외적 가치 상승의 세 가지이다.

[11]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하는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 주장한 CSV는 기업의 경영전략이 수익 창출 이후에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활동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주변 공동체의 번영이 상호 의존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개념이다.

[13] 반면에 기존의 예술경영, 문화경영 개념은 외부적이고 개별적이고 간접적이고 자선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예술기반창조경영은 '혁신'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개념들과 차별화된다.

이러한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예술계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지는데, '사회공헌형'은 신진예술가 양성과 예술단체 · 행사 후원으로 예술 발전에 공헌하고, '조직경영형'과 '마케팅형'은 예술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예술가의 역할을 확장시킨다.

예술기반창조경영으로 예술가의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 예술가들은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자부심은 높아질 것이다. 또 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창의성을 증진시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

3. 국내 기업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 확산

국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은 최근 수년 사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메세나협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규모는 1,753억여 원, 후원기업 수는 653개 기업, 후원건수는 1,832건이다.

2012년도는 후원 규모 1,602억여 원, 후원기업 수 566개 기업, 후원 건수 1,358건이었는데, 후원분야별 지원 내역은 인프라 분야 856억 원(54.3%), 문화예술교육 분야 234억 원, 서양음악 150억 원, 미술전시 81억 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은 초기에는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정책에 의해 계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기업의 자발적 문화예술 후원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CSR 활동과 함께 자체 문화재단 설립, 메세나 지원부서 운영을 통해 공공문화 사업을 하고, 조직문화 향상, 조직 내 갈등 해소, 조직원 창의력 개발 등 경영전략 수단으로 문화를 활용하며, 문화 마케팅을 기업 홍보에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공 문화사업은 과거 문화예술행사 지원, 문화 향수 · 복지 지원 위주에서 각종 문화시설 건립, 예술가 육성, 문화예술 교육 등 공적 지원 영역에서 추진돼 왔던 영역 전반으로 확장해 가는 추세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14] 총 100곳의 응답기업 중 문화예술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76곳으로, 지원 장르(복수 응답 허용)는 음악(50), 미술(30), 축제(22), 연극(20), 전통문화(19), 영상(16), 문학(14), 통합장르(12), 무용(10), 기타(9) 등의 순이었다.[15]

이 조사는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관련제도 마련, 전문기관과의 매개 등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대내적으로 재정 확보, 전문 인력 구축, 관리자의 지지 및 인식개선 등 조직내부의 구조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오늘날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제도가 확장되고 있는데, 특히 2014년 1월「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4년 7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4.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서 예술의 위치

오늘날 정부기관 중심의 공공 예술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예술은 공공지원 외에 기업이나 재단, 문화소비자인 국민 개인으로부터 사회적 지원 및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재정적 지원의 차원에서는 보다 유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기업의 사회적 지원의 위상이 커지고 그 문화예술 지원 유형도 장르별, 활동유형별, 공간별 후원 및 공헌 방식으로 다양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점은 예술지원을 둘러싼 환경이 다각화됨과 동시에 불안정성이 자라는 지점이기도 하다.

[14] 2011년 10월 (사)문화예술사회공헌네트워크, 문화체육관광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총 100곳의 기업과 31곳의 기업출연재단을 상대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기업 문화예술 사회공헌 Trend Review 1호』로 발간했다. (편집자 주) 조사대상 기업과 기업출연재단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15]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자료집「2014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96~97쪽을 참조하기 바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 · 방식 · 내용 · 목적, 그리고 추진 상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와 함께, 현재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이 없는 기업의 향후 추진 의향, 희망하는 지원 장르 · 대상 ·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이 약화되는 것은 예술의 존재기반의 뿌리가 약화되는 것인데, 자본주의 시장원리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지원은 언제나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과 기업의 협동관계가 강화되는 것은, 저성장 경제체계 아래의 글로벌 경제구조에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투입 요소가 노동→환경→기술→예술로 변화함에 따라 예술이 마지막 남은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패러다임 변화와도 연관된다. 때문에 기업과 예술의 공생관계는 향후 더욱 긴밀해질 것이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된 예술의 목표는 정신적, 내면적 문화가치보다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 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예술의 사회적 공유가치의 창출로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술은 기업과의 공생을 위해 자신의 공공재적 존재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증명방법은 대체로 경제적인 기준에서의 효용적 성과, 즉 계량적인 접근에서의 가치 확산 성과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스스로의 진정성과 어떠한 목표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가로 부터 예술활동이 성공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었는가에 대한 평가로 점차 이동되면서, 예술가와 예술단체는 외부의 승인과 평가를 통해서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이 되고 있다.

모든 지원체계가 경제적, 사회적 평가기준만을 내세우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이동은 자본주의 시장원리, 기업의 존재방식, 예술의 공공재로서의 존재방식 상 자연스러운 행보이기 때문에, 예술의 자율성이 일정하게 훼손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5. 도구화인가? 상생인가?
– 예술의 자율성과 공공성에서의 긴장과 균형

문화예술을 통한 기업의 전반적 지원활동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예술의 도구화를 강화하고 있는가? 혹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양자의 상생과정을 제대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의 시선이 늘고 있다.

분명, 예술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지원이 강화될수록 예술의 공공재적 사회적 가치는 확산되겠지만 예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자율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자본주의 시장원리 속에서 생존해야만 하는 예술의 자율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술의 자율성은 20세기 예술관의 핵심으로서, 특히 21세기에 예술의 자율성은 분방하게 확장되어 '포스트모던'의 바람이 불어 닥친 뒤 예술은 실로 무제약적인 자율성을 향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술의 자율성은 무제약적인가? 아도르노와 벤야민 등 비판이론가들은 예술의 자율성을 긍정하는 가운데 예술의 사회적 소임을 '비판'에서 찾는다. 삶의 모순을 폭로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삶의 총체성을 회복하려는 열망을 드러낼 때 예술은 진정한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은 예술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기업 이윤을 위한 도구화의 위험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21세기 자본주의 시장원리 하 예술의 사회적 존재기반과 연결되어 있어 당위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예술과 문화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지원이 공공성의 맥락 속에서 전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다양한 사회적 합의, 환경, 그리고 정책과 제도 등이 수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기업의 문화예술 사회공헌에 대한 정책 활성화 및 사회적 강조의 상황이 정부 중심의 공공영역에서의 예술에 대한 공적지원이나 정책추진에서의 공공성 원칙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지점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 환경이 강화되면서 문화정책에서 공공성이 약화되고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쟁력 기준 강화 등이 공공 지원 영역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지원이 성장하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해서 운영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책임운영제도가 도입되고 국공립 예술단체가 민영화 · 법인화되었으며, 그러한 변화를 통해 재정 상으로는 재원의 다변화로 안정적인 운영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원의 다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훼손할 재정 자립이 강요되고, 거기에 국가재정법이 갖는 예산운용의 경직성, 최저입찰제 등의 법과 제도들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공공 영역에서의 공적 지원의 약화, 문화정책에서의 공공성 원칙의 약화 경향과 더불어, 그러한 양보를 통해서라도 확보하려고 했던 기업 등의 사회적 지원은 법인화된 예술기관의 공공성 약화와 더불어 오히려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되어 11년간 법인기관으로 운영되어 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의 법인화 사례를 분석한 한 연구(2010)에 따르면, 세 단체 모두 정기공연 관람료를 2배에서 5배까지 인상했고, 공연 횟수도 줄였다. 시민의 공연예술향수 기회를 뜻하는 공연 횟수뿐 아니라, 특히 예술소외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방공연 횟수가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공연예술 관객층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춘 소수계층으로 고착화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화 10년간 평균 국고 보조율이 하락하여 수익성 위주의 기관 운영으로 바뀌고, 연도마다 변동 폭이 커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워졌으며, 재원의 다변화를 위해 법인화를 추진했음에도 기부금품은 걷히지 않았다. 기부금품이 모집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는 국립공연예술단체의 낮아진 공공성과 국립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신뢰, 그 결과물이 예술 기부에 대한 저조한 관심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16]

[16] 박정훈(2010), 『법인화 이후 국립공연예술기관, 어떻게 변했을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2014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 103~104쪽을 참조

이와 같이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 및 문화정책 공공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예술의 자율성은 점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예술지원을 위한 재원의 다변화의 성과에만 주목하여 기업의 사회적 지원의 강조 속에서 예술의 도구화를 간과하거나, 예술의 가치와 독립성에 대한 균형감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예술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지원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예술의 내면적, 정신적 문화가치의 확산이나 예술만이 가진 비판적 자율성을 균형감 있게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장원리상 기업의 지원은 항상 불안정성을 배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지원에 공공 재원의 부족함을 의존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 지켜야하는 예술의 본원적 가치, 자율적이면서도 비판적인 균형감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원의 지원구조나 문화정책의 틀을 약화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즉, 공공 영역에서 건강한 예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앙 및 지역 정부의 예술지원 철학과 문화정책 공공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다양한 문화관련 법안의 시행령에서 실천적으로 반영되고, 문화현장에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제 1에 대한 토론 1

이용관 대전예술의전당 관장

예술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 vs. 예술의 자율성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내면적 가치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그간의 정책이 중심잡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공공부문의 예술지원과 기업의 예술지원에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집행부분이 두터워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흔들리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해야 한다.

국립예술단체의 공공성 문제에 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다 재단으로 독립되기 이전에는 국립단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예산과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법인화 이후 예산의 규모 등이 커지면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나, 보조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공적지원에서 유럽과 영국지원은 약간 차이가 있다. 유럽의 지원보조율이 2/3 이상라면 영국은 반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 영국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따라서 보조율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발제 1에 대한 토론 2

신형덕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예술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 vs. 예술의 자율성

발제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슈는 다음 세 가지이다.

'예술의 가치'에 대한 다면적 평가의 가능성 : 예술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때에 미적 자율성이 반드시 훼손된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기업이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광고 활동을 유도하는 경우 새로운 형태의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수 있다. 즉 자본주의 시장원리는 예술의 분야와 형태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예술적 가치에 대해 negative sum, zero sum, 또는 positive sum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술에 대한 지원을 하는 주체, 즉 정부와 기업의 차이점에 대한 재고 : 정부 지원이 감소되면 기업 등 사적 영역에의 의존이 심화되면서 예술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확대될 때 역시 예술은 자립 기반을 상실하여 공적 영역에의 의존이 심화될 것이고,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예술활동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예술적 자율성은 마찬가지로 위축, 훼손될 수 있다.

예술의 자율성과 예술의 공공성(또는 공익성)의 '균형'의 의미에 대한 재고 : 예술의 자율성과 공공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적 불확실성은 매 순간 계속되므로 기업 입장에서 예술 지원의 균형점은 항상 변화한다. 또한 일정 부분 시장 원리가 적용될 수도 있는 예술 부문에서 정부가 얼마나 깊게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정부의 입장에서 균형점은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발제 2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가 및 문화도시흐름[17]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중심 글 : 젠트리피케이션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방식:예술가와 바이러스[18]

1. 서론

언제부터인가 '예술가' 혹은 '예술적인' 활동이나 존재가 도시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대표적인 소위 '창조계급'으로 소개되면서 지역재생 정책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도시재생에 있어 이토록 중요한 예술가들이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이후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또 무엇인가?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며 '예술가'의 존재와 도시개발의 목적, 요구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에서 예술가들의 존재가 도시개발을 활성화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전복성'(顚覆性)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행태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어쩌면 예술가들의 도시사회에 대한 반응을 바이러스가 생명체, 특히 인간의 신체에 대해 반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유추하면 오히려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17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상류계급, 신사계급을 뜻하는 gentry에서 파생(gentrify→gentrification)된 말로, 1964년 영국의 사회학자 Ruth Glass(1912~1990)가 슬럼가의 고급 주택화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지방 정부나 기업이 특정 지역을 살리기 위해 재개발 형식으로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젊은 중산층 백인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편집자 주).

18 '중심 글' 앞에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 본 '들어가는 글'과 '참고 : 우리의 지역문화 변화와 문화도시'가 있으나 요약을 생략한다. 자료집 「2014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 105~113쪽을 참조하기 바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2. 바이러스의 정체성

1) 바이러스의 성질

바이러스란 용어는 기본적으로 '전염성 있는 병원(病源)을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것'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생명체 안에서는 마치 생물처럼 복제 · 증식하지만 생명체 밖에서는 무기물로 존재하는 애매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질이 바이러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항상 기생할 수 있는 숙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세포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은 이들을 매우 유능한 '트랜스포머'로 만들어, 무생물에서 생명체, 그리고 공격자에서 창조자로 넘나드는 행태를 보여주게 된다. 특히 '더욱 불안정한' 성격의 바이러스는 '더욱 유연한' 성격으로 인해 환경적인 장애들을 간단히 극복하기도 한다.

2) 바이러스의 행태

바이러스는 복제라는 한 가지 기능에 집착하는데, 에너지를 가진 세포를 공격, 전복시켜 숙주세포를 통해 자신들을 몇 십만 개체로 복제한다. 이에 바이러스의 기능화 행태를 '공격'과 '복제'로 구분하고, 예술가가 도시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위상과 대비하고자 한다.

공격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식물, 박테리아에서 고세균류까지 모든 형태의 유기체를 공격하고 감염시킬 수 있다. 바이러스는 공격당하는 세포의 유전체에 유전자를 삽입하면서 즉시 주도권을 발휘하게 된다. 이 현상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과정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용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이러스 쪽의 수용체들은 숙주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만나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복제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 주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나, 부착 → 침투 → 탈 외피(바이러스 캡시드가 제거되는 과정으로, 바이러스 유전체 핵산이 세포에 의해 풀리는 것)→ 복제→ 방출→ 변이의 기본적인 단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면역체계와 백신

면역체계는 한 생명체를 보호하는 장치다. 이때 직접 침입자를 죽이기도 하는데, 화학적 메신저를 통해 침략 영역에 백혈구를 불러들이거나 모세혈관을 넓혀 공격 세포가 혈류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부기, 부종, 열 등이 발생한다. 생명체가 감염으로부터 한 번이라도 생존하면 그 생명체는 이후 더욱 강해진다. 이는 과거의 항원을 가지고 있는 침입자가 공격을 할 때 증상이 발생하기도 전에 면역체계가 작동하여 처음보다 더욱 빨리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응체계가 바로 백신의 원리다. 그러나 RNA 바이러스 등 몇몇 바이러스는 자체의 불안정성 때문에 단 한 세대 만에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이되기 때문에 이전의 유사 바이러스를 통해 만들어진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어 면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3) 바이러스에 대한 종합

바이러스는 항상 변화하고, 불안정하며, 종잡을 수 없다. 그들은 의존적이며 숙주가 필요하고 함께 숙주에게 침입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정체성은 예술가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체성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술가의 유랑, 이동하는 성격도 바이러스의 이동성과 유사하다. 특히 RNA의 바이러스의 즉흥성, 의외성, 예측 불가능성 등은 예술가의 초기 정체성과 유사하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알 수 없음'은 바이러스의 '공포', 예술가의 '오라(aura) 및 카리스마'로 대비된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가 생명체에 침입하기 위해 수용체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예술이 시민과 공동체에 다가서기 위해 '문화촉매' 기능, 즉 촉매자, 예술교육, 기획자 및 유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면역체계와 백신 관련 내용은 젠트리피케이션과 유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이러스의 공격과 침투, 변화와 변이, 복제와 증식, 백신과 면역체계에 대한 반응의 네 가지 성질을 통해 예술가의 행태를 바라볼 수 있다.

3. 예술가의 역할 및 정의

1) 예술가에 대한 신화와 전설 : 예술가의 정의의 기원

인류 역사 초기에는 예술 자체가 영감, 마술, 주술, 종교의례 등 정의하기 어려운 비논리와 예측하기 어려운 의외성과 즉흥성, 사회 규범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통해 인식되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현대사회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예술적 영감 등의 용어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사회 규범에 종속되지 않는 예측 불가능한 예술가의 초기 정체성은 그들을 무언가 다른 존재 혹은 '신화'적으로 바라보게 했고, 이는 '기존 지식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RNA 바이러스에 대한 인간의 공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예술가를 '장인'(artisan) 개념으로 본 중세 시대를 거쳐 근대 시민혁명 이후 독립적 지위의 쟁취를 통해 카리스마, 자율성, 영감의 존재, 신화의 창조자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예술가/장인의 분리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가의 위상으로 복귀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예술가들은 물론 보헤미안으로 불리며 기존 제도 및 규범과 대응하며 반대급부로 경제적인 지속적 불안정을 가져왔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존 사회와 '다른' 존재라는 인식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2) 사회의 아웃사이더: 현대 예술가의 정의

크리커(Verena Krieger)는「예술가란 무엇인가(Was ist ein künstler?)」(2007)라는 저서에서 예술가를 '영감'과 연관시키고, 이따금 '신과 유사한 창조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속세에 저항하는 '구세주'의 개념으로도 제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19]

마르쿠젠 (Markusen, 2006)은 현대의 많은 예술가들이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작업 행태와 달리, 정치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시각, 공연 작품을 정치적 구호로 활용하고 있어, 기존 사회질서를 바꾸고 사회 혁신의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근대 이후 예술가의 이미지는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혁신 · 혁명의 영감을 부여하는 아웃사이더 역할로서 인식되었고, 일상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세상을 바꾸는, 혹은 다름을 보여주는 존재로서의 성격이 제시되어왔다.

3) 움직이는 예술가

변화와 변이

부르디외(Bourdieu, 1966)에 의하면, '예술가의 존재적 이유(Raison d'être)'는 항상 새로운 변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변화에 대한 지향성을 지닌 전위(前衛, Avant-garde) 세력은 기존에 자리잡은 세력들에 대해 항상 차이를 만들어내어 저항하고 반항한다. 따라서 혁신과 변화의 물결 안에서 과거의 '새로운' 세력들은 항상 과거로 쫓겨나는 운명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으며, 기존 세력을 공격하고 자신을 바꾸어야 생존할 수 있는 예술가들의 운명은 그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바이러스들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

[19] 이러한 개념은 근대에 들어 예술의 정치적 역할과 반응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한다.

이동

예술가들은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 삶과 작업의 적절한 조건을 찾기 위해 잦은 이동을 보여준다. 미국의 예술가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은 대부분 도시 중심 지역을 선호하는데, 그들의 삶뿐 아니라 창조의 자원으로서 더욱 다양한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20] 이러한 이동지향성은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정한 법칙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경우 '환경에 따른 우연성', 예술가의 경우 '영감에 의한 우연성'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비이성적인 공통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공격하는 예술가

예술가의 특성 중에는 기존의 사회 질서 · 규범에 '반대하는', 혹은 '대안의' 혁명적 성격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예술을 통해 '세상을 뒤집기(바꾸기)' 위해 세상을 공격하고 전복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현대는 일상 철학으로서 합리성에 대비되는 비이성 · 비논리성이 새로운 변화와 전복의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오히려 오늘날 사회적으로 기존 질서를 대표하는 논리,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예술가들의 새로운 뒤집기의 가장 강력한 공격 대상일 수 있다.

5) 예술가의 역할 종합

이상, 일상을 변혁하고 이끄는 예술가의 역할과 존재를 부각했으며, 지리적 이동과 가치적 변혁을 위한 이동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기존 관점에서 보면 사회에 순응하고 사회 발전에 긍정적이 아닌 차원에서 예술가들이 인식되고 존재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On the Move'는 예술가들의 지리적 이동을 위해 지원하는 네트워크로서, 그들은 '예술가에게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협력하고 (유럽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국제적인 강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한다.

4.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가

글래스(Glass, 1963)가 처음 사용한 '젠트리피케이션'은 침체된 도시 지역에서 재개발, 재활성화 등의 사업에 의해 기존 주민들이 쫓겨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1960년대 중반 런던에서 중산계층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새로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용되었다.

현대에 이르면서 이러한 과정이 정부내지는 지방정부에 의해-중산계층 소비자들에 의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방세 관련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의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미국 NEA의 연구 결과는 예술가 직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이 가장 높은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술가와 예술적 활동이 자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확대 · 유도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1) 가정

예술가와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가정한 다음, 문헌 분석을 통해 둘 간의 관계 변화 과정을 모델로 삼아 설명해보고자 한다.

(1) 현대 대부분 도시의 사회와 경제는 '과학적 기능주의'와 '자본주의 시장'의 기본 원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2)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은 자연적이든 의도한 것이든 현재 기본적인 시장의 원리와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작동한다. (3) 전위(avant-garde)를 포함한 대부분의 예술가는 경제적인 것을 넘어선 존재와 작업의 가치를 지향한다.[21]

[21] 그러한 가치들은 사실상 장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더라도, 미학적 · 상징적 · 사회적 가치들로 제시된다.

2) 바이러스와 젠트리피케이션

위의 가정에서 예술가의 유입은 바이러스의 공격과 침투로 유추했고, 예술가의 비 일상성과 전복성은 바이러스의 성격과 동일하게 보았으며, 예술가의 지역에 대한 적응과정은 변이, 그리고 다양한 활동은 복제 등과 비교했다. 특히 도시 발전의 기본 원칙과 건강성은 생명체의 그것에 대비했고, 이 모든 과정에서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가정은 '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명체의 면역과정'으로 본 것이다.

3)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 대한 검토 모델

예술가의 존재와 도시사회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모델에서 AB는 A와 B가 같이 이루어지는 초기의 경우, A는 예술가 집단이 자율적인 자신들의 원칙을 추구하는 경우, B는 수동적으로 도시정책에 따라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 하에 놓이는 경우를 가정했다. 기본적인 가정(假定)은 근대 공업도시로 성장한 지역에서 도심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지역 도심의 역사적 지구들이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외부로 이주하면서 저가 임대 공간을 찾는 예술가들이 이주해 오고, 이후 도시정책 차원에서 도시의 재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① AB–1: 예술가의 지역에 대한 유입

도심 공동화와 임대료 인하로 가용 공간들에 다양한 예술가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태는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인 '침투' 및 공격 요인이기 때문이다.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듯 그들은 작업실을 임대하고 로프트(Loft) 스타일 주거지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② AB-2: 예술가들이 군집하며 공동체 형성

예술가들은 기능적인 이유와 실험과 창조를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기도 하는데, 그 극단적 사례가 스콰트(Squart)이다.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젊은 예술가들이 폐 공간을 점유하면서 시작됐지만, 도심 공동체, 예술의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이유로 스콰트이 전개되고 있다.

③ AB-3: 예술가의 도시공동체 진입

자발적인 예술 공동체는 흔히 지역과 연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지역 도시사회에 접근하고 침투하기 위해 지역의 벽을 허무는 구실을 한다. 이는 바이러스가 '탈외피 작업에 의해 숙주세포로 진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그들의 작업에 공감하는 주민공동체를 확산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로 보면 증식 · 복제를 가능케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바이러스의 수용체(receptor) 같은 역할을 하는 문화촉매자, 문화기획자 및 문화활동가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④ AB-4: 공공 정책의 개입

파리의 로베르의 집(Chez Roberts), 국내 문래 예술 공단, 아일랜드의 더블린 템플 바(Temple bar) 사례는 공공이 매우 적극적으로 예술가들의 장기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이들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지구 조성을 촉진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마저 공공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공공의 인정과 개입이 다소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글래스고, 리버풀 등의 사례는 이 단계가 결국은 이들을 활용한 도심 개발과 자본주의 부동산 시장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⑤ AB–5: 도시 시장경제의 작동

바이러스의 경우 면역체계 작동의 기본 원칙은 한 생명체 안에서 타자(他者)와 자신을 구분하는 것인데,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에서도 예술가 유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서로를 파악하게 되고 도시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면역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은 경제적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도시의 촉진제들을 통해 확산되며,[22] 예술가들을 자신들과 요구가 다른 '타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의 면역체계의 작동을 통해 이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⑥ A–6: 자율적인 예술가의 저항

그러나 도시정책의 개입을 거부할 경우,[23] 예술 공동체의 운명은 지역이 계속 공동화되면서 공동체에 기생해야 하는 예술 공동체도 떠나게 되거나, 예술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주민들이 떠난 후 자신들만의 세계로 남는다. 이러한 경우 자신들의 자원으로만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의 지원에 의해 연명하거나 자신들 역시 새로운 상업주의로 흐르게 되는데, 대부분 전 세계의 예술촌(Artists village)들이 이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⑦ B–6: 떠나는 예술가들과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

도시 개발과 정책이 진행될 때 요구도와 입장이 다른 예술가들이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입장과 철학의 차이뿐 아니라 경제적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도시 개발이 진행된 이후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기 유입 예술가들은 비자발적으로 떠나게 된다.

22 도시의 촉진제들의 예를 들면, 지역 언론, 개발 관련자, 지자체장 사무실, 부동산 관련 단체들, 금융기관, 역사보존 지지자 및 관련 주민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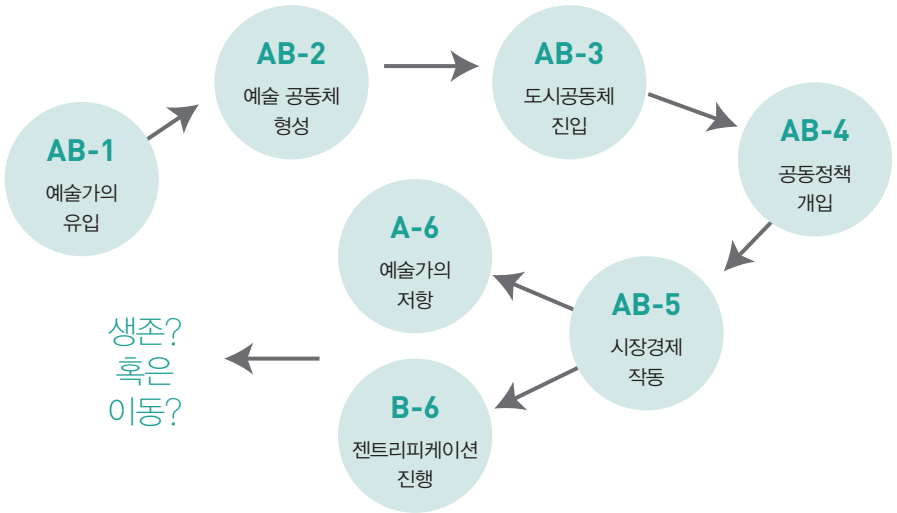
23 파리의 예술 공동체였던 미로아트리(Miroiterie, 2013.12 폐쇄, 간단한 이벤트는 지속하고 있는 상태)의 지도자 격인 크투(Ktu)는 시(市)의 지원과 연계된 개입을 반대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지만 도시는 우리를 구속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면역체계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도시 입장에서는 건강한 – 자본주의 시장 및 도시 개발 입장에서 –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처럼 접근한 예술가가 더 이상 타자로서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 도시 공동체, 기존의 주민(지주가 아닌), 그리고 예술가 모두 이렇게 진행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마치 면역 과정에서 생명체가 발열, 부종, 부기 등 다양한 면역반응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 사회적 피해를 입게 된다.

⑧ B–7: 상업적이고 비싸진 도시, 소위 창조 도시

젠트리피케이션과 함께 유입되는, 예술과 유사하거나 이미지를 본뜬 상업 조직들은,[24] 임대료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도심의 예술가들을 쫓아내게 된다. 유사한(pseudo) 바이러스(즉, 백신)에 의해 실제 유독한 바이러스가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경우다.

[그림 1]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가의 관계 변화



[24] 예를 들면, 고급 카페 및 레스토랑, 유흥업소, 패션 및 디자인 상점, 다양한 팬시 체인점들과 힙(hip)한 문화들

⑨ C: 생존

HIV-1 바이러스 연구 결과는, HIV 바이러스가 사람 간 이동에서 숙주의 면역체계에 의해 유독성을 낮추며, 몇 세대 후 인간에 대한 유해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속적 생존을 위한 숙주와 침입자 간 이해관계에 균형을 맞추려는 자연의 법칙이다. 이의 함의는 자본주의의 극단적 확대와 예술가의 전복적 성격이 정도를 낮추고 균형을 위해 노력할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이 늦춰지면서 예술가의 정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노력과 균형 감각,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5. 다시 바이러스와 예술가,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부르디외는 신진 예술가의 존재가 자신들의 예술적인 생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기존의 세력을 넘을(즉, 전복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격은 바이러스 중에서도 특히 RNA에 더욱 가깝다. 전복적이며 변이하며 게다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해진 논리(DNA 복제 등)를 넘어서는 RNA형 바이러스는 기존의 사회규범과 이성, 논리를 넘어선 새로운 전복을 지향하는, 도전하는 예술가와 유사하다.

〈표 1〉 바이러스로 비교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진행과 예술가의 상황

		도시정책	예술가	바이러스(RNA)
행태		상식, 사회규범, 논리	반순응, 의외, 탈규범	예측 불가, 비정형
지향점, 목적		지역 발전 : 경제, 사회 활성화	전복, 도전	복제와 증식
활동 방식		시장경제, 공공행정	자율적 거주, 창조	기생과 침투, 변이
도시 재활 과정*	**도입**	도시 재활정책 전개	공공정책과 공생 (지원 및 연계)	공생 및 공존
	전개	기반정비, 투자 유도	역할과 정체성 및 경제적 갈등 증가	숙주의 면역 반응에 대응/ 변이
	젠트리피케이션	지가상승, 신규 투자 및 거주 유입, 경제 활성화	이주 및 기존 예술 공동체 붕괴	면역 활동 성공 시 소멸(사멸) 및 이동/변이

수용체를 통해 바이러스는 침투할 수 있고 유사 바이러스인 백신을 통해 바이러스가 퇴치되기 때문에 전체 과정의 흐름에서 이들 '조연'들의 역할이 진행 과정의 열쇠나 다름없다. 이는 예술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용체와 같은 촉매 역할을 하는 기획자와 활동가, 그리고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사 예술가들이 예술가의 유입과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25] 창조계급의 하나인 유사 예술가들이 또 하나의 창조계급을 몰아내는 슬픈 역설이 진행된다.

6.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가에 대해 이 연구에서 거론한 몇 가지 결론을 내려 보면 다음과 같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개발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 도시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하여 당연히 추구하는 도시정책에서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예술가는 도시의 구성원이지만 일반적인 도시의 사회규범, 나아가 시장원칙에 항상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26]

젠트리피케이션에서 예술가의 퇴출은, 엄연한 현실 논리와 정책 진행에서 당연한 결과이고, 현 사회구조와 지향점에서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도시정책에서 예술가를 통한 브랜드화와 퇴출, 상업화를 다소 유보하기 위해 정책과 예술가 집단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고민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5] 유사 예술가들이란, 예컨대 예술적 가치와 유사하게 속게 만드는 오라(aura)를 보여주는 문화 관련 산업(상업공연 예술, 상업디자인, 패션 산업 등)과 고급 카페, 레스토랑, 주점, 명품 숍 등을 지칭한다.

[26] 사회공동체와 예술가의 협력이란 개념은 매우 매력적인 개념이지만 서로의 이해관계의 충족 안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자원으로서 혹 수단으로서 예술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발제 2에 대한 토론 1

변지혜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

예술가들은 변화나 변형을 하면서 예술적 에너지를 만들고 보유하고 활용한다. 이러한 예술적 에너지는 예술정책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모든 시민들을 소외시키기도 한다. 예술가들의 성격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오늘날 예술가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연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도시 안에서 예술가들을 따로 분리해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발제 2에 대한 토론 2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가 및 문화도시흐름"에 대한 토론문

기존의 담론을 도시 재생에 적용한다면 예술가를 쇠약해진 도시공간을 치유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백신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예술가를 오히려 바이러스에 비유함으로써 예술가의 활동이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예술가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체제 순응적인 것이 아니라 전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그 동안 문화정책 담론이 가졌던 편향성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문화정책의 역할이다.

이 글은 백신과 바이러스와 숙주의 삼각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도시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27] 문화정책이 이러한 삼각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성격에 대한 부연(敷衍)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예술가의 사회정치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그 동안 도시재생의 담론에서 예술가들의 기능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경제적인 효과의 측면에서만 예술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술가의 활동이 실제 도시 공간의 가치 상승을 가져왔지만, 그 가치 상승의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된다는 역설적인 사실이었다.

예술가가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오늘날, 이에 상응하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정책의 주요 과제라 하겠다. 도시재생의 과정에서도 예술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함부르크와 베를린의 경우, 예술가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저항을 통해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했지만, 권내 취약계층의 살 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예술가가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하면서 거주민의 살 권리와도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7] 시스템이 쇠약(도시공간이 쇠퇴)해짐으로써 바이러스(예술가의 활동)가 생기고 다시 백신(부동산 자본과 소비 자본)의 개입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된다. 예술가의 바이러스와 같은 활동이 백신과 같은 자본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도시공간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술가가 축출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Session 3

문화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한류 가능성

발제 1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제 전략 연구**

이상빈 한국외대 교수 비교문학과 교수

발제 2 **한류의 변화와 방향: 사회자본적 접근과 커넥티드 플랫폼**

김인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토 론 **문화예술 국제교류의 현황 및 방향성**

송희영 서울예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박종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 과장

김재범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최영호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014 ARKO Cultural Policy Conference

White Paper

발제 1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제 전략 연구

이상빈

한국외대 대학원
비교문학과 교수

1. 들어가며

내년 가을부터 내후년에 걸치는 기간 동안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양국 입장에서 볼 때, 양쪽 문화가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방식은 여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원론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만남은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다양한 이유가 거론될 수 있겠지만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서로 상이한 사회의 작동 기제가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어떻게 편견을 배제하고 양 나라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문화 교류를 구현할 수 있을까?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와 만날 때 현지에 대한 실질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그 방식이 체계적일 때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한국과 프랑스 사회의 상이한 작동방식은, 문화에 대한 국가 개입, 문화 개념에 대한 차이,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 종교와 세속성 – 우파와 좌파, 역사에 대한 담론의 차이 등으로 설명해볼 수 있다. 그러한 차이를 이해할 때 그 접근은 훨씬 전략적인 것이 될 것이다.

1) 문화에 대한 국가 개입

양국에서 문화가 표출되는 방식은 아주 다른데, 프랑스는 우리에 비해 국가 주도의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 정부의 역할이 훨씬 크다. 특히 문화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커서 문화 전달 및 전파가 훨씬 더 용이하다.

프랑스 문화성이 주관하는 행사로는 '문화유산의 날', '독서주간', '음악의 축제', '초청국가', '백야 축제', '파리 플라주', '시인의 봄', '정원에서의 랑데부', '예술사 페스티벌', '유럽 박물관의 밤', '불어 및 불어권 주간' 등이 있다.[28]

[28] 이중 '문화유산의 날(Journées du patrimoine)'과 하짓날 열리는 '음악의 축제(Fête de la musique)'는 각각 유럽적 차원, 세계적 차원(100개국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만큼 세계인의 공감을 사는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에 대한 개념 차이

우리 사회는 미국화로 인해 영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의 획일화가 강조되는 반면, 프랑스는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문화적 예외', '프랑스적 예외', '문화다양성협약'이 모두 프랑스로부터 나온 개념들이다.[29]

언어에 대한 생각 역시 미국과는 차별화되어 있는데, 유럽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다고 간주하면서 유럽연합은 무려 20개 이상의 공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다언어주의를 지지하는 학자들로는 클로드 아제즈(Claude Hagège),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등이 있다.

3)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견지하는 문화적 입장은 보편성의 추구다. 그 어떤 국가보다 지리적인 이점을 보유한 프랑스가 내세우는 입장은 인권, 휴머니즘, 이성, 합리 등의 개념이었으며, 이러한 가치들은 프랑스 문화가 세계인들의 호응을 얻는데 기여했다.[30]

최근 프랑스는 더 이상 보편적 틀을 강조하지 않으며, 예전과는 반대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 경계 바깥에 위치한 억압받는 인물들 이름으로 이야기한다. 또 프랑스에서는 1982년 3월 지방분권화법률이 통과된 후 문화의 지방 분권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언어만 해도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인 프랑스어 외에도 알자스어, 브르타뉴어, 옥시탄어, 바스크어, 코르시카어 등 다양한 언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가 복잡한 정체성으로 무장하기 있기에, 지금보다 더 정교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

[29] 문화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exception culturelle', 프랑스는 미국과 차별화된다는 'exception français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Contents'는 2005.10.21 유네스코 33차 총회에서 합의된 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문화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이다(협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139쪽 참조).

[30] 프랑스가 바라보는 한국 문화는 '주변적'인 동시에 '특수'하다. 문학과 영화의 경우 불교적 가치를 요구하여, 가장 먼저 개봉된 영화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었으며, 소설 〈만다라〉 역시 상당히 일찍 불역되어 소개되었다.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프랑스 시각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문학의 경우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후, 영화의 경우 〈올드 보이〉 이후로,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의 일반화 역시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틀의 변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4) 종교와 세속성, 우파와 좌파

프랑스에서 좌우파의 확연한 구분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프랑스 대혁명 이후 본격화했다고 볼 수 있다. 우파적 가치와 좌파적 가치는 국익과 국가 대 인권과 자유로 표출된다. 프랑스에서는 좌우의 구분에 따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구분이 명확하다. 그러기에 예를 들어『조선일보』,『중앙일보』가 정치와 경제 쪽으로는 보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문화 부문에서는 기꺼이 진보를 표방하는 이런 방식은, 프랑스의 경우 아예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다.

5) 역사에 대한 담론의 차이

유럽은 기억에 대한 담론이 대단히 활성화된 지역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과거가 현재와 호흡하고 있으며, 과거를 현재와 단절된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다양한 기념일과 기념행사를 낳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경우 역사가 현재의 문맥 속에서 재해석되거나 재기술되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정치적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해석 대상으로 생각한다. 프랑스 · 독일의 공동역사 기술, 유럽 공동역사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다.

2. 부문별 프랑스 내 한국 문화 수용 현황

1) 공연예술/연극

거리극의 경우 과천한마당축제는 수 년 전부터 프랑스 작품들 및 인력을 체계적으로 한국에 소개하고 있는 중이다. 거리극 형태는 한국의 소규모 도시 및 마을들이 적극적으로 개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프랑스와의 체계적인 협력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국 콘텐츠를 이용해 걸작으로 만들어낸 공연도 몇 개있는데, 태양극단에서 무대에 올린 〈제방의 북소리(Tambours sur la digue)〉는 한국 사물놀이를 작품 속에 동원한 작품이며, 마상연극인 〈월식(Éclipse)〉 역시 한국 판소리를 소품으로 삽입한 바 있다.

2) 만화 및 애니메이션

한국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우수성은 앙굴렘 국제만화제, 안시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등을 통해 이미 프랑스에 충분히 소개된 편이다. 〈오세암〉, 〈마리이야기〉 등은 안시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앙굴렘 페스티벌의 주빈국이 된 바 있고, 무엇보다도 2014년 앙굴렘 페스티벌은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쟁과 여성을 주제로 내세우면서 한국 위안부 문제를 다룬 만화들을 특별 전시한 바 있다.

3) 문학 및 출판

프랑스 문학 환경이 1950~60년대에 변화한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으로 한국의 문학 역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현재 프랑스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작가들로는 황석영, 이문열, 이청준, 이승우 등이 있다.

한국 관련 서적을 많이 출판하던 레오파르 도르(Léopard d'Or), 쥘마(Zulma) 등을 벗어나 한국과 아시아에 관심을 가진 출판사가 늘고 있으며, 문학의 경우 파리의 갈리마르(Gallimard) 출판사, 지방의 악트 쉬드(Acted Sud)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31]

한국문학 전문 웹진인 '글마당(Keulmadang)'은 5년 전부터 한국문학번역원과의 협력 하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 올해 9월 29호가 나왔다. 데크레센조(Decrescenzo Editeurs) 출판사는 올해 9월 액상프로방스대학과 함께 이승우 작가를 초청해 행사를 가진 바 있다.

4) 미술

상대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특화된 공간이 많다. 자우키미술관, 기메미술관, 세르누치미술관 등은 아시아 미술 쪽으로 특화된 공간들이며, 특히 아랍세계연구소(Institut du monde arabe)가 아시아 미술 전파에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1] 하지만 2011년 기준으로 898개 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일본에 비해 한국 번역 작품의 숫자는 아직도 극히 미미한 편이다.

최근에는 파리 및 지방에 한국 화랑들이 개설되었으며, 주요 공간에서 한국 미술가들이 작품전을 가지는 기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방 화랑으로는 클레르몽페랑 소재 아리랑 갤러리가 있다. 이우환 작가는 올해 베르사유 궁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5) 방송

프랑스 TV를 통해 소개된 한국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드라마의 중요성을 인정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 부문이기도 하다. 각국의 차별화된 기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프랑스에 상륙한 것은 K-pop 붐에 뒤이은 2012년부터이다. 〈드림 하이(Dream High)〉가 케이블 및 위성방송인 공(Gong)을 통해 이미 방영된 적이 있지만, 지상파 카날 플뤼스(Canal+)를 통해서 처음 방송한 년도가 2012년이다. 현재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수천 명의 청소년 팬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성인들도 한국 드라마에 심취해 있다. 프랑스인들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 배우들의 연기, 정교한 시나리오, 등장인물들의 불행이 보여주는 감동적인 내용 등이다.

6) 언론(신문 & 잡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 『쿠리에 앵테르나시오날(Courrier International)』같은 매체는 제3세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의 뉴스도 자주 소개하고 있다. CI의 경우, 대륙별로 섹션이 나뉘어져있어 미국이나 일본 신문에 수록된 한국 관련 기사를 싣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의해 여과된 한국 관련 내용을 프랑스인들에 접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 유력 잡지에 한국이 중요하게 취급된 경우는 거의 없다.

7) 여행

『GEO』는 한국을 특집으로 다룬 경우가 한 번도 없다. 미슐랭 시리즈는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2011년 4월 출간했으며, 식도락 가이드북『미슐랭 레드』가 한국편 출간을 고려중에 있다. 프랑스 쉐프들의 한국 방문도 빈번해지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

한국의 K-Pop 관련 프랑스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그룹은 샤이니로 간주되는데, 이는 프랑스 작곡가에게 음악을 의뢰하는 등 유럽시장을 공략하려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전략 덕분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을 다루는 공식 및 비공식 홈페이지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K-pop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올수록 프랑스인들의 한국에 대한 자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은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9) 영화

프랑스에서 가장 호평을 받은 영화는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Printemps, été, automne, hiver… et printemps)〉, 봉준호의 〈마더(Mother)〉, 〈설국열차(Snowpiercer)〉 등이다. 한국 영화에 관심을 가진 대중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동안 퐁피두센터에서 열린 한국영화제, 도빌 아시아영화제, 낭트 영화제 등이 한국 영화를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한 축제들인데, 퐁피두센터 한국영화제는 한국 영화 자료집을 만들어 한국 영화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32] 파리 한국영화제는 올해 제9회를 맞이하여 2014.10.28~11.4 ublicis Cinémas(133 av. des Champs-Élysées 75008 Paris)에서 열렸다. 작품성을 중시하는 유럽 및 프랑스 분위기에 걸맞게,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한국 감독은 이창동, 홍상수, 임상수, 봉준호 등이다.

[32] 한국 영화를 소개하는 영화제들이 다수 열리고 있는데, 파리 한국영화제(**FFCP : Festival du film coréen à Paris**), 스트라스부르 한국영화제, 루앙 아고라 한국영화제(**Agora du Cinema coréen à Rouen**)(제9회, 2014.11.18~22) 등이 대표적 행사들이다. 일부 평론가들은 한국 영화에서 빈번히 드러나는 '폭력성' 문제를 주목하기도 한다.

10) 음악

아시아 쪽으로 특화된 행사는 없지만, 미뎀(Midem)은 프랑스가 세계 음악의 중심이고자 칸에서 마련한 행사다. 2015년 행사는 6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데, 이 행사를 통해 한국 전통음악 및 대중음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프랑스에서 열리는 다양한 월드뮤직 관련 축제를 주목할 수 있다. 생-나제르(Saint-Nazaire)에서 열리는 '레 제스칼(Les Escales)'(2014년의 경우 8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열렸다), 아를(Arles)에서 열리는 '레 쉬드(Les Suds)'가 대표적인 축제들이다.

3. 효과적인 접근방식

1) 유관기관의 활용

- 지한파의 양성과 지원 : 한국어과가 있는 파리3대학, 파리7대학, 리옹대학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세종학당, 한글학교 등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다. 도서 지원이나 한글 백일장, 한국 음악의 밤, 한국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볼 수 있다.

- 대사관, 문화원, 한글학교의 활용 : 한 · 프 문화 교류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문화부는 분야별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며,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문화원은 협소한 공간부터 해결해야 한다.

- 프랑스어 자료의 발간 배포 :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불어권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 그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프랑스어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느낌이며, 관광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여론 주도 기관과의 협력 : 콜레주 드 프랑스, CSA(방송위원회), INA(국립시청각연구소), 국립

도서관 등 영향력이 큰 기관들과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매체들과의 협력을 위해 각 매체의 속성, 관심사, 주력 부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33]

- 학교 간의 협력 증대 : 교육 협력을 통해 유럽의 다양한 가치가 국내에 소개되고 한국의 의미가 유럽에 부각되는 방식을 추구해볼 수 있다. 그 경우 국제학술대회 개최, 공동연구 출간, 인력 교환 등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론될 수 있다.

- 기업의 지방 축제 지원 : 프랑스의 각 축제에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스폰서 역할을 떠맡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 축제의 지원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업에 의한 인적 교류의 지원도 좋은 방식이다.

2) 시간적인 고려

- 축제를 비롯한 행사의 활용과 지원 : 대기업이 비슷한 성격의 축제 간 협력을 지원하여 한국과 프랑스를 엮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타투 페스티발의 경우 국악기로 켈트음악을 연주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양국의 문화적 역량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기회다.

- '외국문화주간' 등의 활용 : 클래식, 대중문화, 월드뮤직 등 분야별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총괄, 정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외국문화주간'과 낭트에서 열리는 '한국의 봄' 행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프랑스가 시작한 행사의 개최 : 프랑스가 먼저 시작한 후 유럽 및 세계 각국이 도입한 행사를 한국에서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 하짓날 열리는 '음악의 축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전 한국 청계천에서도 열린 바 있는 '패트릭 데이' 행사는 단 1회로 끝났다.[34]

---

[33] 프랑스 문화를 다룬 학술지의 지원, 학술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올리고 있는 Fabula 같은 사이트와의 협력, 문화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예술 쪽과의 협력도 모색해볼 만하다.

[34] 단발성 행사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프랑스영화제', '유럽영화제' 등이 모두 몇 회를 넘기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 '파리 플라주'의 모방 행사 역시 단발성으로 끝났다

• 융합적인 문화행사의 개최 : 문화가 정신의 일부인 탓에 융합적인 행사, 예컨대 사진+영화, 패션+음식 등은 아주 바람직한 결합이다. 융합적인 행사의 경우 한국의 전통 패션, 식도락 등 우리의 전통문화가 다양하게 동원될 수 있다.

3) 공간적인 고려

자매결연(ville jumelée)

성격이 비슷한 도시끼리의 자매결연은 가장 바람직한 방식 중 하나이다.[35] 자매결연의 목적은 선진국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축제 운영의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것이며, 프랑스 중앙정부가 각 지자제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역시 주도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자매결연을 추진할 경우, 도시 및 마을의 특성과 개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낭트에서 매년 열리는 '한국의 봄(Printemps coréen)'은 그 지역이 한국 출신 입양아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들인 결과이다. 가장 유의미한 한국 문화 관련 행사이고, 그 수준도 높다.

권위 있는 기관들과의 협력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학술의 경우 CNRS와,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교환은 ARTE, 자료 교환은 INA와, 미술의 경우 국립박물관협회와, 영화 쪽으로는 MK2, ARTE 등의 매체와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Esprit』, 『Le Débat』 등 학술지, 『L'Express』, 『L'Evénement du jeudi』, 『Le Point』, 『Le Nouvel Observateur』 등의 시사월간지들이 정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며, 매체별로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 선별 제공하는 것이 좋다.

[35] 예를 들어 거리극 축제에 주력하는 과천이나 안산은 오리약(Aurillac) 혹은 샬롱–쉬르–손(Chalon-sur-Saône)과, 인형극 쪽으로 특화를 도모하는 춘천은 샤를르빌–메지에르(Charleville-Mézières)와 협력할 수 있다.

인력 풀의 활용

양국의 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담당할 인력은 한국의 경우 민관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대단히 큰 국가적 손실이다. 일본에서 4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르몽드』특파원, 최고 권위의 중국통 등이 프랑스 외교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국가수반의 해외 순방 시 정치인과 경제인이 동행하는 우리와 달리 프랑스는 저널리스트가 동행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례다. 학계와 관계, 학계와 방송계가 분리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방식이다.

한국계 프랑스인들의 활용은 주목해야할 방식이다. 플뢰르 펠르랭의 프랑스 문화부장관 임명은 그 어느 때보다 양국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한불 커뮤니티(Communauté Franco-Coréenne) 등 입양자들의 활동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교류를 방해하는 장애물들 제거

지역코드 문제는 숙제 중 하나다. 예전에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NTSC, PAL, SECAM로 나뉘어 있던 방영 방식은 현재 지역코드의 차이로 이어졌다. 한국은 지역코드 3으로 분류되어 동남아와 함께 묶여 있으나, 사실상 우리 문화에게 유익한 선택은 아니다. 지역코드 0으로 제작되는 DVD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역코드 3은 유럽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업체와의 협력 하에 지역코드를 푼 기기들의 출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한국 무대를 장식한 〈명성황후〉, 〈영웅〉 등의 주요 공연들을, 정부가 나서서 지역코드 0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쪽에 한국 영화는 상당히 소개되는 편에 비해, 연극이나 국악 자료, 뮤지컬들은 출시된 것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기업의 역할 증대

프랑스 문화행사에 대한 한국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일본의 경우 문화의 집 건설, 문화재 개보수 지원, 축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프랑스 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예술가 레지던스 마련과 창작 지원도 호평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한국을 위한 공간의 확보

프랑스 전체를 조망할 때 한국 문화를 위한 공간은 거의 없는 편이다. 새로 생기는 시테 앵테르나시오날 한국관 내에 문화공간을 별도 설치하고, 거기서 다양한 공연을 마련하는 방식을 강구해볼 만하다. 현재 세계의 문화를 집중적으로 프랑스에 소개하는 공연장인 테아트르 드 샤틀레(Théâtre de Châtelet), 테아트르 드 라 빌(Théâtre de la Ville)을 효과적으로 대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한다. 한국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영화관의 확보 또한 필요하다.

4. 나가며

아프리카로의 진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프랑스가 확보하고 있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앞으로 양국은 협력할 일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발제 1에 대한 토론 1

송희영 서울예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문화교류 vs 문화외교

본 토론자는 발제문을 통해 문화교류 활동이 이제는(단지 프랑스만에 해당되는 것을 넘어서) 국가 홍보 차원의 정치적, 외교적 범주에서 벗어나 하나의 '완성된 문화기획'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읽을 수 있었다.

발제자께서 해외(프랑스) 시장을 겨냥한 우리나라의 문화상품 수출에 앞서서 상대방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문화콘텐츠 기획과정에 비유하자면 사전기획단계, 즉 '프리프러덕션'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교류는 하나의 문화예술 창작품이 소비, 유통되는 기획과정의 최종 단계라는, '문화기획의 연장선' 개념에서 출발하여, 그에 적합한 예술장르 및 교류 영역별로 보다 세분화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발제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질문 및 논의사항

발제자가 국가의 역할을 비교 우위로 설정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주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교류에 있어서 문화외교와 문화교류의 개념적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교류에 국가가 개입하여 외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이미지를 미화하거나 특정한 목적성과 고의성을 띤 인위적인 조작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 주도의 문화교류가 초래할 폐단 혹은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문화교류가 국가브랜드 차원의 문화외교여야 할지, 문화산업 관점에서 글로벌 마켓 활성화를 위한 민간 문화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조성을 지원하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지, 이와 같은 이분법적 접근이 잘못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의 예술콘텐츠가 프랑스 예술창작품 속에 융합된 사실은 고무적입니다만, 우리 단체와 외국 단체가 대등한 관계에서 치밀한 기획과정을 거쳐 공동으로 협업하는 '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국제교류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선심 쓰듯 '한국적 조미료'를 작품 사이사이에 뿌려주는 것을 고마워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제문화교류는 파편적 요소나 특정 장르의 전파를 넘어 양국의 문화 정체성을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는 예술성이 기반이 된 교류를 지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발제 1에 대한 토론 2

박종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 과장

한류의 진화 : 수출에서 교류로

현황 및 배경

중국, 일본 및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한류를 문화상품의 일방적 수출로 이해하고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문화(산업)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일부 소비자들은 혐한 · 반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2011년 KOTRA의 조사에 따르면 한류는 한국의 인지도 상승에는 기여하지만, 선호도나 매력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한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예술의 쌍방향 교류를 한류 지속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류 1.0 영화 · 드라마 중심 ⇒ 한류 2.0 K-Pop 중심 ⇒ 한류 3.0 K-Culture(한국문화 전반)

한류 3.0 관련 주요 키워드

- 문화권역, 해당국가 발전정도, 한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류전략 설정
- 문화교류 대상층을 오피니언 리더와 일반인으로 구분, 대상별 맞춤형 교류 추진
- 콘텐츠, 문화예술, 생활문화, 한국어, 태권도 등이 융복합된 다양한 한류로의 전환
- 적극적 문화교류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비대칭적 문화교류의 전략적 추진
- In-bound 문화교류 추진으로 한국 문화의 다양성 확보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세부 실천방안

- 인력 교류와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해서 쌍방향 교류 확대、강화
- 재외 문화공관의 확대와 기능 활성화
- 아시아 문화교류 강화를 통한 아시아 문화공동체 실현
- 문화 ODA 활성화로 문화한국의 위상 강화
- 국제행사의 적극 활용과 문화교류 중단기 계획수립

발제 2

한류의 변화와 방향 : 사회자본적 접근과 커넥티드 플랫폼

김인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기술과 시장은 서로를 변화시키며 공진화(coevolution)한다.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양식과 매체에 변화를 가져왔다. 매체의 차이는 한류의 수용층과 수용방식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의 형태와 확산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한국 대중문화 확산은 국내 제작사에게 저렴하고 효과적인 홍보기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을 형성하는 '플랫폼(platform)'들-SNS(Social Network Services)를 제공하는 웹 기업들, 음원제공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시장에서 플랫폼은 다양한 영역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때론 한류의 지원세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하에서 한류 중에서도 '디지털화된 콘텐츠'에 한해 그 특징과 나아갈 변화와 방향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2.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과 커넥티드 플랫폼(Connected Platform)

디지털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거의 모든 산업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며 급진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연결'(connectedness)로, 이는 산업들 사이에 경계가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변화의 중심에는 이전에 분리되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해 왔던 세 가지 네트워크, 즉 '유무선 통신망,' '방송망,' 그리고 '인터넷망'의 통합이 있다. 이들에게 '호환성(compatibility)'을 부여한 것이다.

통합을 위해서는 네트워크들을 하나로 묶을 '공통의 연결방식'이 필요한데, 이는 플랫폼에 초점을 둔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플랫폼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interface)를 포함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하이테크 제품들은 개별적인 기능을 통합하면서, 레고처럼 모듈화(modularity)된 시스템적 특성을 갖는다. 이때 플랫폼은 시스템에 모듈들을 담기위한 접착제와 같다. 따라서 플랫폼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 있는 모듈들을 필요로 한다.

콘텐츠와 애플리케이션 같은 보완재는 플랫폼을 유용하게 만드는 핵심 모듈이 되어왔다. 방송망, 인터넷망, 통신망의 결합을 의미하는 '디지털 융합'과 이러한 '문화 모듈화'는 콘텐츠 시장 내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연결고리를 탑재한 '커넥티드 플랫폼'을 등장하게 하였다.

커넥티드 플랫폼의 진화란 콘텐츠 영역을 넓혀가며 그 가치를 증대하는 것으로, 이미 통신 플랫폼은 세대를 거듭하며 음성에서 문자로, 그리고 멀티미디어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 통화품질과 전송속도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YouTube나 Facebook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개인이 콘텐츠 편집과 합성을 통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타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들과의 '연결'을 통해 '공유'가 즉각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렇다 보니 디지털 융합에 따른 네트워크 경쟁의 진화과정은 '플랫폼의 끊임없는 진화과정'으로 묘사될 수 있다.

특정 플랫폼의 출현은 네트워크의 지형을 바꾸고, 이는 또 다른 플랫폼의 진화를 촉발시킨다. 즉, 살아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지형에 맞춰 다시 변화하거나, 지속적으로 대중이 모이는 플랫폼에 연결고리를 매어두어 유저(user)의 유입경로라도 확보해야 한다. 한류 역시 이러한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공진화적 연쇄반응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한다.[36]

[36] 단순히 우리의 콘텐츠가 타 국가의 그것보다 뛰어나게 우수해서라는 관점은 매우 편협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자본과 문화 콘텐츠

사회자본과 신한류 현상 사이에는 소셜미디어가 존재한다. 흥미롭게도 2002년부터 인구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로 정의되는 인터넷 보급률이 사회자본지수를 측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쓰이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은 사회 구성원 간 대화와 교류를 촉진시켰고, 시차와 지역적 제한을 완화시켰으며, 공동 모의를 통해 집단행동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매끄럽게 한다. 또한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허물고 소외계층도 주류 문화예술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기반을 제공했다. 이러한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는 인터넷의 보급과 소셜미디어 영향으로 가속화 되고 있으며, 신한류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주류가 주목을 받은 문화민주주의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은 미시적으로는 수평적 구성원 간의 관계를, 거시적으로는 수평적, 수직적 관계를 모두 포함한 사회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사유재와 공공재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37]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TV와 인터넷은 사회자본 형성을 촉진시키는 플랫폼의 하나로 볼 수 있다.[38] 둘 다 시청각적 경험과 가상현실(virtual experience)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개인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타 구성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유된 경험을 토대로 실제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다.

[37]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은 '구성원 간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일체의 무형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자산이란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볼 수 있는데, ① 구성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뢰, 호혜, 존중감, 협력, 연결망, 멤버십과, ② 사회적 구조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가치 및 규범, 시민의식,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 사회공정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8] 그러나 퍼트남(Putnam, 1995) 같은 학자는 수년간 계속된 미국사회 내의 사회자본 감소로 시민의 사회참여 저하와 함께 미국 시민사회의 붕괴를 경고했다. 그는 과도한 TV시청을 주범으로 지적했는데, 과도한 인터넷 사용 역시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시민의 사회활동 참여를 저하시킨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즉, 경험은 사회자본 중 하나인 신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개인들의 관계를 촉발, 유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미디어를 통한 경험의 공유는 사회자본의 한 하위차원내지는 사회자본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험공유 연결망은 보다 많은 사람들,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 위력이 강해진다.

그러나 사회자본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k-pop으로 토론의 범위를 좁혀본다면, 강력한 팬덤으로 뭉친 팬클럽 멤버가 자신이 추종하는 연예인을 조직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스토킹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소위 '사생팬'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사회자본의 형성은 개인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집단 멤버간의 네트워크와 호혜(reciprocity)를 통해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집단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사회 갈등해소와 시민사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신한류 개방형 사회자본의 예로 새로운 팬 문화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스타의 콘서트에 불우이웃을 위해 쌀 화환이나 연탄화환을 보내고, 함께 사회봉사를 떠나며, 모금운동을 통해 해외난민이나 국내 장애아동 및 결식아동 돕기 등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사회자본은 구성원 간의 교류를 통해 집단행동으로 옮겨지는 바이러스적, 전염적 특성이 강하다. 인간 대 인간에서 집단으로, 집단이 커지면서 시스템을 내포한 조직으로, 조직에서 방대한 스케일의 공동체인 국가나 국제조직으로 점차 발전하는 유기적 성격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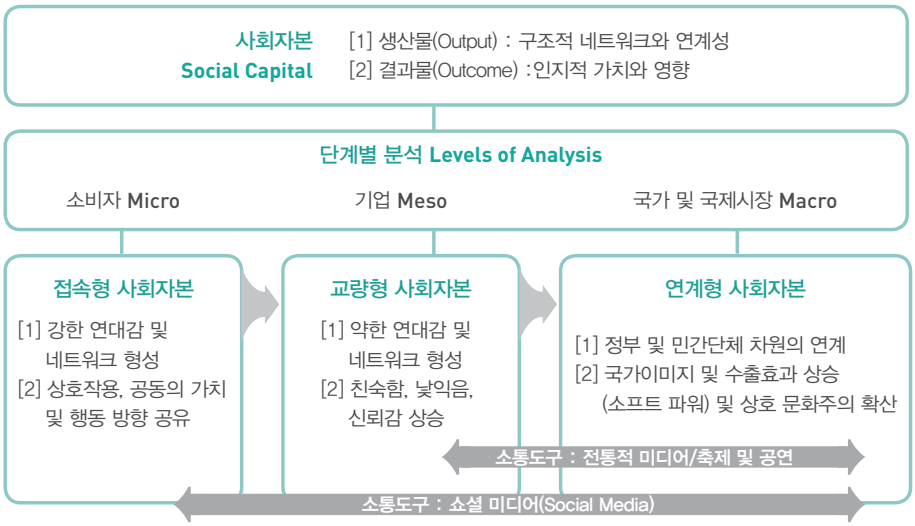
이러한 특성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결속형(bonding) 사회자본 그룹인 팬클럽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점조직으로 산재해 있는데 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강력한 결속형 사회자본으로 발전이 가능하다.파리 한국문화원 중심의 '코리안 커넥션(Korean Connection)'이라는 자발적 프랑스인 집단이 한국 대중가수 콘서트를 기획하여 문화원의 도움으로 SM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한국관광공사 예산이 지원되어 초기 계획보다 더 큰 규모와 관심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수직, 수평 구조를 가진 여러 집단(점조직의 팬 층), 기업(기획사), 국가기관(한국문화원, 한국문화관광공사) 간 협력을 통해 결속형이 교량형으로, 교량형이 연계형 사회자본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는 예이기도 하다.[39] 프랑스 현지 팬들은 k-pop이라는 문화상품을 통해 한국의 문화생산자 및 정부와 소통하게 되었다.

이렇듯 연계형 사회자본은 'top to bottom'이 아닌 'bottom to top'이 실현될 때 그 지속력이 더욱 강해지고 공동의 가치형성(문화상호주의, 문화민주주의)이 실현된다. 결국 소셜미디어는 한류의 결속형 사회자본을 교량형, 연계형으로 계속 발전시켜온 엔진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은 각 단계에서 사회자본을 강화시키는 전통적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역할, 각 단계의 결과물(outcome)과 생산물(output)을 설명한 것이다.

〈그림1〉 문화컨텐츠 산업의 한류와 그에 따른 사회자본 형성과정



〈그림 1〉 하단에서 볼 수 있듯이, 소셜미디어는 모든 단계에서 신한류 현상을 지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이다. 신한류 현상에 있어 교량형 또는 연계형 사회자본은, 결속형 사회자본이 형성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생성되어 질 수 없는 사회자본이기 때문이다.[40]

[39] 결속형, 교량형, 연계형 사회자본은 각각 자발적이며 공동된 소비자(Micro Level) 단계, 기획사 또는 기업(Meso Level)이 더해진 단계, 국가 및 국제시장(Macro Level)의 단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을 말한다.

[40] 그러나 결속형 사회자본의 형성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소셜미디어라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우리의 현 콘텐츠 산업 주소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 한류의 변화와 방향

소셜미디어는 세계의 한류 팬들을 결속하고 소통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팬클럽 내에 형성된 결속형 사회자본은 생산자와 공급자라는 새로운 관계의 도입으로 교량형 사회자본으로 발전되었으며 이는 느슨한 형태의 연대감을 지닌 네트워크를 생성했다.

소셜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수용층은 빠른 속도로 글로벌화되고, 수용방식은 자생적 · 능동적이 되었다. 유통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된 3자간 시장을 통해 이루어졌고, 주된 수익은 SNS나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판매하는 웹 기업들을 통해 발생했다. 이는 다시 말해 신한류의 홍보와 판매가 대부분 해외 기업의 플랫폼에 의존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한류를 플랫폼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3.0세대의 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녹록치 않다.

기능과 장르가 이미 세분화된 거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 사이에서 한류만의 디지털 콘텐츠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제작 · 가공하고 키워내는 것은, 시도는 할 수 있겠으나,[41] 그 성공확률은 매우 적다. 사회자본을 확장시키는 접착제인 연결고리의 부재 때문이다.

싸이월드는 미국진출에 실패했고, 네이버에는 영어나 중국어 버전이 없다. 사회자본을 통해 형성된 팬덤과 호혜, 관심, 공통된 규범 등을 기반으로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할 플랫폼을 생성하려면, 거대 소셜미디어와 한국의 대표 플랫폼 간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YouTube에 영어, 중국어, 일어 등 해외 팬을 위한 언어지원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공유기능 및 기술의 호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단순 링크만 연결된 것이 아닌 문화적 · 언어적 도구들이 '연결된' 커넥티드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41] 영화는 Netflex, 방송물은 Hulu, 동영상은 YouTube, 그리고 복합적인 공유기능을 제공하는 Facebook 등이 이미 점거했다.

거시적으로 한류 디지털 콘텐츠의 미래는 커넥티드 플랫폼 개발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연계가 가능하며, 해외사용자와 국내사용자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개발 또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콘텐츠시장에서 해외진출 시 고려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따른 시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시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인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을 보완하는 엔진기능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발제 2에 대한 토론 1

김재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한류에 대해서 그 동안 논의가 많았는데, 얼마나 진도가 나갔는지, 그 방향성은 제대로 잡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 k튜브 같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k튜브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플랫폼 안에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본다.

발제 2에 대한 토론 2

최영호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류의 변화와 방향에 대한 토론문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챠트 2위에 오르는데 국내 플랫폼의 역할은 없었다. 제조업의 경우유통이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상품 자체의 경쟁력인 것과 마찬가지로, 콘텐츠산업도 기술 또는 유통의 측면보다는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이 우선돼야 한다.

한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새로운 국면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이제 한류는 지역적인 한계를 탈피하고 있으며, 장르적인 부분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변화로 인해 향후 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려면 유통 부분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한류가 당초 문화적 요소보다는 산업적 요소로 출발하여 문화적 부분이 취약하다는 비판은 수용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콘텐츠 제작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즉 해외수출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작비 면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화적 부분이 간과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지난 5년간에도 한류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고, 성장하고 있다. 논의 되어야 할 점은 오히려 한류의 성장으로 타 산업이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그 수익이 콘텐츠산업으로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콘텐츠산업만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보다 타 산업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큰데, 아직도 대부분 사람, 특히 의사결정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도 제조업 마인드여서 두 산업이 시너지를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싸이월드 등 국내 포탈들은 해외진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한류를 소개하는 포털은 오히려 야후와 같은 해외 포탈이 더 적극적이다. 생태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유통부분의 해외 진출은 콘텐츠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플랫폼의 개발이 향후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콘텐츠와 유통을 구분하여 각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생태계 상호를 경쟁력 있도록 만들어 둘 다 Win-Win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Session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융성 정책

발제 1 **창조적 문화도시 디자인을 위한 지역문화융성 정책 방향**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2 **문화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에서의 새로운 전략 모색**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토 론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문화융성 정책**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박호재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 실장

김광욱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성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14 ARKO Cultural Policy Conference

White Paper

발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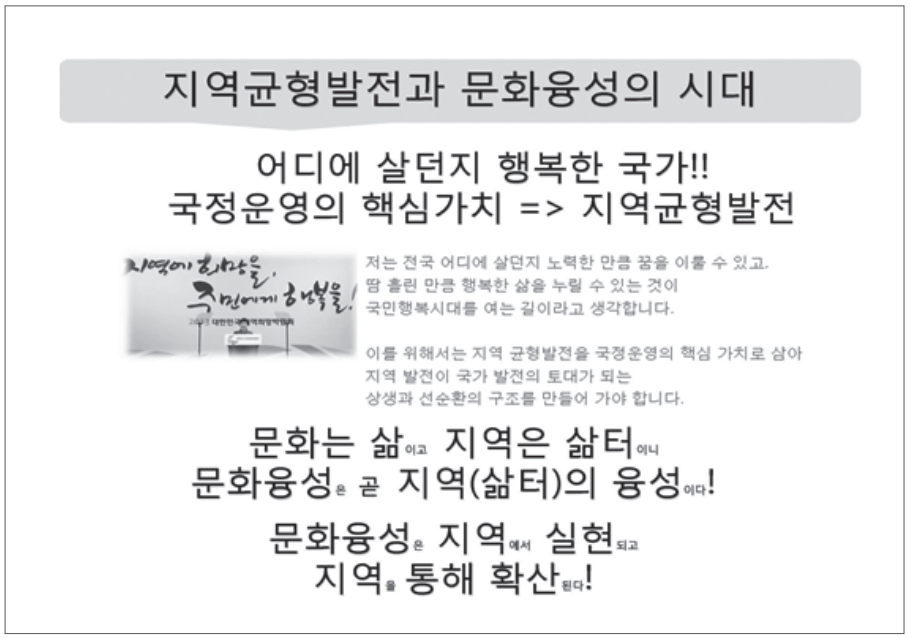
창조적 문화도시 디자인을 위한 지역문화융성 정책 방향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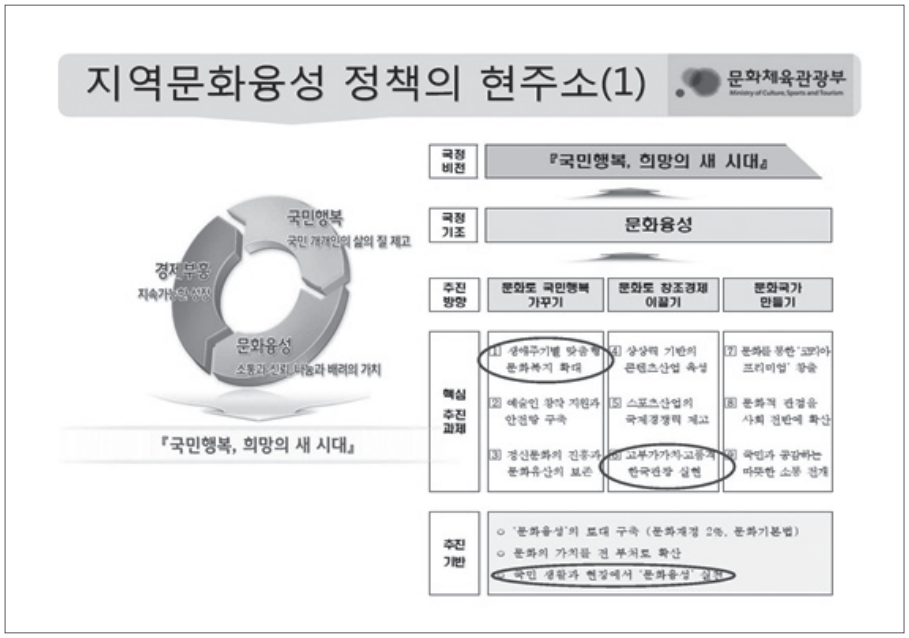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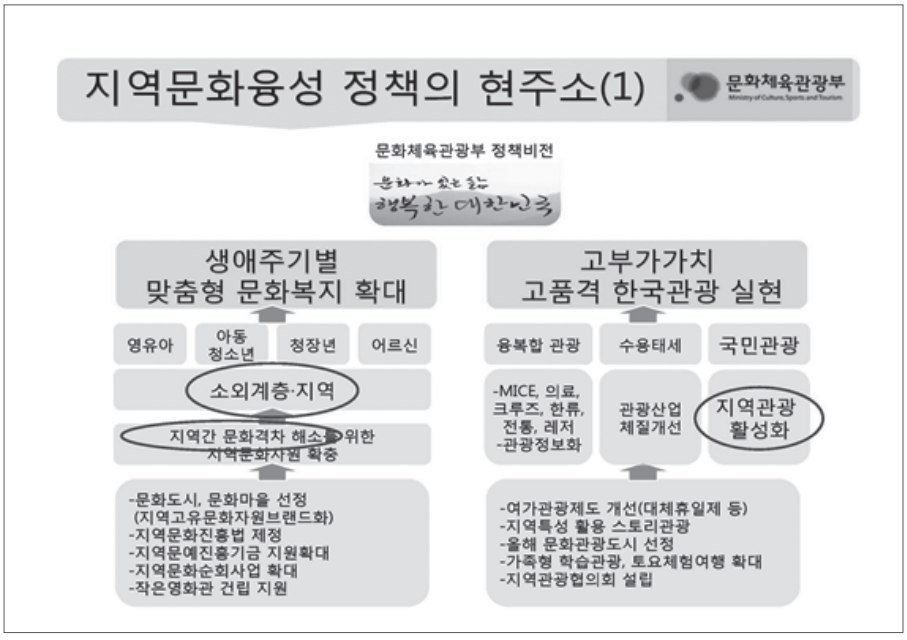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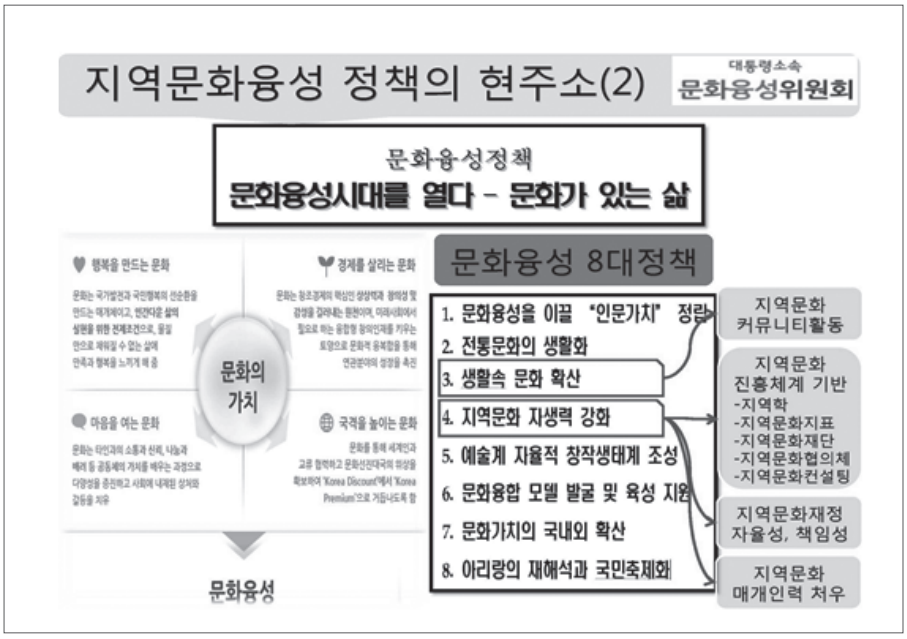
1. 지역문화융성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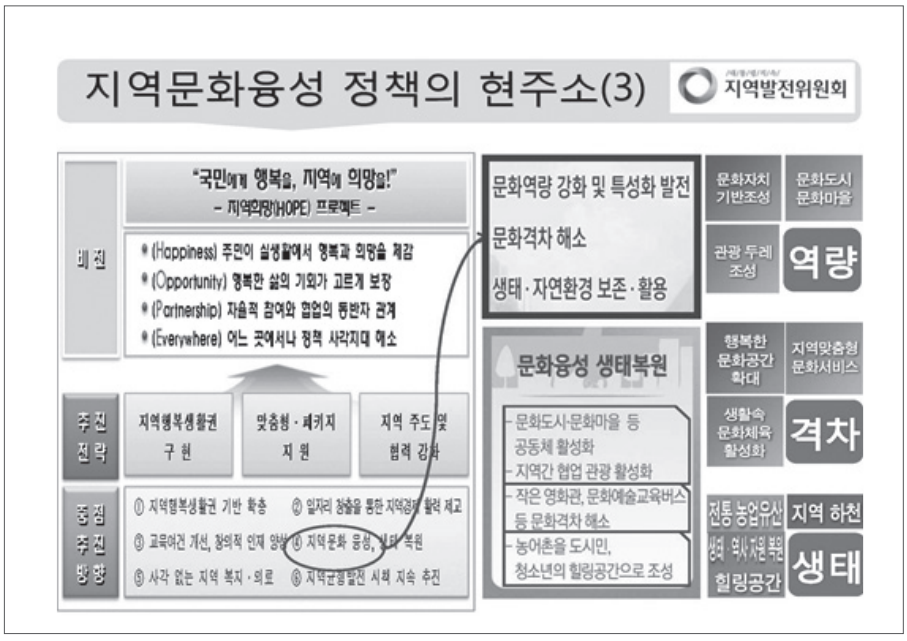




42 '지역문화융성 정책 20대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 「2014 아르코 문화예술정책 컨퍼런스」 178~192쪽을 참조하기 바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지역문화융성 정책의 현주소(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비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어르신
소외계층·지역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자원 확충
-문화도시, 문화마을 선정
(지역고유문화자원브랜드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문예진흥기금 지원확대
-지역문화순회사업 확대
-작은영화관 건립 지원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융복합 관광
수용태세
국민관광
-MICE, 의료,
크루즈, 한류,
전통, 레저
-관광정보화
관광산업
체질개선
지역관광
활성화
-여가관광제도 개선(대체휴일제 등)
-지역특성 활용 스토리관광
-올해 문화관광도시 선정
-가족형 학습관광, 토요체험여행 확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지역문화융성 정책의 현주소(2)
대통령소속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융성정책
문화융성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
문화융성 8대정책
1. 문화융성을 이끌 "인문가치" 정립
2. 전통문화의 생활화
3. 생활속 문화 확산
4.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5. 예술계 자율적 창작생태계 조성
6. 문화융합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7. 문화가치의 국내외 확산
8. 아리랑의 재해석과 국민축제화
지역문화
커뮤니티활동
지역문화
진흥체계 기반
-지역학
-지역문화지표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협의체
-지역문화컨설팅
지역문화재정
자율성, 책임성
지역문화
매개인력 처우
행복을 만드는 문화
경제를 살리는 문화
문화의
가치
마음을 여는 문화
국격을 높이는 문화
문화융성



2014, 지역문화정책 원년의 해

문화정책 법적 기반 완성의 시대
⇒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 문화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지역 문화 진흥법 (2014)

(목적)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
(기본원칙)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있는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 지역문화 고유 원형 우선 보존
(지역 생활문화진흥)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진흥 기반구축)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간 지역과 기업간 협력활동 지원,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문화도시 문화지구 지정 및 지원)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지원, 문화지구 지정 관리
(지역문화재단 설립)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지역문화진흥 재정의 확충,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역문화진흥법 上) 문화도시의 내용

정의 (1장 2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
지정 주체 (4장, 14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문화체육관광부장관소속)** -지자체 문화도시 조성계획 심의, 실적 심사 -문화도시 지정, 취소, 변경, 지원 역할
지정 (4장, 15조)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기타 대통령령 지정 분야별로 문화도시 지정 -문화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 기초여건을 토대로 지자체에서 신청
조성 계획 (4장, 15조)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도시 조성 프로그램 -투자재원 조달 방안

(지역문화진흥법) 문화도시의 과제

정의	-문화도시의 정의 문제(특색, 창조?) -문화도시의 분야 유형화 문제(예술/산업/전통/영상?)
지정 주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방식 -지역정책파트너조직의 적절성 문제(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지역문화예술위), 지역문화진흥자문사업단 등 지역문화조직과의 협력방안
지정	-지정 분야의 적절한 유형화 문제 -도시문화정체성과 도시브랜딩 계획 수립 의무화
조성 계획	-도시정체성(문화역사성, 창조성, 예술성) 현황분석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 추가

문화진흥 기본계획 (문화기본법)

[비전]

문화로
발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목표/과제]

4대 목표
18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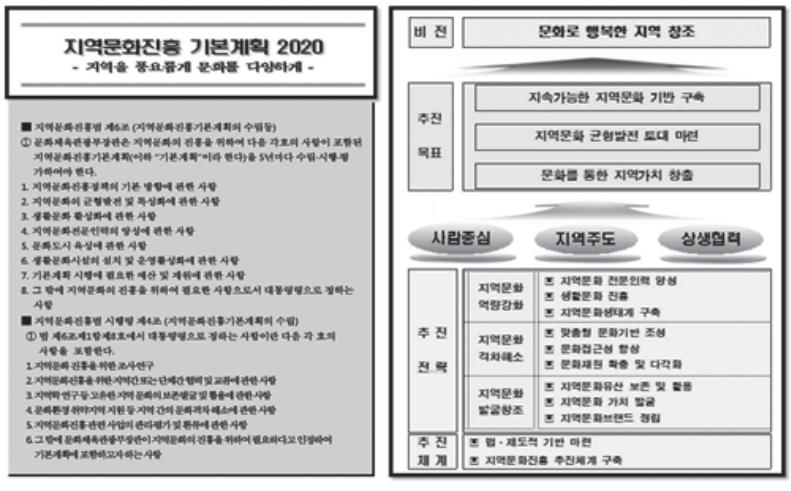
<목표1> 국민행복을 키우는 문화
1. 여가문화 활성화 2. 문화복지의 증진
3. 예술진흥 4.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5.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진흥

<목표2> 문화유산과 정신문화의 창조적 활용
6. 지역문화의 활성화 7.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8.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9. 전통문화의 창의적 발전과 산업화
10. 문화유산/전통문화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11. 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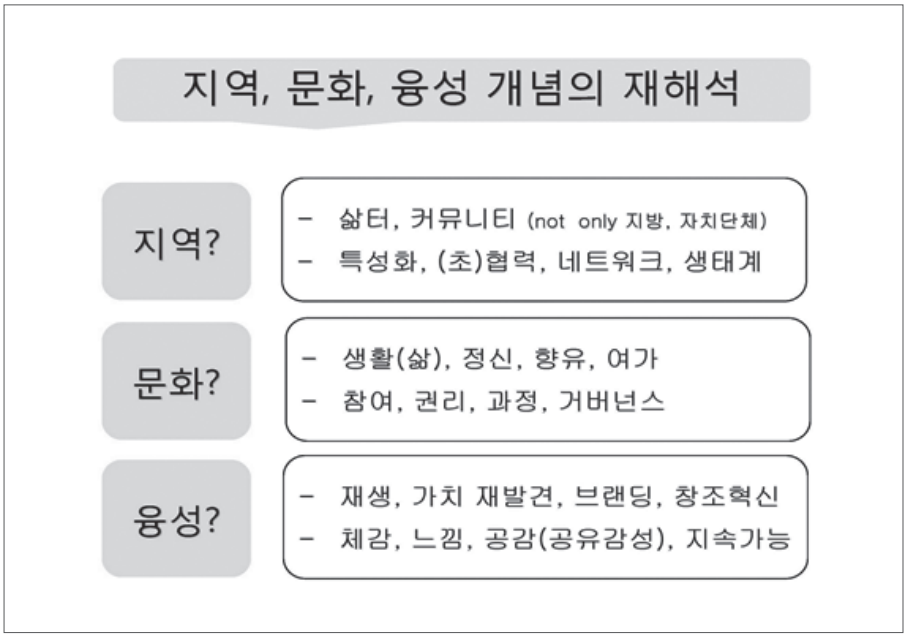
<목표3> 문화가치 창출과 사회적 확산
12. 상상력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문화산업 진흥
13. 문화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시장 활성화
14. 타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가치의 확산
15. 국제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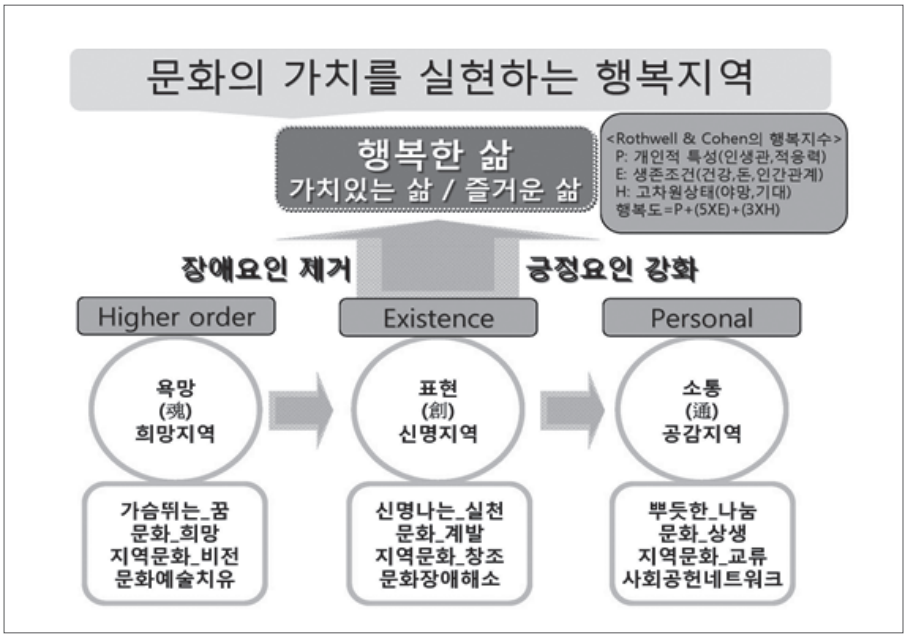
<목표4> 문화융성을 여는 기반 조성
16. 문화인력 양성 17. 문화시설 기능 및 배치 조정
18. 문화재정 2% 확충 및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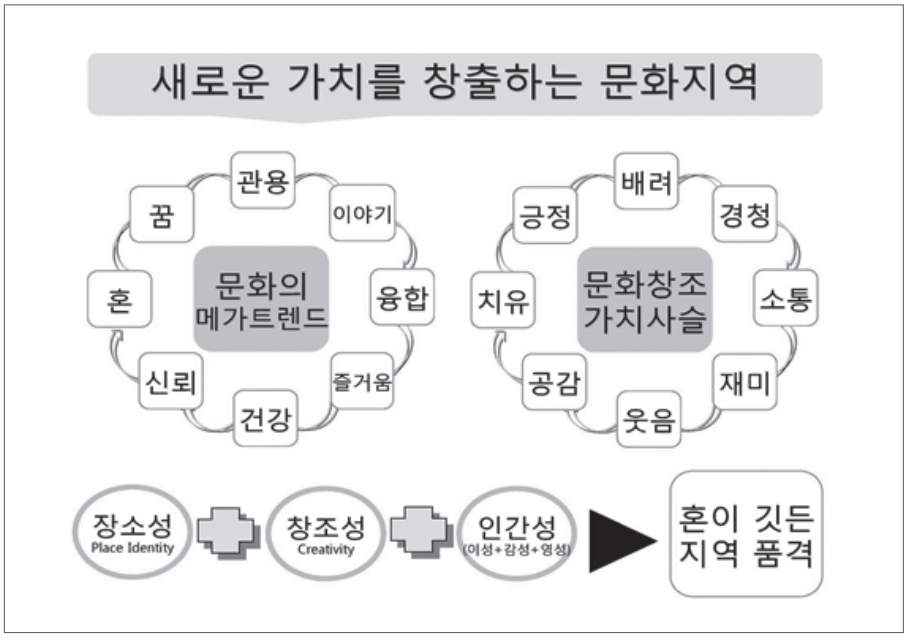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5개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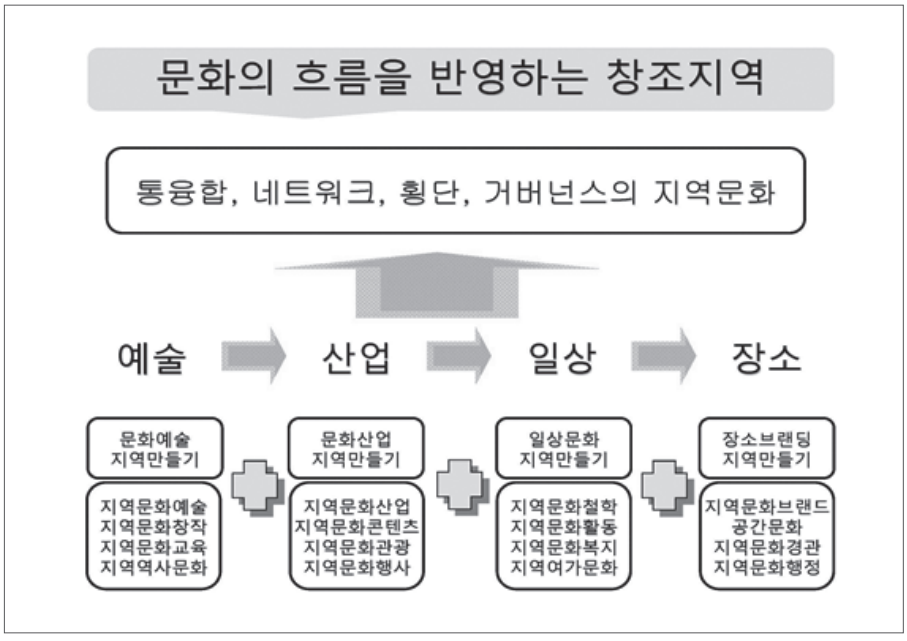


2.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관점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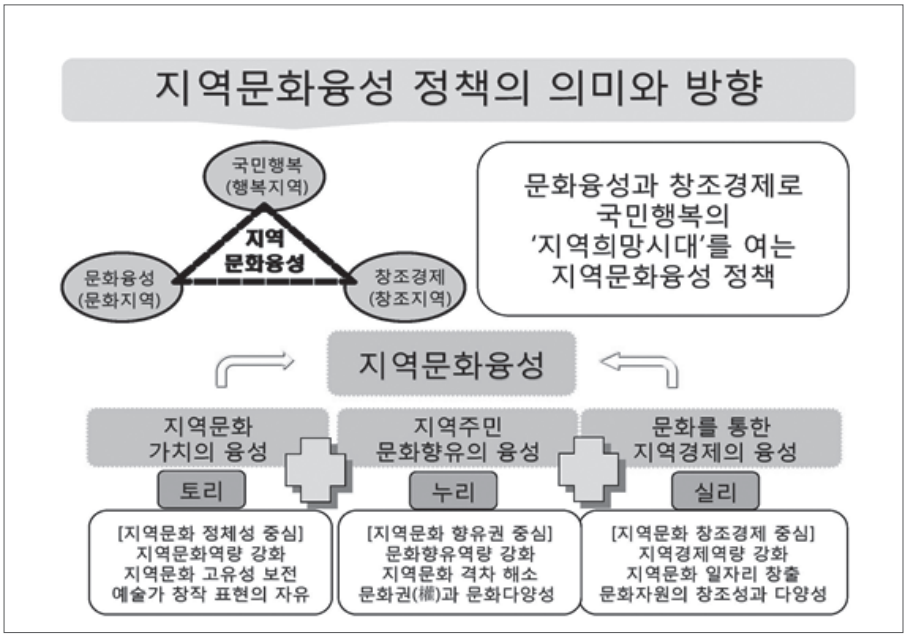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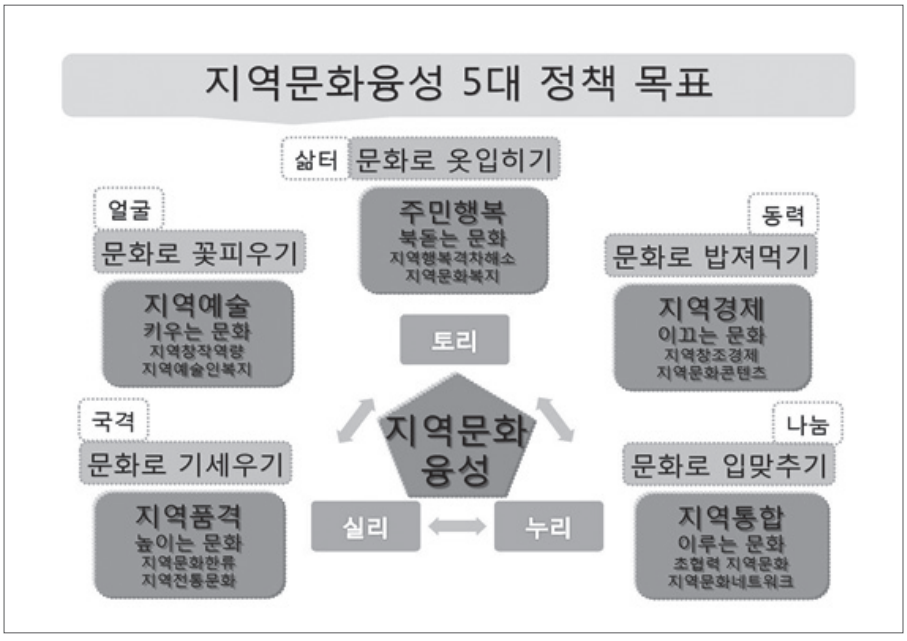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지역
관용
꿈
이야기
혼
문화의
메가트렌드
융합
신뢰
즐거움
건강
배려
긍정
경청
치유
문화창조
가치사슬
소통
공감
재미
웃음
장소성
Place Identity
창조성
Creativity
인간성
(이성+감성+영성)
혼이 깃든
지역 품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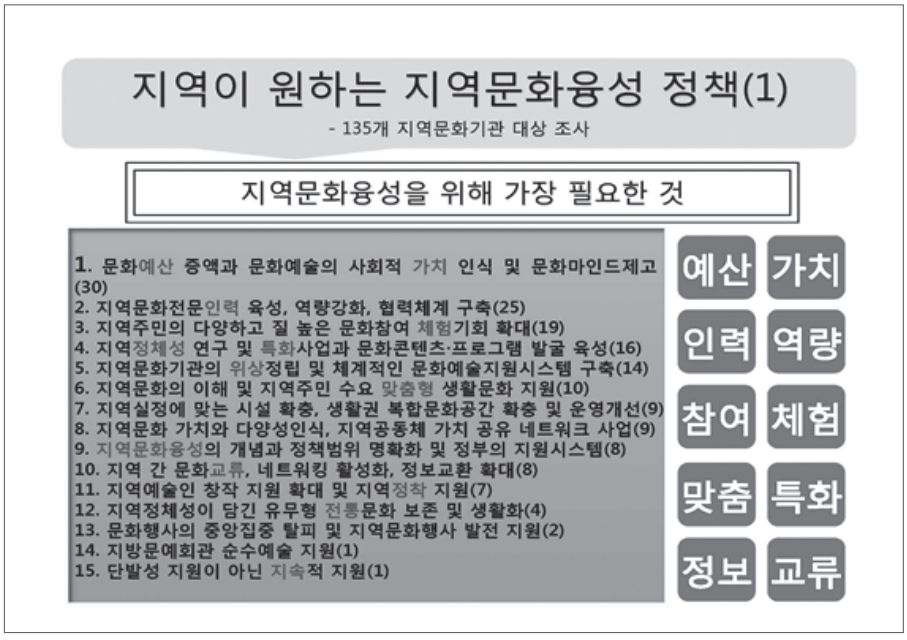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창조지역
통융합, 네트워크, 횡단, 거버넌스의 지역문화
예술
산업
일상
장소
문화예술
지역만들기
지역문화예술
지역문화창작
지역문화교육
지역역사문화
문화산업
지역만들기
지역문화산업
지역문화콘텐츠
지역문화관광
지역문화행사
일상문화
지역만들기
지역문화철학
지역문화활동
지역문화복지
지역여가문화
장소브랜딩
지역만들기
지역문화브랜드
공간문화
지역문화경관
지역문화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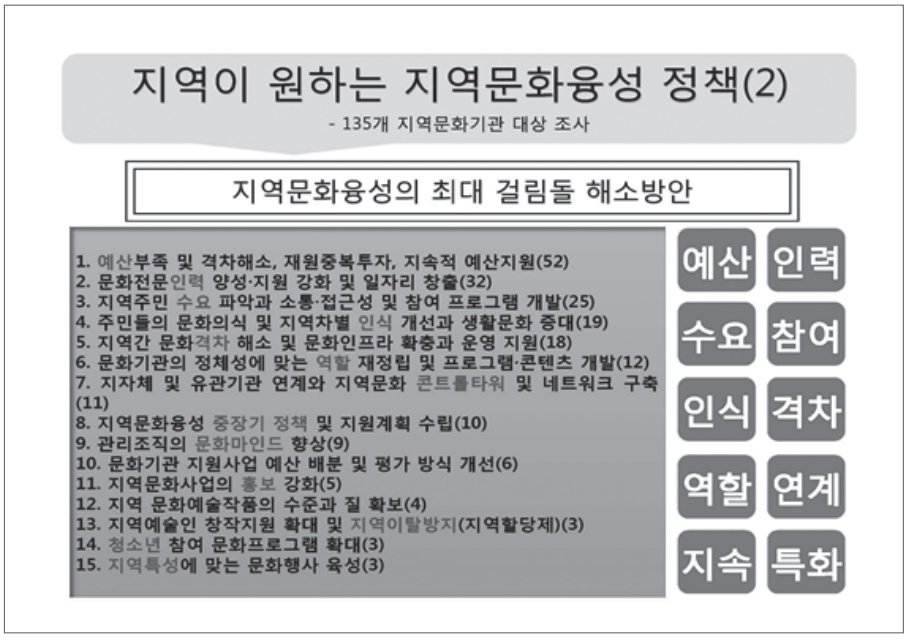
3. 지역문화융성 정책의 방향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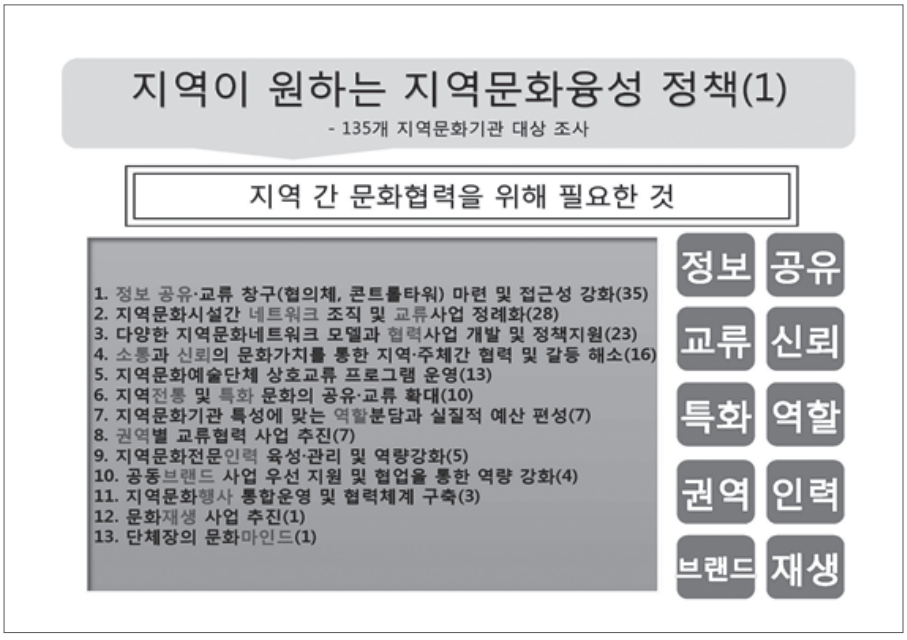




4. 지역문화융성 정책의 핵심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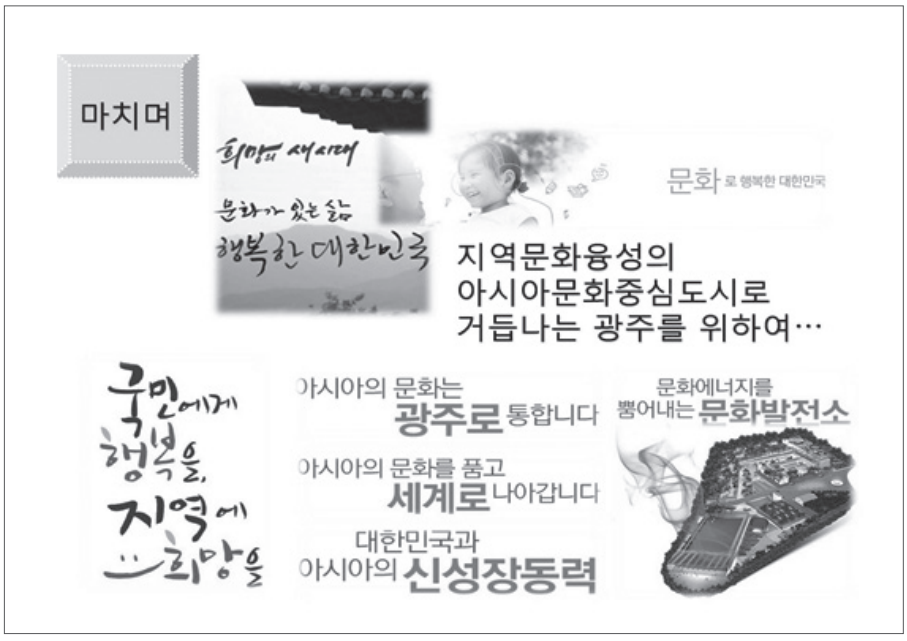






지역문화융성 정책 20대 핵심 프로젝트

정책 목표		프로젝트명		
가치	목표	지역문화정체성 (토리)	지역문화향유권 (누리)	지역창조경제 (실리)
삶터	문화로 옷입히기 (주민행복)	1)지역행복문화지도	2)문화장애해소 3)생활맞춤형 문화향유	4)문화융합 일자리창조
얼굴	문화로 꽃피우기 (지역예술)	5)문화특화지역 6)지역맞춤형 문화전문인력	7)문화예술치유	8)문화인력 지역정착
동력	문화로 밥져먹기 (지역경제)	9)지역문화산업 특화발전 10)지역문화브랜드	11)지역문화데이 (Region Day)	12)지역문화재생 플랫폼
나눔	문화로 입맞추기 (지역통합)	13)지역행복생활권 (지역문화생태계)	14)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15)초협력문화거점	16)국토지역문화 통합브랜딩
국격	문화로 기세우기 (지역품격)	17)문화자치추진체계 18)지역맞춤형 문화재정	19)지역문화공헌 네트워크	20)지역문화한류


마치며
희망의 새시대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
지역문화융성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광주를 위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아시아의 문화는 광주로 통합니다
아시아의 문화를 품고 세계로 나아갑니다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신성장동력
문화에너지를 뿜어내는 문화발전소

발제 1에 대한 토론 1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삶의 생활 수요, 문화적인 욕망들의 관점에서 지역을 바라보기 보다는 물리적인 공간같은 범주의 개념으로 지역을 바라보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화적으로 소극적이고,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묵념하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을 현실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문화매개인력이 지역에 어떻게 판을 만들어 가고 조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판 만들기 부분에서 발제자가 제시한 두 가지 부분이 융합되어 문화적인 권역의 단위 속에서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문화매개인력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핵심문제인 것 같다. 행복주택, 농촌마을 등 여러 사업들이 있다. 실제로 문화부의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타부서와 연결되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상 사업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인력이나 예산 등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많다. 이런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며, 총체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발제 1에 대한 토론 2

박호재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 실장

지역문화융성 정책과 문화자치의 실현

문화융성, 스며듬이 없다

광주의 경우 '문화로 밥을 만드는 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진행,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긍정적인 경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융성은 지역 삶터의 융성'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면, '문화의 속 무늬 만들기'는 아직 가시적 진척이 눈에 띠지 않는다. 21세기 격조 있는 문화입국

을 만들기 위한 '국가문화융성정책'과 같은 거대 프로젝트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문화 마인드 향상과 지속가능한 문화자생성 확장과 같은 비전과 전망을 가장 기본적인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결국은 문화자치의 문제

발제자가 강조한 '문화융성의 관점의 전환'은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발제자는 문화융성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행복한 삶'을 궁극적인 가치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문화로 행복한 삶의 가장 효율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인가. 자신의 삶의 터에서 문화를 통해 실존의 풍요를 꾀하는, 그래서 풍성한 일상의 문화가 활성화되는 경로의 정착이 문화로 행복한 삶의 전모일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장착시킬 것인지가 곧 지역문화융성정책의 핵심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화두의 실현은 시민의 일상에 익숙한 지역문화 정체성 ·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주민생활문화지원책이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자치의 구현'이 지역문화융성정책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화자치의 실천에 대한 고민

공공 재정이 투입되고 이에 따라 책임성을 지녀야하는 문화자치의 실현체계는 고심해야 할 대목이 많다. 이는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원활한 운영, 그리고 법률의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발제자가 공적 책임을 지닌 거버넌스 모델로 제시한 '지역문화진흥원' 과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 방식은 참신하게 다가선다. 그 역할과 기능이 어디까지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향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발제 2

문화민주주의를 넘어 : 한국에서의 새로운 전략 모색

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1. 연구목적

문화의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의 대안적 개념으로 1970년대에 유럽에서 등장한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는 1990년대 후반에 한국에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문화정책의 핵심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유럽 상황과 한국 상황은 다르며, 유럽인과 한국인의 문화수용의 조건과 문화로의 접근역량(예, 문화자본)이 다르다. 게다가 문화민주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40여 년이 지났다.[43] 문화민주주의 전략이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에 부합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문화민주주의 : 개념과 쟁점

1)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문화의민주화는 서구의 고급문화를 중심에 둔 '예술의 문명적 가치'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을 높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전략에서 정부의 역할은 경제적 · 교육적으로 취약해 예술작품에 접근이 어려웠던 대중이 예술작품에 보다 많이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등장한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민주화가 주류 문화 외의 문화에 대해서는 무시하면서 동시에 탑다운 방식으로 예술 엘리트주의를 확산한다고 비판한다. 즉, 문화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 생활의 형평주의"를 주요 가치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치에 입각해 문화민주주의의 특징은 첫째, 문화다양성 및 문화권의 보호와 증진, 둘째, 공동체 문화에 대한 적극적 참여, 셋째, 문화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넷째, 문화자원과 지원에 대한 공평 · 공정한 접근으로 설명되고 있다.

[43] 그 동안 세계화가 가속화됐고, 신자유주의 위기로 정부(특히 지자체)는 재정위기에 늘 직면해있고, 문화(예술)생산구조 자체가 달라졌다.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본질적 차이는 정책목적을 어디에 두는가에 있다. 문화의민주화는 예술작품으로의 불평등한 접근성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반해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생산 과정에의 참여도와 다양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44]

2) 문화민주주의와 한국

다문화사회인 미국 · 유럽에서는 문화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유네스코의 문화개념과 동일하게 이해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즉 '예술'로 이해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 예술로 이해되는 문화는 계급적 특성이 약한 반면, 문화민주주의가 개념화된 유럽에서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계급적 특성을 띤다. 당연히 지배권력 혹은 주류집단과의 이항적 대립으로서 문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장르별로 고급예술과 대중 혹은 저급예술로서 구분하는 경향이 약하고, 법이나 정부정책, 일반인의 인식조차 문화를 예술로 이해하고 있다. 유럽인과 한국인의 문화(예술) 수용능력 또한 다르다. 절대적인 문화자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45] 프랑스와 같은 공공화된 계급체계가 없는 한국에서의 문화소비는, 유년기에 획득한 문화자본보다는,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뤄낸 부유층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년기의 소비활동을 통해 문화자본을 획득, 점차 문화소비를 늘려간다.

신자유주의 위기(2008~09) 이후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문화 활동의 자율성과 참여의 확대, 문화의 자치화 등 문화민주주의적 가치를 형식적으로 적용할 경우 '문화다윈주의(cultural Darwinism)'가 나타나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46]

---

[44] 이러한 관점에 따라 랑스테드(Langsted)는 문화의민주화를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Culture for Everybody)', 문화민주주의를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Culture by Everyone)'로 구분한다.

[45] 특히 예술교육 등과 관련된 제도화된 문화자본과 예술과 관련한 가정환경, 작품소유와 소비 등과 관련된 객체화된 문화자본에서 유럽인들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46] 2014년 2월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5%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의 지방자치화가 문화 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화민주주의, 문화의 지방자치화의 대표사업으로 꼽히는 '문화의집'의 심각한 운영난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결론적으로 유럽과 한국은 다문화사회라는 사회적 기반, 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 활동의 목적 등이 다르다. 따라서 문화민주주의 전략이 한국 상황에 부합한지 혹은 한국에 적합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3. 문화민주주의를 넘어

1)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융합

문화민주주의를 주창한 학자들은 문화의민주화의 폐해를 강조하며 정부 문화정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해 문화민주주의를 진화론적 단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자주 인용되는 것이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전략의 특성을 비교한 랑스테드 연구(Langsted) "Double Strategies in a Modern Cultural Policy"(1990)이다.

〈표 1〉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비교

Democratization of Culture	Cultural Democracy
monoculture	plurality of cultures
institutions	informal groups
ready-made opportunities	animation
create framework	create activities
professional	amateur
aesthetic quality	social quality
preservation	change
tradition	development, dynamics
promotion	personal activity
products	processes

이브스(Yves)는 문화의민주화는 엘리트주의에, 문화민주주의는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모니카 가팅거(Gattinger)는 궁극적으로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는 상호보완적 관계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유기(2007)는 20세기 초에 추진됐던 프랑스 아르누보 운동 사례를 통해 두 개념의 이원적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가치가 통합된 개념으로 '문화 민주주의'를 제언한다. 엘리트주의로 구분되지 않는 문화의 특성, 그리고 두 전략의 목표가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특성을 비롯해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융합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2) 문화의복지화

당시의 문화적 공적가치와 사회적 기반에 부합해 문화민주주의 전략이 도출된 것처럼, 새로운 문화전략은 현대의 문화적 공적가치에 기반해야 한다. 문화민주주의를 주창하던 학자들은 지배질서의 대항적 모델로서 문화민주주의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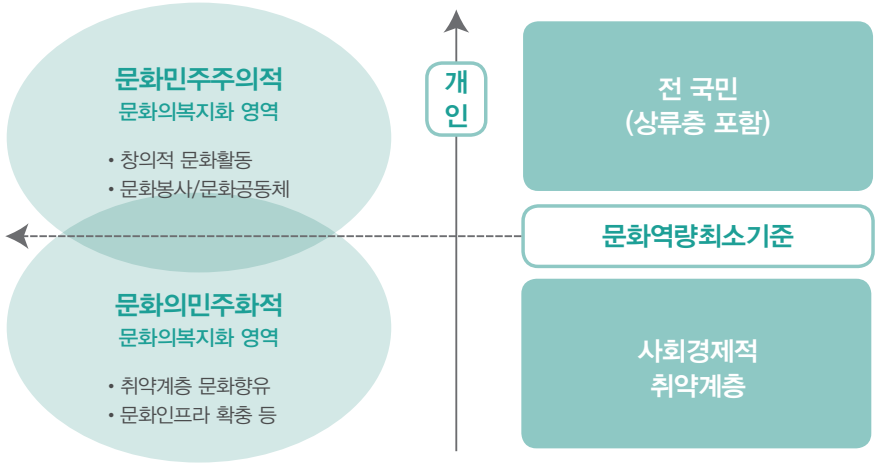
최근에는 문화의 공적가치를 세계화로 상실되어가는 인간의 소외를 극복할 대안으로 이해한다. 현대인은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성과달성에 매달리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 문화를 형성해 가는 토대를 갖추기가 어려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개인의 문화적 공감력과 문화를 통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존재론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문화의 공적 가치가 있다.

복지는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외부의 도움으로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 개념은 시장중심 자본주의 위기로 나타난 사회적 '위험'의 대응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의 적극적 개입이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사회학의 등장과 함께 취향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개인의 성향체계

(habitus)에서 형성된 계급의 문화적 취향임이 밝혀졌다. 문화향유의 불평등, 결핍문제 역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이야기다. 해결방법도 사회구조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적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문화자본)을 외부에서 충족시켜야 한다. 1차적인 단위는 가족이지만, 문화적 취향이 상속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복지처럼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문화의복지화의 3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와 같이 문화의복지화는 현대사회의 개인 및 공동체가 처하고 있는 사회 · 구조적 위험에 대한 문화적 대응전략이 '문화의복지화'이다.

〈그림 1〉 두 전략과 문화의복지화의 관계도



문화의복지화에는 문화향유 최소기준에 따라 '문화의민주화적 복지화'와 '문화민주주의적 복지화'가 중첩되어 있다. 인간다운 문화적 삶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문화접근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의민주화 전략이 강하다.

이에 반해 최소기준 이상의 영역에서는 창의적인 문화활동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이것은 문화생산 과정에의 참여도와 다양성을 높이는 데 주목하는 문화민주주의 전략이 강하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할 점은 두 전략이 중첩되어 실현되어야 하며, 문화의복지화의 3주체, 특히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문화의복지화는 한국적 상황에서 보다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인처럼 한국인에게 문화를 향유 · 창조할 역량이 축적돼 있지 않고, 서

구예술 중심의 문화 개념때문에 담당할 기관 역시 서구처럼 탄탄하지 않다. 기관 중심(문화의민주화), 비전문가모임의 자발성에 의해(문화민주주의) 문화전략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문화가 복지화된다는 것은 문화를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로 이해하고 이를 국가가 의무로서 책임진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란 문화권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문화적 권리란 다문화사회에 기반하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 측면보다는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동등한 기회와 참여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문화의복지화는 문화의민주화와 가깝다. 하지만 문화의민주화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저소득층에게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은 반면, 문화의복지화는 문화향유 기회제공으로 문화감수성을 증진시켜 인간의 소외문제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기본법은 문화민주주의가 아닌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가 중첩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3주체, 특히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문화의복지화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다층적 협치

문화의복지화라고 해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화의복지화는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개념을 융합한 것으로서, 추진체계 역시 국가(지자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민간영역(기업, 시장)이 융합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위기 이후 재정 위기와 정부의 영향력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 기술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면서 공적 영역이 담당할 한계치를 초과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 혹은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문화 활동을 이끌어갈 기반은 미약하다. 가팅거(Gattinger)는 현대의 문화전략은 국가(정부), 비즈니스(민간영역), 시민사회가 상호협력하고 조정하는 '다층적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나칠 정도로 빠른 변화, 다양한 주체자(players), 분산되고 있는 지식 및 권력의 영향력, 부족한 자원 등 여러 문제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층적 협치(multilevel governance)는 문화의복지화 실현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세스이다.

4. 전라북도 사례[47]

1) 삶의 질 정책으로서 문화복지정책

2) 문화의복지화 사례 1 : 작은 영화관 및 주민시네마스쿨

3) 문화의 복지화 사례 2 : 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및 문화코디네이터

5. 맺음말

필자가 문화의복지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문제의식 없이 사용하는 문화민주주의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맞춰 한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데 있다. 맥락적 적용 없이 맹목적이고 형식적 적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또한, 문화복지 개념이 등장한 이후 문화기본법에 문구가 삽입될 정도로 중요한 문화정책으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이나, 점차 취약계층 대상의 문화서비스 정도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안타까움도 이 연구의 중요한 동기다.

한국적 상황에서 문화민주주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처럼 공고화된 계급체계와 문화적 삶을 향유할 문화자본이 부재한 한국에서 예술 중심의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 조건을 보장하는 복지화가 요구된다. 국가가 직접 기획, 집행,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적 협치를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어야 한다. 문화기본법의 시대, 서구에서 수입된 문화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인의 문화적 삶을 위한, 한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한국적 문화전략을 모색할 때이다.

[47]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2014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205~216쪽을 참조하기 바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발제 2에 대한 토론 1

김광욱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문화민주주의를 넘어’의 토론문

‘문화민주주의를 넘어’는 서구에서 생성된 문화의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개념과 사회적 저변을 살핀 뒤 한국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의 정책적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민주주의가 언제 등장했는가에 관한 물음으로, 1980년대에 등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적어도 용어의 등장은 신군부가 등장했던 시절이어서 토론자도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 ‘문화민주주의적 복지화’가 복지의 개념으로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48] 발표자의 맥락대로라면 문화에 관한 모든 것, 이를테면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마저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유럽에서는 문화를 삶의 양식까지 포괄한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문화의 하위영역인 예술로 이해한다.”라고 서술하셨는데, 아직도 문화라 하면 예술의 비중이 크지만, 이제는 한국도 공동체적 기반으로서 문화를 인식하는 차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1항은 ‘지역문화’를 정의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서술한 내용을 참조하면 문화에 대한 시각이 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광역권의 대형극장들을 특화하여 전용극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자체 공동으로 대응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간 문화향유의 질 격차도 해소하고, 접근성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8] 문화생산 과정에서 참여도와 다양성을 높이는 과정은 복지 차원의 문화가 아니라 본질 차원의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발제 2에 대한 토론 2

김대성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누구를 위한 문화인가?

문화정책의 공급자 중심 프레임과 전략

발제문의 세가지 개념은 기본가치, 목표, 전략, 대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문화정책 대상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즉, 이들 개념과 전략은 '공급자 프레임'의 문화정책이다. 대상의 입장에서는 문화민주주의를 문화혜택의 확대로 인식한다. 담론 실천의 차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행정적 합리주의보다 민주적 실용주의가 요구된다.

문화의민주화, 문화민주주의, 문화의복지화 등 정책적 실효성

지역문화정책은 정부재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부정책에 의존적이다. 세 가지 개념이 지역문화 정책 · 사업에 반영될 때, 의도된, 숨겨진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의복지화는 대안적 개념이나 전략으로서 작용할 뿐, 구별에 따른 실효성이 별로 없다. 즉, 지역에서는 엘리트 중심의 예술, 대중 중심의 문화향유 모두를 수행해야 한다.

문화의민주화, 문화민주주의의 융합에 따른 문제점

최근 통합, 융합, 통섭 등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문화민주주의의 기반인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는 'melting pot'을 넘어 'mosaic', 'salad bowl'를 지향한다. 새로운 융합 개념인 문화의복지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개념 간 융합은 논리적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론 및 실천적 차원에서 불확실한 개념이라고 비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한 문화의복지화 전략 및 사업

발제자의 사례에 대한 설명대로라면 상당 수 정책과 사업은 '회색지대'로 남게 된다. 토론자는 이들 사례와 관련, 문화민주주의가 문화의복지화보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문화정책의 출발점은 개념과 방법에 기초한 '이론'보다는 실험과 실천, 탈경계에 기초한 '실용'에 있다고 생각하며, 문화민주주의 유용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끝으로 지역 문화정책의 골격은 'for or by the people(문화의민주화, 문화민주주의)'보다는 'with the people(與民同樂)'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Session 5

문화재정의 진단과 개선방안

발제 1 **공공예술지원 현황과 과제**

안성아 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발제 2 **문화융성 시대 문화재정 :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중심으로**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토 론 **문화재정의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하계훈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양지연 동덕여대 큐레이터전공 교수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 팀장

윤현석 칼쳐네트워크 대표









2014 ARKO Cultural Policy Conference

White Paper

발제 1

공공예술지원 현황과 과제

안성아

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1. 공공예술지원에 대한 문제제기

문화예술지원 증가

- 예산의 증대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4조 1,723억) 중 문화예술부문(1조 7,461억)은 42%
- 공공지원기관 증가 : 1997년 시작된 지역문화재단은 2013년까지 16년 간 53개로 증가
- 민간지원 증가 : 문화예술지원 기업 수 '12년 566개, '13년 653개, 지원금도 9.4% 증가

지원체계 복잡화

- 체계와 규모 : 지원주체와 사업 증가로 지원사업의 전체 체계, 규모가 파악되지 않음.
- 지원의 주체 : 사업의 개발, 관리 및 중복성 문제 존재
- 수혜자 입장 : 지원제도의 복잡성, 부처별 상이한 지원방식으로 낮은 이해도
- 방향성과 효율성 :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두 체계로 나뉘어 지원, 임시방편적으로 도입된 지원 제도 · 프로그램이 많아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짐.

2. 공공 예술지원 현황[49]

1) 예술 장르 범위

예술장르 범위 관련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제2조에서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 12개 분야로 문화예술을 분류함.[50]

문화체육관광부 조직구조

문체부 조직은 예술(예술국), 문화콘텐츠(문화콘텐츠실), 문화(문화정책국, 문화기반국), 관광 영역(관광국)으로 구분되어 있음.[51]

공공예술지원 범위

본 연구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 순수예술 분야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현재 문체부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관심장르와도 일치하여 정책적 현실성이 높음.

[49] 2001부터 2014년까지의 공공 예술지원 관련 주요 연구 13편의 목록은, 자료집 「2014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 223쪽을 참조하기 바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50] 2013.7.16 법 개정으로 '만화'를 포함했다(편집자 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개별 장르를 언급하지 않고 예술성 등을 '문화상품'의 속성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산업 영역을 확장. 그 외 2009년 유네스코 FCS(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에 제시된 문화영역 분류 등이 있다.

[51] 2014.10.23일자로 문화예술정책실(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문화기반정책관),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 관광체육레저정책실(관광정책과, 체육정책관, 관광레저정책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편집자 주).

2) 지원 사업 유형

- 선택과집중(문화예술국제교류분야지원, 신진예술가지원,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 사후지원(문학창작기금지원, 우수공연예술사후지원)
- 간접지원(예술전용공간임차보증금지원, 공연예술전용공간운영프로그램지원, 시각예술창작및 전시공간프로그램지원, 공연장상주예술단체지원)
- 기타지원(건축물미술장식품설치제도, 문화접대비, 미술은행제도 등)

해외지원사업 지원 목표에 따른 구분

접근성제고, 문화예술교육, 창작지원, 교류지원, 문화정체성제고, 장르별특화프로그램, 학제적 지원

지역문화재단 사업 유형 구분

지원사업(일반, 경영, 학술지원), 교육사업(공교육특성화사업,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교육사업), 시설사업(시설운영, 시설사업, 산하단체사업), 기타(관광, 문화나눔, 문화이벤트, 지역축제사업)

3) 예술지원 주체

■ 우리나라 예술지원의 구성

우리나라 예술지원은 (1) 정부에 의한 지원, (2) 민간 비영리 조직을 통한 지원(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지역재단), (3) 기업, 개인을 통한 민간 지원으로 구성됨.

공공예술지원이라 함은 국민세금 등 '공적 자금에 의한 지원'으로 범위를 규정할 수 있음. 즉, 정부에 의한 지원과 민간 비영리 조직을 통한 지원이 공공예술지원에 속함.

공공예술지원의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지원 사업은 주로 문화예술정책실을 통해 이루어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문예진흥기금을 관리, 운용하며 문화예술 관련 지원을 주관
- 광역문화재단 :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필두로 2014년 현재 17개 시 · 도 중 13개 설립
- 기초문화재단 : 시군구 단위의 문화재단(현재 46개)으로 문예회관 등 시설관리가 주요 역할인 경우가 많아 고유한 사업이 부족한 실정임.
- 국공립시설/예술단체 : 문체부 소속 대표 시설로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등, 광역지자체 소속 집행기관인 대전예술의전당, 출연기관인 경기도문화의전당, 기초지자체의 경우 직영 문화시설 가지고 있기도 함.

4) 재원

문화예술 지원의 재원 구성

공적 재원인 국가예산과 문예진흥기금이 민간재원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가예산

문화예술부문 국가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2013년 7,866억 원)로 구성되며, 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6,5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1,366) 등 2개임.

기금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공적으로 조성해 높은 재원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며,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운용됨. 문체부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중 문화예술 지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이루어짐.

민간(기업) 재원

상위 500대 기업 조사 결과 110여 개 기업이 문화예술에 지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원총액은 1,753억 원임. 개인의 기부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됨(아름다운 재단 2014).

3. 공공지원체계 분석을 위한 제안

1) 공공예술지원의 유형화

구분	지원 사업	지원 방식
창작	작품 지원/단체 지원/예술인 지원	직접지원사업
	레지던시	간접지원사업
유통/매개	공연장 지원/축제 지원/국제교류 지원	직접지원사업
	컨설팅/정보소통	간접지원사업
향유	예술향유 지원/생활예술 지원/문화예술교육	직접지원사업
예술인복지	예술인 복지 지원/전문인력 양성	직접지원사업
하드웨어 건립	공연장 건립/미술관 건립/기타 하드웨어 건립	간접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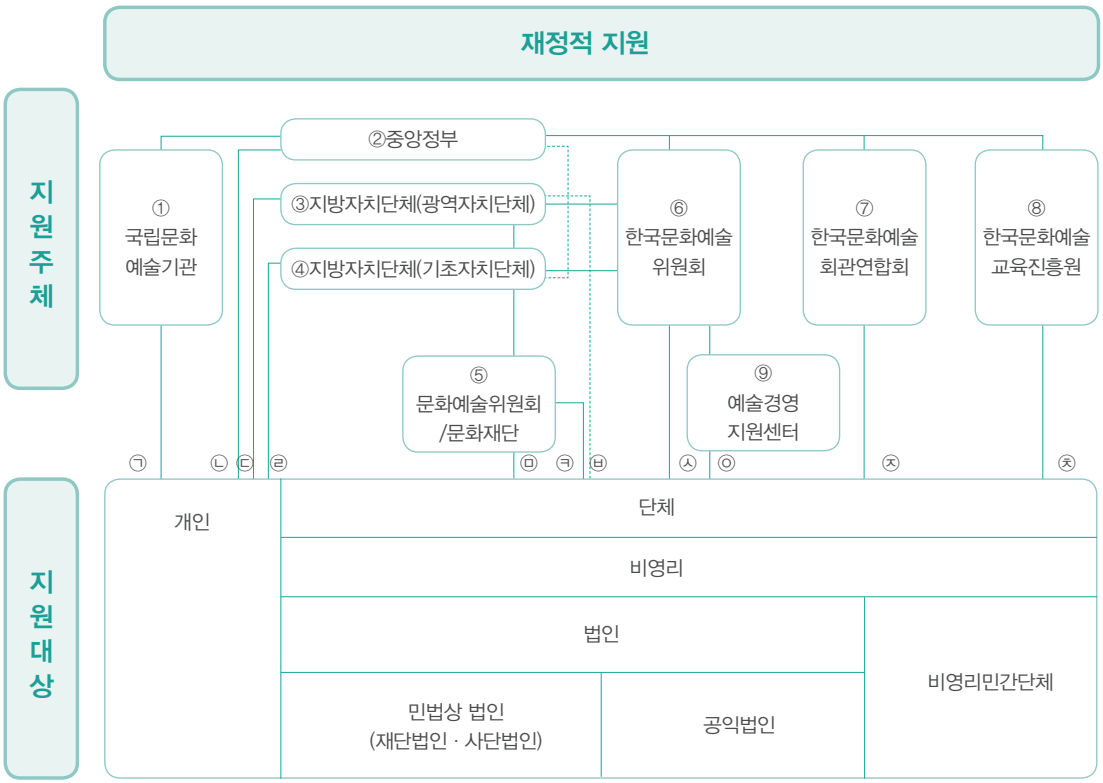
2014년도 타 부처 예술지원 사업 예시

지원기관	사업내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경력 개발과 구직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 사업' 실시	예산실 문화예산과
교육부	• 교육정책실 내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예술교육지원 • 2014년까지 예술강사 학교로 확대 배치 •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협력하여 문화예술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교육정책실 인성체육 예술교육과
외교부	• 재외예술인 활용 문화행사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KF)과 협력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예술인들을 적극 활용한 재외공관 문화행사 개최 지원	문화외교국 문화예술협력과
통일부	• 남북협력기금'사업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주민(또는 단체)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교류협력국 사회문화교류과
농림축산 식품부	• 시장 · 군수,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및 도농간 교류 촉진을 위해 축제효과가 높은 농촌축제를 발굴하여 축제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축제 지원사업'	농촌정책국 농촌복지여성과
여성가족부	•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 · 지원사업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과
해양수산부	•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해양환경 회복 홍보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해 지역축제 행사비용 일부 지원 및 후원, 국립해양박물관 운영 지원	어장환경개선팀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2) 예술서비스 전달 체계

예술(정책)서비스 전달경로 관련 기존연구

- 박영정(2012) : 발신자 · 중간전달경로 · 수신자에 따라 4개 기본유형(정부 – 국민, 정부 – 문예기관 – 국민, 지자체 – 국민, 지자체 – 문예기관 – 국민), 20개 세부유형 구분
- 김세훈(2012) : 창작 · 매개 · 교육영역의 예술위사업 대상 문화서비스 전달체계 실태
- 손원익 · 박태규(2013) : 지원형태(직접지원, 매칭, 위탁)에 따른 재원전달 경로
- 기존 연구의 한계 : 특정 예술지원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분석한 한계점을 보임.



자료 : 손원익 · 박태규, 『민간비영리조직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p.39

3) 서비스 전달체계 관점의 주체 구분

• 본 연구에서는 예술전달서비스를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하고 행정체계는 다시 기획과 지원으로 구분하였음(최종 도달처인 예술가 · 단체와 향유자는 미포함).

• 서비스 전달체계 관점의 구분은 역할에 따른 주체 구분이 가능하여 전체 예산 및 사업 전달경로 파악에 유용

• 지원주체 역할별 효율성, 적절성 평가에 적절 : 주된 역할 기준의 구분으로 기관별 하나의 그룹에 소속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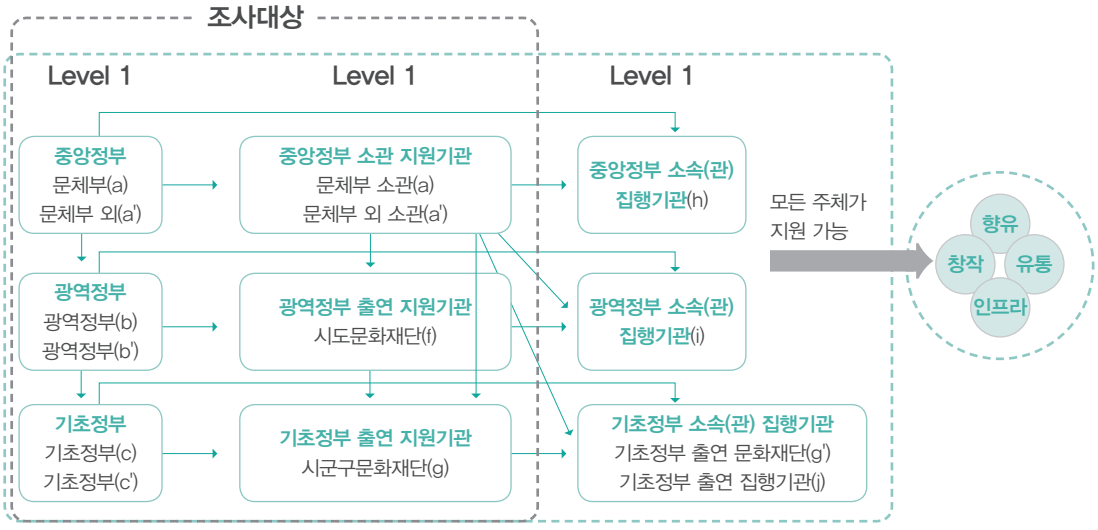
문화예술지원의 3개의 레벨

Level 1 (예산)기획 역할	Level 2 지원, 관리역할	Level 3 집행 역할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소관 위원회/재단	예술단체 /예술기관
문화체육 관광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국립발레단
지방정부 1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세종문화 회관
지방정부 2	지역문화 재단	국공립 미술관

Level 1. **최초의 예산 기획 및 교부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를 말함**
– 동시에 문화공간을 운영하거나 축제를 직접 지원 및 운영하기도 함

Level 2. **예술지원예산을 집행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하위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함**
– 정부소관 위원회나 재단이 대표적 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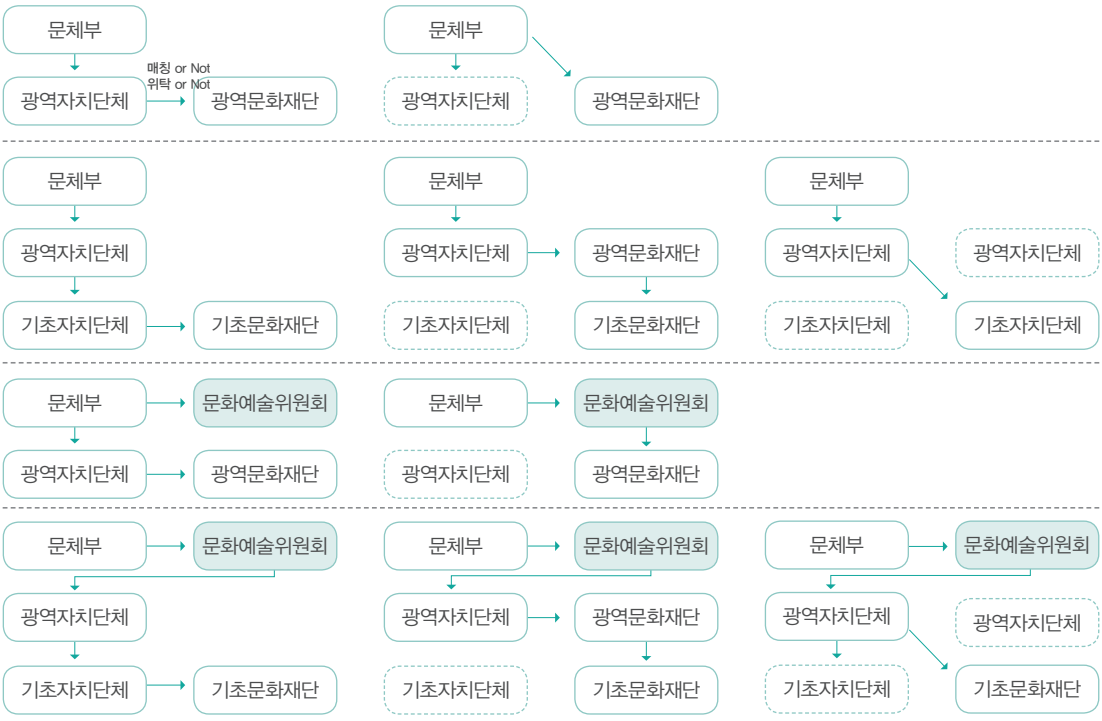
Level 3. **예술서비스를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단체나 기관**
– 재정적 소요가 크지 않은 사업이나 비재정적 문화예술지원사업을 실행하기도 함



현실적으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즉 레벨1과 레벨2의 문화재정 분석으로 레벨3의 예산 파악도 가능한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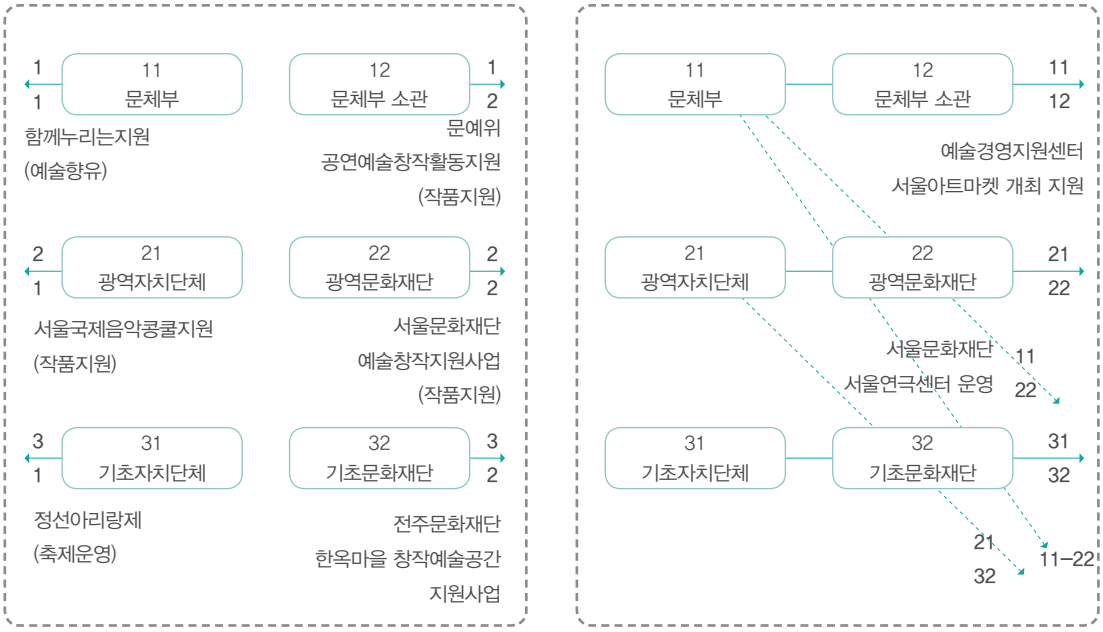
카테고리	구분	세부 구분	사례 수
Level 1	중앙정부	문체부	1
		문체부 외	16
	광역정부	문화재단(level2)이 있는 광역정부	13
		문화재단(level2)이 없는 광역정부	4
	기초정부	문화재단(level2)이 있는 기초정부	19
		문화재단(level2)이 없는 기초정부	207
	소계		**260**
Level 2	중앙정부 소관 지원기관	문체부 소관 지원기관	6
		문체부 외 소관 지원기관	3
	광역정부 출연 지원기관	광역정부 출연 지원기관	13
	기초정부 출연 지원기관	기초정부 출연 지원기관	47
	소계		**69**
총계			**329**

공공예술지원 경로 : Level1 · Level2



공공예술지원 경로 : Level1, 2 · Level3

경로분석 결과 실행기관으로 재원이 도달하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사업특성이나 유형별 통일성 없는 지원경로들이 보임.



4. 본 연구의 기여

공공예술지원 전반을 다룬 연구, 공공예술지원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틀 제안

5. 논의 (Discussion)

주체의 역할 이슈

급격한 환경변화와 주체 자체의 변화, 제도의 변화 등에서 주체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문제 : 위원회와 지역재단, 광역권재단과 기초권재단의 역할 재정립 문제, 통일성 및 투명성의 문제: 민간기관의 경우 재정상황 비공개

지원기간 관 시너지를 내고 있는가? 명확한 역할분담 및 제도적 뒷받침 필요

효율성 이슈

복잡한 사업 전달체계 및 사업 중복성은 지원체계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 : 공공예술지원 서비스가 의도한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현 상황에 맞는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 필요성

공공기관 간 지원사업의 중복영역, 틈새영역을 발굴, 시너지를 높일 필요성

재원 이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의존도 문제(자체사업 낮은 비중), 지역협력형사업(문예기금의 고갈 후) 재원마련 문제,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관계 정립(보완성, 대체성) 문제

발제 1에 대한 토론 1

하계훈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교수

문화재정의 현황점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예술은 상업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예술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한 나라의 정부가 얼마나 품위 있고 선진적인지는 예술계에 대한 연간 지원액의 크기로 알 수 있다.[52]

지난 수십 년 간 예술분야 정책결정자들은 단순성에 집착해 왔다. 가령 그들은 '예술'과 – 대단한 전문용어처럼 들리는 – '예술계'와 같은 용어들이 어떻게든지 예술의 복잡성으로 가득 차 있는 전체 예술계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도록,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경제학과 관련되는 협의의 관료적 개념과 관련되도록 재정의 해왔다.[53]

[52] 토론자는 컨퍼런스에서 번역문 없이 원문을 제시했으나 편의상 번역했다(편집자 주). (원문) As the arts cannot exist commercially, governments ought to subsidize the arts. Moreover you tell how decent and civilized a government is by the size of its annual grant to the arts world.

[53] (원문) Policy–makers in the arts have been avid for simplicity in recent decades, redefining terms so that 'the arts' and such grand–sounding bits of jargonese as the 'the arts world' seem somehow to refer to the whole teeming complexity of art, but in fact refer to a narrow little bureaucratic construct – world which is no longer subject to genius, creativity,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but simply economics.

관료들은 천재적 재능이나 창조성을 인지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예술평론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경제력은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연유로 예술은 경제 법칙이 적용되는 '다른 모든 것들과 유사한' 그 무엇으로 간주돼 올 수 밖에 없었다.[54]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타당 한가?
[찬성] 문화예술이 갖는 경쟁력의 한계,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문화를 통해 재분배 효과
[반대] 정책의 우선순위, 시장원리에 위배, 지원에 따르는 통제
[해결책] 관리의 전문성, 공정한 기준, 다양한 재원 확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54 (원문) Bureaucrats cannot recognize or control genius or creativity, and they fear criticism, but economic forces they can control. Therefore art has to be seen as something which is 'like everything else', subject economic laws.

발제 1에 대한 토론 2

양지연 동덕여대 큐레이터전공 교수

‘공공예술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공공예술지원에 있어, 예술의 장르 및 지원 주체, 지원 유형, 지원 경로 등 여러 요소를 포괄적으로 접근할 틀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지원 주체 및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다변화되고, 예술의 창작, 유통, 매개, 향유의 선순환을 위한 예술정책/지원의 생태계적 접근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환경에서 공공예술 지원 체계를 총합적으로 맵핑하는 것이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발제문에서는 예술지원의 논점으로 ‘지원주체 간의 역할 분담’, ‘사업 전달체계의 복잡성과 중복성’, ‘민간/공공, 지역/중앙 재원의 상호관계’를 적시하였다. 이러한 이슈들은 그 동안 현장과 정책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온 것들이다.

예술 공공지원 시스템의 전체적인 틀을 도출하는 것은 좀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이슈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 공공예술지원의 긍정적 효과가 예술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단지 재정지원 주체 및 사업의 체계성 구축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공공예술지원이 예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지원 주체가 예술 지원의 원칙과 철학을 보다 명료하게 설정, 소통하고,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점이 무엇보다 서비스의 최종 도달처인 예술가(단체) 및 향유자의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발제문은 3레벨을 '집행 단위'로서 예술기관단체를 설정했다. 그러나 국공립 미술관 · 공연장은 예술의 창작 발전소로 자율성과 전문성이 담보돼야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단순 집행 · 전달 단위로 도식화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지원 자체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예술의 공공지원이 절대 선인가, 어떤 지원이 왜 필요한가, 이 때 전제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섬세하고 철학적이며, 생태계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발제 2

문화융성 시대 문화재정 –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중심으로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1. 서론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문화를 중시하는 정도는 역대 그 어느 정부에 못지않다. 정책 목표 중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이 문화재정 2% 달성의 공약이다.

획기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의의를 반감시킬 만한 요인들이 있다. 우선 세수 감소와 복지재정 수요 증가로 지자체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재정이 감축되고, 매칭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고유한 문화정책을 집행할 문화재정은 더욱 쪼그라들고 있다.

또한 확충과정에서 문예진흥기금 고갈이 촉진되고 있다는 점으로, 5년 동안 전체 재정 증가율이 연평균 14.4%인데 비해 문예기금은 36.9%로 계획돼 있어, 2016년경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화재정 확충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존치만이 능사는 아니고 근본적인 수준에서 문예기금의 존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봐야한다. 특히 저금리 시대에 적립금 확보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정부의 모든 지출을 예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다.

2. 문화재정의 변화와 사회적 법적 논란

1) 문화재정의 역사적 변화 과정

문예기금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화재정의 변화는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데, 1970년대 문화재정의 도입기, 1980년대와 1990년대 문화재정의 확장기,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문화재정의 특징은 복합화라 할 수 있다.

70년대 도입기에는, '문화예술진흥법'(1972)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설립(1973)되고 전국 627개의 극장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또 1968년에 문화공보부가 발족에 이어 제1차 문화진흥 5개년 계획(1974-1978)이 시행됐다.[55]

80~90년대 확장기에는, 공익자금 등의 유입으로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문화의 공간적 확산'이 추진됐다. 지역문화의 육성과 활성화 정책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지역문화시설확충지원"은 지역문화 지원액의 60.9%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 후반이후 복합화의 세 가지 양상 중 먼저, 지역문화정책의 확산에 따른 다층화가 나타났다. 경기문화재단(광역)과 강릉문화재단(기초)을 필두로 지역문화재단들이 설립되면서 지역문화정책이 고유한 재정을 갖고 운영되기 시작했다.

다음은, 문화산업정책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분화와 함께 나타난 문화지원 영역의 분화 현상이다. 영화진흥 재정이 문예기금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으며 문화산업진흥 자체가 문화예술진흥에서 분리되었다. 끝으로, 문예기금 모금의 폐지되고 복권기금이 전입되면서 복권기금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 소외계층 대상의 문화복지사업이 증대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의 사회계층적 확산'이 이루어지고 문화정책이 사회통합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2) 문화기금에 관한 논란

문화재정에서 기금의 종류가 다변화된 반면, 과거와 달리 2000대 이후에는 기금의 존재나 새로운 도입에 관한 사회적 · 법적 논란이 상당히 거세졌다. 2003년 문예기금 모금의 위헌 판결, 전액 국고에 의존하고 있던 문화산업진흥기금은 2006년 폐지되었다.

영화진흥발전기금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5(위헌) : 4(합헌)로 위헌 판결의 위기를 맞이했으나 3분의 2선을 확보 못해 그대로 유지되었고, 최근 콘텐츠진흥펀드의 경우에도 관련 기업들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55] 제1차 문화진흥 5개년 계획의 시행은 관리와 통제 중심의 소극적인 문화정책에서 적극적인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련의 법적 소송의 과정들과 콘텐츠진흥펀드의 사례에서 드러난 바는 사회적 공감과 관련 집단 사이의 협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1970년대와 달리 시민사회가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제도 자체가 일거에 무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의 운영이 조세주의에 맞지 않고, 중앙 정부의 재원 배분에서 문화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며, 문예기금이 문화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문예기금 재원의 조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문화산업진흥기금같이 별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예산에만 의존할 경우 일반회계 예산과의 차별성 미흡 등의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문예기금의 축소나 폐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05년에 출범한 예술위원회 구조가, 정치적 간섭과 외압으로부터 지원 결정의 객관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장치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팔거리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적합한 지원 형태로 그 동안 인정받아 왔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서비스 확충에 따른 정부재정 압박이 큰 상황에서 문예기금은 문화재정 축소를 저지하는 안전판이 되고 있는데 적립금 고갈은 안전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예진흥기금의 적립금 고갈이 실제 문화재정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셋째, 문예기금 폐지는 문화재정에 대한 후퇴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정부가 현재 60여 가지 이상의 다른 기금들을 유지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근간을 이룬 물적 토대가 소멸된다는 것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

3. 문화재정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지난 정부의 경험으로 볼 때 문화재정의 변화는 문화정책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별사업 내에서 공공지원 투입의 성과를 증명해야만 예산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 정당화를 위한 수동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문화예술이 사회경제적으로 갖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의 2014~2020 구조기금프로그램(Structural Funds Programming)을 위해 유럽연합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Sacco(2011)가 작성한 문화 3.0 논의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Sacco는 문화의 변화를 1.0부터 3.0까지 문화 변화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제시하였다. 문화 1.0 시대에 문화는 일부 지배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것으로 이들의 사회적 위신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들의 후원(patron)을 받으며 유지되었다.

문화 2.0 시대에 문화는 산업혁명과정에서 산업화가 되면서 그 자체로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다. 이 시대에 문화창조산업이 부상하여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서 탈제조업의 경제에서 각광을 받게 되면서 문화 소비는 다수의 대중에게 확산된다.[56] 문화 3.0의 시대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힘입어 문화생산의 수단이 소수에서 다수로 전환되었다. 이 시대에는 혁신, 복지, 지속성, 사회 통합, 기업가정신, 소프트 파워, 지역 정체성, 지식 경제 등 문화의 간접적 효과가 더 강조된다.[57]

문화 3.0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문화는 생산성이 낮아 시장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정부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화 1.0의 논리에 의존하고 있으나, 그 사회경제적 효과는 시장 가격 이상으로서 저평가된 상태라는 주장이다.

[56] 이 시기 문화정책의 목표는 문화소비가 다수의 대중에게 확산되도록 하는 문화의 민주화 과정이었다. 하지만 문화 2.0의 시대에 문화생산은 여전히 소수의 예술가나 자본과 기술을 갖춘 문화산업의 조직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57] 문화가 모든 경제적 가치 생산의 전제가 되는 문화의 경제화(culturalization)가 진행되었다. 문화는 더 이상 여가시간 이용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해 있다. 문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의 문화예술 참여 활동으로, Sacco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혁신 기능과 문화예술 활동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 3.0 논의는 문화예술지원 모델의 변화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문화창조산업과 다른 경제 부문 간 상호의존성의 강조이다. '문화융성'에서는 문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강조하고 있어 문화 3.0의 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문화창조산업의 육성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이 경제 전반과 융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공간 차원의 발전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통합적으로도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58]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고유한 문화적 예술적 가치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문화정책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는 상황(삶의 질, 마을커뮤니티, 도시재생, 창조경제 등)에서 문화예술 창작과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기금의 규모는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문예기금의 적립금 완전 고갈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고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새로운 문화예술지원 정책을 지향하며 기존의 지원 틀을 쇄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영역의 기금을 전입금으로 사용하여 문화예술재정의 충당을 꾀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과 타 영역과의 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 영역이 별도의 기금이나 재정을 운영하는 경우 타 분야 기금이나 예산을 문예기금 전입금으로 출연하고 이를 공동 관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전입금을 확보하여 융합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에는 문체부 내에서 관광기금의 문예기금 출연을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양 부문 간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관광기금에서 문예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이는 문화를 위한 지원이기도 하지만 관광을 위한 투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58 우리 사회 양극화와 공동체 해체에 따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현상에 대한 예방적 대처에 문화예술적인 접근법만큼 장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

〈표 1〉 문화적 시대구분에 따른 문화정책 변화 방향

시대 구분	시기	초점	법안	물적 토대	추진 체계
문화 1.0	1970년대	문화예술진흥 (민족문화진흥)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현 한국예술위원회)
문화 2.0	1990년대	문화산업진흥	문화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 3.0	2010년대	문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기존 법안 부분 개정	융합목적 기금 업계 자율 기금 모금 및 지원	기존 조직 연계

4.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위한 문화재정 확충

1) 문화와 관광의 융합의 필요성

문화 융합의 필요성 혹은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는, 첫째, 세계적으로 20세기 후반기부터 본격화된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은 자연관광, 리조트관광에 이어 관광의 거역할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이다.

특히 도시 관광에서 관광자원 대부분이 문화관광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도시 관광이 관광 수요 신규 개발과 도시개발의 투자 회수를 위한 방법으로 활성화되면서 문화관광은 더 중요해졌다. 문화와 관광의 상생적 결합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다.[59] 관광은 문화산업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해당 분야 수입과 고용을 증대시키며, 해당 분야의 전문화가 가능해지고 관광이 아니었다면 보존이 어려웠을 전통문화상품의 보전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59] 이미 1997년에 뉴욕의 브로드웨이 관객 중 뉴욕시민은 24%, 뉴욕시 교외 거주자 30%, 미국이나 해외에서 온 관광객이 46%를 차지했다. 런던의 웨스트엔드 역시 90년대에 해외관광객이 관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었다.

문화관광이 중요한 이유는 문화관광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증가하고, 문화관광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 고학력자인 경우가 많으며, 문화관광은 시즌의 영향을 덜 받으므로 관광시즌을 연장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G. Richards(2014)는 문화 3.0으로의 변화에 따라 문화관광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고 트렌드를 예측하였다.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문화관광에서 창조관광으로, 그리고 이제 관계관광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창조관광에서는 관광객의 적극적 참여 활동이 강조되면서 관광객이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관계관광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다양한 접촉 등 도시와 지역공간에서의 고유한 경험이 중요해진다.[60] 관계관광에서는 예술가의 역할도 사람들과의 접촉,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관계 설정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존재로서 강조된다. 즉 다양한 공간을 문화공간, 창조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이 예술가에게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림 1〉 도시 관광에서 나타나는 문화소비의 진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 방식이 특정 지역의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관광이 번성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증대하는 상황이다.

60 접촉을 활성화시키려면 문화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 주민의 문화역량, 창조적 소양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지역의 고유한 시도(initiatives)에 대한 지원이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문화와 관광의 결합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로,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도시재생과 연관된 문화와 관광의 결합은 널리 사용되는 도시발전전략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대상 문화정책과 관광정책 사업들은 이미 지역발전전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역공모 관광지원사업 중 상당수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 지역 문화유산의 관광화 사업이 계획되면서 문화와 관광의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정책으로 추진되는 문화디자인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서 지자체는 관광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문화와 관광의 결합은 최근 도시재생 성격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그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이다.

셋째,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문화와 관광의 결합이 상당한 성과와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질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먼저, 성공 사례에 대한 반복 재생산(serial reproduction)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행정과 문화 인력의 수준에서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모방함으로써 결국 문화관광의 지속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외부의 문화기획 인력의 힘을 빌어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완성한 후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관광에 있어서도 거버넌스가 강조되면서 관광두레 사업의 경우에서처럼 지역의 관광을 주민들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러한 역할의 담당자가 될 수 있는 예술가의 역할은 아직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문화와 관광의 상호인식에 상당한 편견이 있어서 생산적인 융합의 발생이 쉽지 않다. 제도적 기반과 별도의 장치 없이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수행되는 개별 단위 사업의 틀 안에서는 화학적 결합을 통한 창의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화와 관광의 융합이 될 지역 거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예술가가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자생적 노력이 어려우면서도 기본 여건을 갖춘 지역들을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협력형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들에 대해 관광과 결합된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입금 활용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융합 목적의 기금 신설을 위한 당위성은 문화와 관광의 융합 성장을 위한 계기를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에 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문예진흥기금 출연의 비율을 명시하거나 비율을 정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기금 전입금의 관리를 통해 실질적으로 문화와 관광의 융합적 사업이 계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입금의 사용을 관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입금 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해야 한다.[61]

핵심 사업으로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위하여 문화관광 거점 확보 사업과 지역협력형 사업의 관광기능 보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우리 고장 예술가 사업의 경우 지역문화사업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기도 하다.

문화관광의 거점을 지역에 확보하는 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그 동안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공연장상주단체지원사업에 관광기능을 부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 도시재생사업이 문화관광의 성격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한 쇠퇴지역의 활성화 사업이 문화적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관광 성격의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2]

끝으로, 문화와 관광 종사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워크숍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킨다. 관광상품 기획과 관광홍보 마케팅 교육, 관광 동향, 그리고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 문화정책 동향 등을 상대 종사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

[61] 위원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입금 사용 계획 수립, 전입금 신청 공모, 전입금 사용 배분, 전입금 사용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도록 한다.

[62] 기존의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경우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데, 최근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성공사례 중에는 도시관광객들의 체험관광 대상지로서 활로를 찾는 경우가 많다.

5. 문화예술분야 자체 노력의 필요성

타 분야 전임금은 특수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하므로, 문화예술계 자체에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자체 재원 모금을 통한 기금 조성액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이를 수행해야 타 분야와의 융합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외부 기금의 전입금에만 의존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외 여행객에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만원씩 받으면서 왜 수십만 원짜리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에게는 돈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63]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가 양적으로 상당히 성장했다는 점이다. 여전히 문화창조산업의 특성상 투자조달이 어렵고 영세한 조직이나 기구가 대다수이지만 그 중에는 경제적 성과를 올린 조직이나 인력들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예술계 내 기금 모금 방식은 문화예술분야 내 각 장르별로 고유한 집합적이고 자조적(self-reliant)인 노력을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구 노력을 보여주는 분명한 행위로 자체 모금을 고려할 수 있다. 기금의 부담자인 예술소비자와 예술단체 혹은 예술상품 공급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정을 공연예술계정, 시각전시예술계정 등으로 분리하여 각 장르 예술의 관람객과 참여 주체들에게 기금을 거두는 것이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이와 같은 자립적 기금 모금 움직임을 도와주는 형태로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될 때 기금은 수익자가 수혜자를 위해 직접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자율적 성장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3] 국외여행이 외화 유출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 값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는 라이선스 뮤지컬은 그러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

6. 결론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문화재정 2% 달성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 재원 조성 마련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 2% 달성은 장기적 지속가능한 안정적 재원구조 확보를 포함할 때 역사적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융성 시대에 부합하는 것은 문화재정 확대 자체가 아니라 문화재정을 장기적으로 확고하게 하면서 문화와 다른 사회 분야 간의 융합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문화예술의 변화 방향을 인지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가치를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예술가로서 활동하도록 동인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융성을 위한 장기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발제 2에 대한 토론 1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 팀장

문화서비스에 종사하는 광역문화재단의 입장에서 문화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체부의 전체 국가재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1.229%, 각 지자체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산은 대략 1.21%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지자체예산에서 차지하는 광역문화재단의 예산을 대비해 보면 0.3% 정도이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사업을 뒷받침하는 문화재정의 현 주소이다.

광주문화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재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는 자체적인 노력들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문화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발제 2에 대한 토론 2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문화예술 재정마련 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Crowd Funding 이란

상용 가능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지적 재산들을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홍보하여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후원 받은 기금으로 뛰어난 프로젝트들이 사장 되지 않고 빛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펀드레이징 사업을 말한다.

예술적 재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 투자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 수단이 아니라 투자와 기부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손해인 이 펀드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해당 프로젝트의 실현을 통해서 '가치를 위한 투자', '사회적 투자'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는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공유하고 공감하여 함께 실현시키고 싶은 마음과 응원이 생겨야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창작자 및 기획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참여로 예술인의 다양한 창의력 발휘의 기회 마련, 경계가 없는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제적인 예술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별도의 프로모션 활동이 없이 많은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문화 · 예술 후원자 및 소비자들과 소통 할 수 있다.

예술시장을 육성하는 크라우드 펀딩

풍부한 문화 · 예술시장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여 정보 비대칭 현상 해소, 대대적인 온라인 마케팅 효과로 신규 문화 · 예술소비자 육성 가능, 판매 중심의 유통 프레임에서 향유 중심의 유통 프레임으로 전환이 가능, 지역경제 성장을 문화예술의 성장으로 전이되게 하는 기회 제공

문화 · 예술소비자를 만드는 크라우드 펀딩

문화 향유 기회를 선택할 수 있다(자신이 직접 선택한 문화 · 예술경험의 생산), 예술가와의 소통을 통해 보다 친밀한 관계형성, 향유자이자 후원자로 다양한 사회참여의 새로운 경험 기회 제공, 창작 일변도 정책에서 생태계 지원으로 정책 기조 변화가 가능

Session 6

문화예술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문화발전

발제 1 **문화예술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발제 2 **문화정책 변천에 따른 지역문화 발전 방향**

이병훈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이사장

토 론 **문화예술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문화발전 방안**

김경아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한강희 전남도립대 교육복지학부 교수

김용민 송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 ARKO Cultural Policy Conference

White Paper

발제 1

문화예술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1. 들어가며

최근 국가적 이슈인 고령화, 지방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관련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은 기관들의 정책운영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중추기능의 적극적인 분산시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였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151개 공공기관들이 최근 지방으로 이전 혹은 계획 중에 있으며, 2014년 4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ARKO, 이하 아르코) 역시 광주 · 전남 공동혁신도시(전남 나주시 소재)로 이전했다.

2. 이론적 논의

1) 협력적 거버넌스

협력(collaboration)은 "미래에 발생될 문제와 관련된 핵심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동 의사결정 과정"으로 이해되며,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란 "다양한 조직 간의 수평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Ansell & Gash(2007)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공공정책의 집행 혹은 공공 프로그램 및 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을 지닌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비정부적 이해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참여시키는 통치방식"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조직간 협력', '공공관리 네트워크'를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관료제 모형과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여러 문헌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의 핵심 동력으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예술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에 있어서 기관장의 의지 및 참여자 간 신뢰구축이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임을 정문기(2009)의 연구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2) 문화정책과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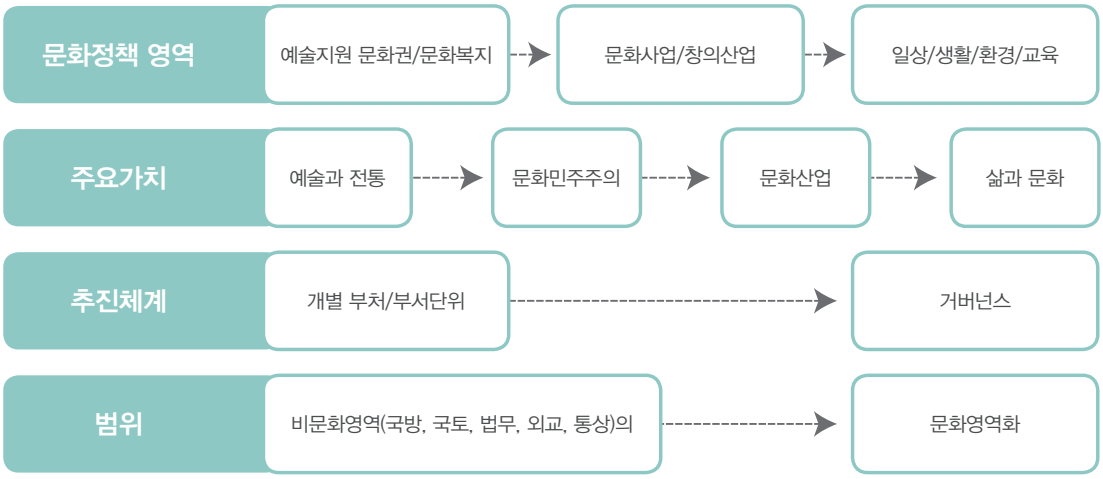
최근의 문화정책을 둘러싼 이슈는 정치 · 행정, 경제 · 산업, 사회 · 교육, 과학 · 기술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치 · 행정 환경에서는 지방화, 남북한 관계의 긴장 고조, 세계화라는 이슈가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자생성 확보 문제, 남북 간 문화의 이질화, 탈북자의 문화 적응 문제, 반 한류 분위기, 한국문화 수요 증가, 한국문화 정체성 위기라는 문화정책적 과제를 발생시켰다.

둘째, 경제 · 산업 환경에서는 실업 · 저성장의 장기화, 경제민주화라는 이슈가 나타났고, 문화 · 관광 및 스포츠 분야의 신성장동력 요구, 일자리 창출, 콘텐츠 및 관광산업 내 불공정거래의 시정, 불법 저작물 근절 노력의 과제를 발생시켰다.

셋째, 사회 · 교육 환경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문화다양성, 청소년 문제라는 이슈가 나타났고, 국민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추구, 노년층 및 가족 등 문화여가 인구가 증가, 그리고 계층 간 · 지역 간 · 세대 간 문화향유 양극화 현상, 문화 간 갈등과 충돌, 전통 · 민족문화의 패러다임 전환, 청소년의 정서적, 심리적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 및 활동 강조 등의 과제를 발생시켰다.

넷째, 과학 · 기술 환경에서는 융복합과 창조경제라는 이슈가 나타났고, 문화예술 장르 및 주체, 형식의 다양화, 문화영역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문화정책적 과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 영역에서의 이슈와 과제는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정책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70년대 이후 문화정책의 관심영역과 주요가치, 추진체계와 범위의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문화정책 관심영역의 변화



자료 : 임학순 · 채경진(2013), 문화정책 영역과 주요 가치는 라도삼(2006)을 참조

3) 연구 분석틀

문화예술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아르코는 유관기관, 지역사회 및 지역문화재단, 예술가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과 과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지방이전 후 거버넌스는 국가 차원에서 문화 유관기관,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의 역할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하며,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이전 기관들, 아시아문화전당과 지역대학, 나주시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대표 공공기관인 아르코의 지방이전을 통한 한국 문화예술 전반의 거버넌스 구축방안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시론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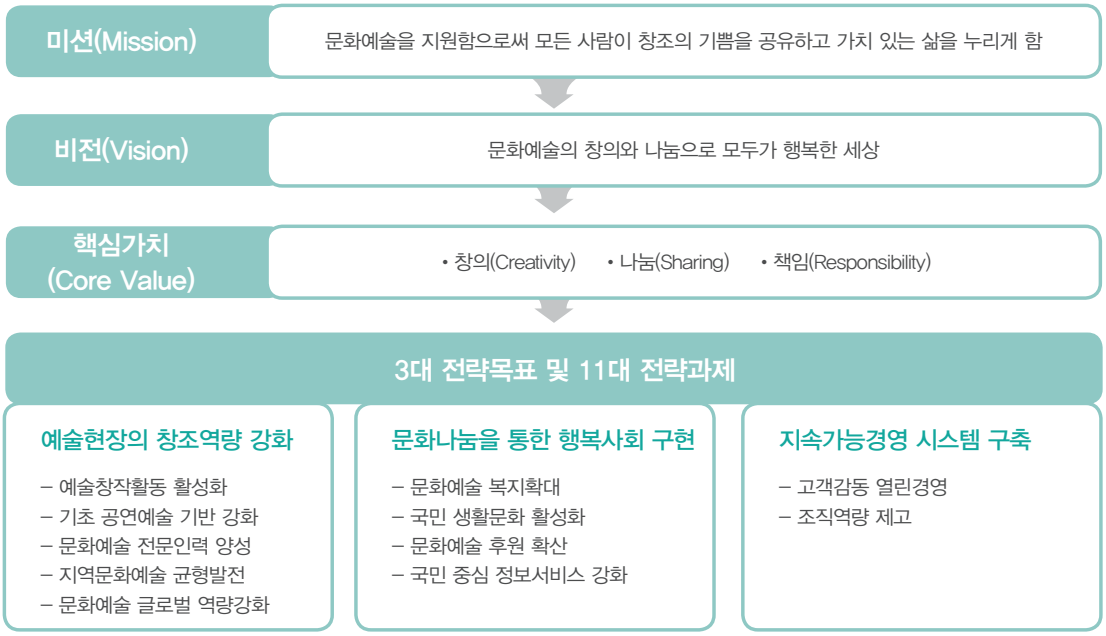
3. 문화예술기관의 지방이전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1) 아르코 지방이전 및 조직일반 개요

2014년 8월 31일 현재 총 151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 혹은 이전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포함된 광주전남혁신도시(전남 나주시 소재)의 경우 에너지, 농생명, 정보통신, 문화예술 분야의 16개 대표 공공기관이 이전 추진 중에 있다.[64]

문화예술진흥법(1972)을 근거로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출범한 아르코는 1994년 원내 문화발전연구소를 한국문화정책개발원(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 독립시켰고, 참여정부 시기인 2005년 합의제(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로 전환되었다.

〈그림 2〉 아르코의 미션과 비전



자료: 아르코 홈페이지(http://www.arko.or.kr)

[64] 주요 거점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전체 내용, 그리고 아르코 연혁과 조직도는 자료집 「2014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 264~265쪽과 266~267쪽을 참조하기 바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집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2014년 4월 광주전남혁신도시로의 이전과 더불어 2010년 분리되었던 국립예술자료원(현 예술자료원), 한국공연예술센터(현 공연예술센터)가 2014년 5월 다시 통합됨에 따라 급속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르코는 '문화예술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이라는 미션과 '문화예술의 창의와 나눔으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창의, 나눔, 책임을 설정하고 있다.

아르코는 위원장을 필두로 1처, 1센터, 5본부 · 17부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자료원과 공연예술센터가 통합되기 전에는 3본부, 12부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는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조직기능이나 사업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분리당시 111명이었던 정원은 2014년 재통합 후 143명으로 32명(28.8%증가)이 증가하였으며, 나주 본사를 비롯하여 예술가의 집, 아르코미술관, 공연예술센터가 동숭동에, 예술자료원이 예술의전당에, 예술인력개발원이 경기도 고양에 있다.

아르코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①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②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 개발 및 교육 · 연수 사업이나 활동, ③ 민족전통문화의 보존 ·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④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법 제4조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 ·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⑤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 ⑥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⑦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⑧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⑨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⑩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사업 등이다.[65]

[6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와 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와 제30조를 참조

2014년도를 기준으로 아르코가 수행하는 총 예산 규모는 1,740억 4,300만 원으로, 예술창작지원(52,162백만 원), 예술인력육성(8,118), 국제예술교류지원(8,668),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61,300), 지역문화예술지원(24,820), 문화예술사회적인식제고(18,975) 등이다.

2) 지방이전으로 인한 발생된 과제

아르코는 2014년 광주전남혁신도시로의 이전과 더불어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위원회 전환 이후로 문화예술기금의 재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예술자료원 및 공연예술센터와의 재통합은 중복사업 및 사업조정, 인력 및 통합보수체계 구축의 과제를 발생시켰고, 지방이전으로 인한 순환보직 문제, 조직통합으로 인한 조직문화 개선 등 물리적 거리로 인해 새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를 발생시켰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사와 기타 부서 · 시설이 물리적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 배치해있기 때문에 부서 간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획 및 정책부서와 사업부서와의 단절은 아르코의 비전가 미션 달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순환보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나주 및 서울 근무에 대해서도 원칙과 기준이 필요할 듯하다. 특히 나주 근무자의 이외 지역 근무자와 비교한 상대적 동기저해 문제에 대한 심리적 형평성 극복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여 풀어나가야 할지도 관건이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기대했던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 및 경쟁력 제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문화일보 기사(2014.8.8)에 의하면 지방이전 기관 직원의 20%만 이주하였고, 80%는 직원 한 명만 이주하여 기러기만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교육, 문화생활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혁신도시는 대부분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홀로 생활하거나 사택에서 팀을 이뤄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금요일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로 올라간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로 인해 업무에 대한 몰입이나 직무 만족도가 이전에 비해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우수한 인재의 중도 이탈 문제를 발생시켰고 지역적 이동으로 인한 우수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기관특성상 예술가나 유관기관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만남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예상치 못했던 출장비 증가 문제가 나타나고, 출장이 잦은 직원들의 업무피로도가 증가하여 조직몰입도와 직무만족도를 저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문화재단, 전남문화예술재단, 아시아문화개발원 등 유관기관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전국단위의 공공예술지원기관이 아닌 지역의 일부로 위상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3)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거시적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역할 정립

아르코는 국가 문화예술정책을 집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지방이전으로 인해 더욱 약화될 수 있는 아르코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역할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 단위의 거시적 문화예술정책의 비전 개발자로서 역할을 정립해야 하며, 예술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허브기관으로서, 여러 유관기관들의 정책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유관기관 간 유사사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을 기획 및 개발하는 혁신기구로 전환되어 창의적 싱크탱크 역할과 네트워킹 중심의 조직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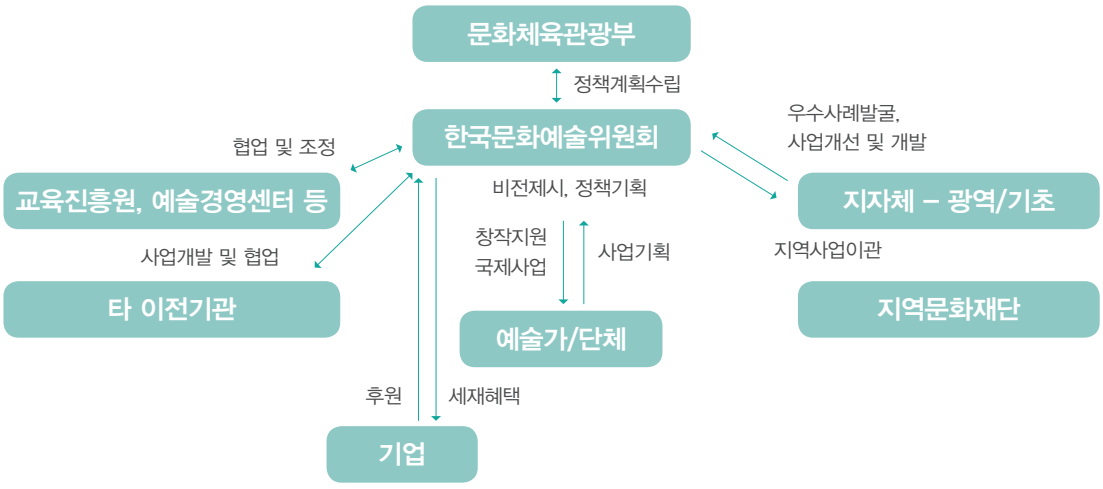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관계에서는 매년 정책계획 수립 및 형성 단계에서 하향식 집행만을 담당했던 아르코의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여 협업적 정책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복적 성향이 강한 사업의 경우 협업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일회적 혹은 소모적 성격의 지원사업 개념을 투자의 관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 동안 공급자인 아르코 중심의 사업 진행에서 수혜자 중심의 연구조사를 통해 Bottom-up 형식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체계적인 성과의 관리가 필요하다.[66]

이를 위해서는 부서간 기능조정을 통해 연계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창작 · 공연 · 시각예술 · 예술후원 기능은 대학로, 예술인력개발은 고양, 기타 지원사업과 정책기획 기능은 나주 본사에서 전담하여 통합시너지를 구현해 나갈 수 있다. 모든 사업 결과물들은 DB화하여 예술자료원이 최종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영역 역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하며, 이를 내부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정책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가시적 성과가 명확한 국제교류사업(파트너십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이나 인적자원 역량강화 사업을 강화하고, 정책기획 및 평가 영역을 강화하여 계획, 집행, 결과 단계에서의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 동력확보 차원에서 부서 간 물리적 거리 극복을 위한 소통채널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재통합된 기구의 구성원과 본사 구성원과의 교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시너지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림 3〉 거시적 차원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66] 특히 성과측정 시 우수사례 발굴에 노력하여 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투입지표에 치중하기 보다는 사업으로 인한 예술의 가치 확산 등 산출의 영향지표에 대한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정립

아르코는 문화예술의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장밀착형 지역문화정책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중추적 문화복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르코는 지방이전을 기회삼아 해당지역 이전기관 간 연계과제 발굴에 노력해야 하며, 예술과 타 영역 간 연결고리 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 타 이전기관에서 예술행사 등을 개최해 신뢰감과 친근감을 형성하여 시너지 제고에도 앞장서야 한다. 특히 예술콘텐츠의 원 자료를 생성할 수 있는 아르코와 이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갖추어, 아르코는 1차 창작기관의 역할, 콘텐츠진흥원은 2차 상품화 · 산업화 기관의 역할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둘째, 지역대학의 경우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학 특성화 전략을 문화, 전력 및 전파, 농어촌 계열에 집중하여 재편하여 공공기관에 할당된 지역인재 발굴 및 대학의 취업률 제고, 이전기관과 대학의 공동사업 추진 등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전남지역의 발전을 위한 촉진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아시아문화개발원과 협업적 연구체제 구축, 아시아문화전당과 미술관 · 자료원 · 공연예술센터 · 창작지원부 간 전시 · 기획 · 공연 시 협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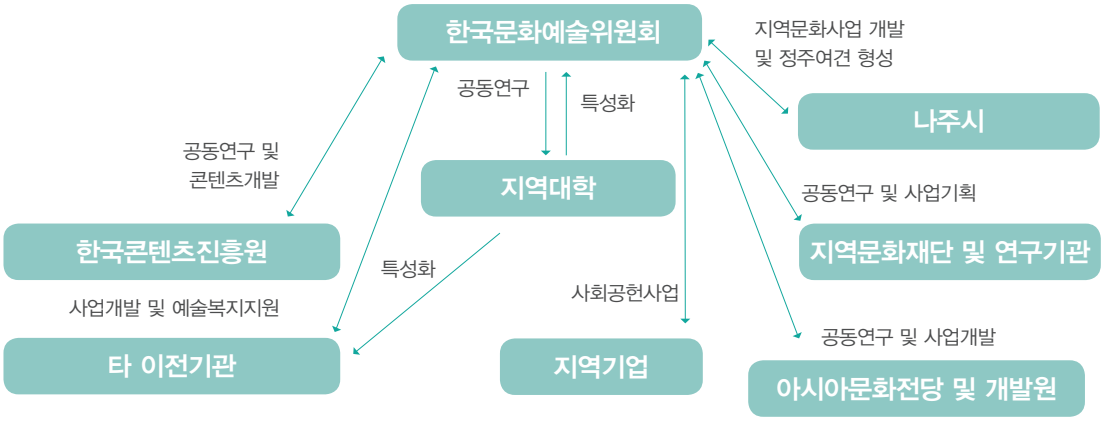
이를 통해 아시아문화의 메카로서 도약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문화 소통의 장 마련에 앞장 서 지역 문화재단 및 발전연구원들과 지역문화 연구와 지역문화사업을 공동 기획 · 수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나주시의 경우 이전기관의 구성원들의 심리적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이전을 통한 문화예술행사 공동기획 등 지역사회의 지지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역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가령, 이미 나주의 남양유업과 아르코가 공동으로 인문학콘서트 등 예술행사를 통해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더욱 권장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사업의 경우, 지역문화 분권에 기반을 두어 지원모델을 체계화하고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조정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한 전 지역 단위의 사업을 개발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67]

〈그림 4〉 지역사회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67] 이를 위해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은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관하고 아르코는 지역정책 기획 및 네트워킹, 지역 문화정책의 과제 발굴, 창작지원에 중점에 무게를 두고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비단 아르코뿐 아니라 지방이전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는 건 151개 기관이 마찬가지 일 것이며, 조직구성원의 이탈, 채용 문제, 심리적 문제 등 새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게 생겨났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이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이나 직무만족 등 조직효과성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지방이전을 제2의 도약기회로 삼아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발제 1에 대한 토론 1

김경아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대학로, 수도권 위주의 문화 과밀현상 시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나주 이전과 함께 지역 간 균형이 잡힌 문화 나눔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그대로여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협력 거버넌스라는 것도 있지만, 왜 안 될까? 라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지방이전으로 사람들이 기대할 것은 뭘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깊이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발제 1에 대한 토론 2

한강희 전남도립대 교육복지학부 교수

‘문화예술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토론문

발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개념 틀에 의거해 지역문화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 정책 환경에 걸맞은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 점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지역 이전의 연착륙 – 선순환을 위해 바람직한 접근이라 판단한다.

발제는 아르코의 비전과 목표, 역할과 기능, 조직체계와 업무분장, 주요사업과 예산, 핵심가치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방이전의 경험이 있는 선진 사례를 방법론적 틀로 원용해 개선환류(Feedback)의 대안 내지 비전체계로 제시하면 좋았을 것이다.

발제는 또한 지방이전으로 야기된 현안 문제점들을 짚어내고 있다. 문화이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화변동-문화접변-문화할인율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조망이 뒤따랐다면 보다 생산적인 논의로 진전되었을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아르코와 관련된 1차적(직접적) · 2차적(간접적) 공공기관과의 관계 정립, 지역적 차원에서 1차적(문화예술단체) · 2차적 기관(문화 외적 단체)과의 네트워크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문제설정과 관계정립에 관해서도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68]

콜라보레이션과 거버넌스는 상생의 조건과 연관된 시대적 화두다. 아르코는 1차 자료 창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콘텐츠진흥원은 2차 기관으로서의 상품화 및 산업화하는 역할을 통해 시너지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견해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 아르코는 문화수도 광주의 엠블럼이 될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개발원과의 유기적 연계성(특히 창작 부문)에 대해 이성적 차원에서 파트너십과 거버넌스를 기조로 하는 한편, 독자적 차별성을 명확히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르코는 지역민의 열망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문화대계 로드맵을 광주-전남과 연관하여 그려야 하며, 지역민은 'Dynamic-korea Culture' 부문에서 문화철학적 가치가 내포된 가시적, 비가시적 그랜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한다.

[68] 이를테면 뒤쪽에서 "이전기관 간 연계과제 발굴에 노력해야 하며, 예술과 타 영역 간 연결고리 개발에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구성원, 업무 콘텐츠 등 보다 구체성이 동반되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발제 2

문화정책 변천에 따른 지역문화 발전 방향

이병훈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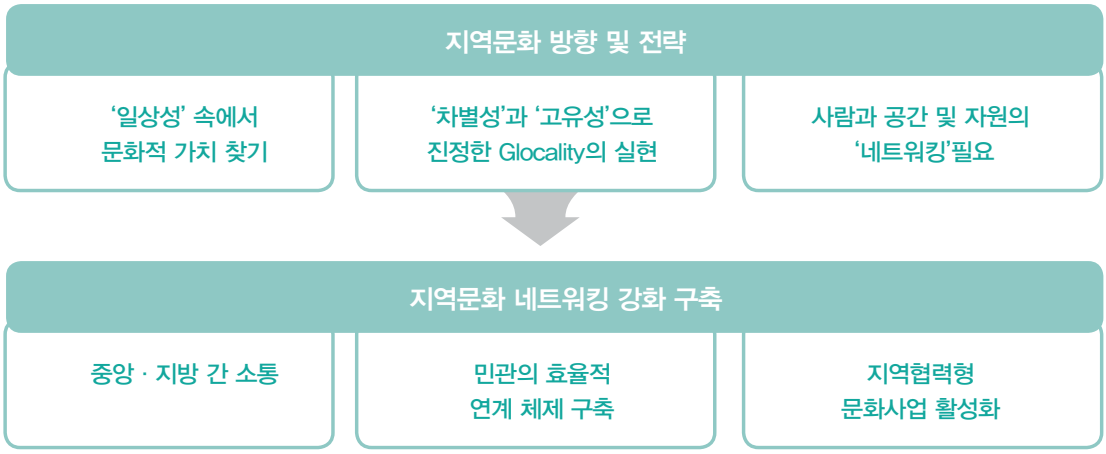
1. 들어가며

1) 패러다임의 변화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조사회로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 콘텐츠 사회, 상상력과 창의성이 발전의 원동력, 인문학, 문화, 기술의 융합시대

지역문화의 역할과 위상 변화 : 지방분권, 생활 밀착형 지방 문화 부각, 지역 발전 전략으로서 지역문화자원 가치 부상

2) 지역발전 패러다임과 환경 변화



2. 역대(歷代) 문화정책 추이

1) 문화정책 관심영역의 변화

시대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
문화정책 영역	예술지원	문화권 / 문화복지	문화산업 / 창의산업	일상 / 생활 /환경 / 교육
주요가치	예술과 전통	문화민주주의	문화산업	삶과 문화
추진체계	개별 부처 / 부서단위	좌동	좌동	거버넌스
범위				비문화영역의 문화영역화

2)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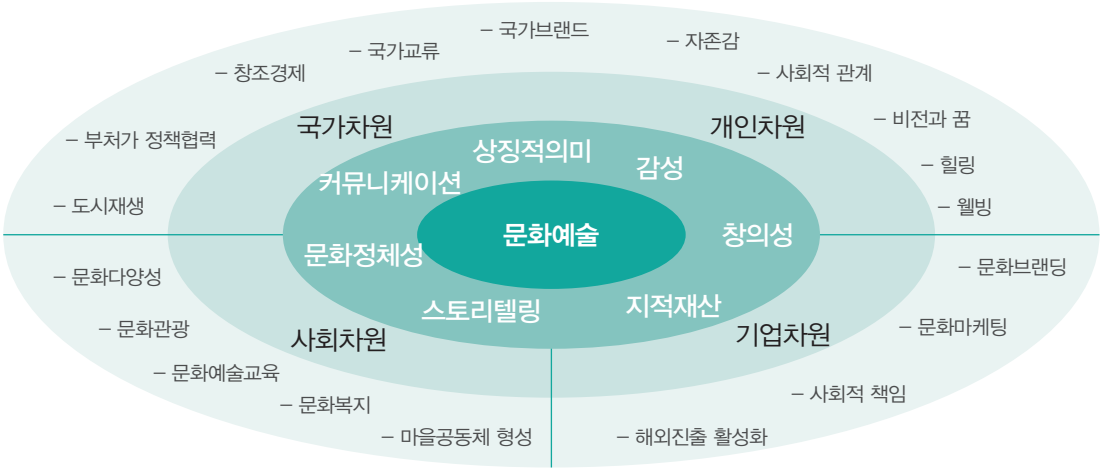
구분	제5공화국까지	노태우정부	김영상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진흥법 제정,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 설립	문화부 출범,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설립	'문화비전 2000' 순수예술진흥 종합계획	'창의한국' 계획 수립	문화비전 2012 수립
문화기반 확충	문화시설 확충	국어, 도서관 정책 문화시설 확충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지방박물관 확충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유휴공간 활용	기존공간 리모델링으로 문화공간 확충	근대산업화시대 공간의 문화공간 확충
민족문화 창당	문화재보호법 제정, 경복궁 원형 복원	문화동질성 회복	역사 바로 세우기,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남북정상회담,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문화교류 확대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건립
문화산업 육성	–	최초 문화산업 개념 거론	문화산업국 신설	코리아 21 콘텐츠	콘텐츠 산업육성 정책 추진	5대 콘텐츠 강국 도약
문화복지 정책	–	문화복지개념 등장, 국민문화 향수권 확산 강조	문화복지 기본 구상 수립	창의적 문화복지 국가건설 10대과제 선정	분배적 정의에 입각한 문화복지	생산형 복지와 맞춤형 복지
한국문화 세계화	문화유산 전승계발사업	북방정책연계 추진	세계화원년 ('95)선포	해외 민족문화 유적 발굴 및 반환운동 확산	동북아 문화협력 강화, 문화적 다양성 인정	동서문화교류 허브전략 신 아시아 비전 외교
지역문화 진흥	지방문화원 사업 조성법 제정	지방문화원 역할 정립	지역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역사문화 중심도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역사문화중심 도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역사문화 중심도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3.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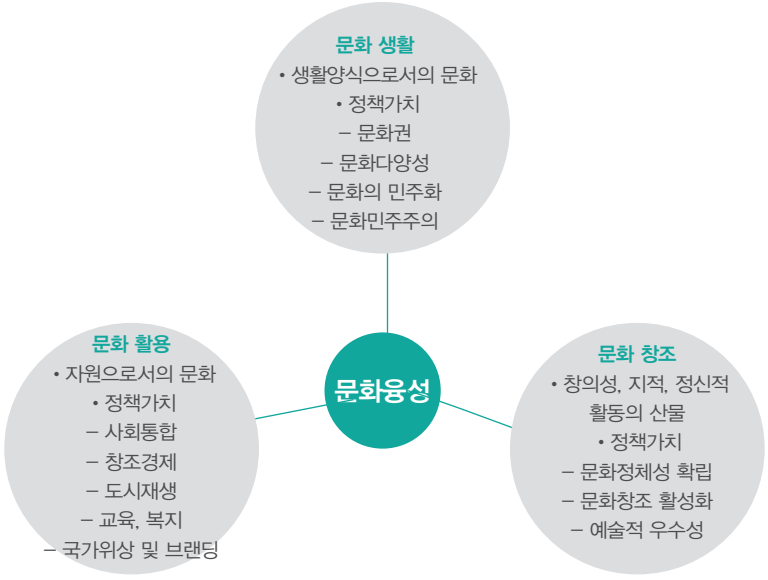
1) 문화정책 이념

문화가 있는 삶과 국민행복

문화예술의 창조적 활용 가치



문화 융성



2) 문화예술 관련 법제

•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 문화기본법 제정('13.12.30, 문화융성구현의 제도적 기반,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명문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14.5.28, 유네스코의「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행)[69]

• 지역문화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4.1.28,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 실현 목적)

4. 지역 문화정책

1) 지역문화정책의 목표

• 지역문화정책의 5대 목표(1998년 스톡홀름 회의) : 문화정책을 발전전략의 주요 구성요소로 삼을 것, 창조성과 문화적 생활에 대한 참여 촉진, 문화유산 보호 및 문화산업 활성화, 문화적 · 언어적 다양성 촉진, 문화발전을 위해 인적 · 재정적 자원 확충

2) 지역문화 주요 전환 시기

• 1995년 GNP 1만 $ 돌파
•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돌입 : 지방 문화와 관광의 중요성 부각
• 참여정부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균형발전특별회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69]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제정 목적)

3) 현황

• 문화시설 : 2012년 12월 말 현재 전국(광주)의 문화시설 수는, 공공도서관 828개소(광주 17개소), 등록 박물관 740(10), 등록 미술관 171(7), 문예회관 214(7), 문화의 집 117(4, 지방이양사업), 주민자치센터 2,734(94), 청소년 문화의 집 216(4) 등임.

• 문화 관련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등 14개 부처[70], 문화예술위원회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콘텐츠진흥원 등, 광역 · 기초 자치단체, 예총 · 민예총, 지방문화원(전국 229개, 광주 5개), 지역문화재단[71]

4)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중앙정부 의존성[72], 지역 문화정책 관련 부서간의 연계체계 미흡, 지역 문화 재원 부족, 문화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부족, 지역 문화 자원 DB 구축 미흡, 그리고 창작 기반 부족으로 인한 지역 창조인력의 유출, 지역문화 전문인력 부족, 지역문화인력 양성 사업의 단속성 문제, 문화재단 등 단체의 열악한 구조 등

5) 지역문화정책 방향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향유자) 중심으로, 양적 투자 위주의 사업 추진 지양, Arm's Length Principle 준수, 예산 운용체계 개선(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 해소, 경직성 예산 < 포괄적 · 탄력적 예산)

[70] 예컨대,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문화마을 프로젝트로는, 문화체육관광부(마을 문화자원 발굴, 스토리텔링을 통한 테마공간화),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마을가꾸기),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마을–색깔 있는 마을/ 전원마을), 산림청(산촌종합개발), 안전행정부(마을기업/ 정보화 · 녹색 · 희망마을), 환경부(자연생태 우수 마을) 등이 있다.

[71] 2014. 10 현재 광역 13개 – 전북, 경북, 울산, 세종 미 설립, 기초 48개 –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산하 기초단체 미 설립

[72] 하드웨어 편중 지원, 문화시설 수급 불균형, 사업 중복 지원, 지역 정책 평가 지표의 한계

시설 보다 프로그램, 콘텐츠 지원 예산 증액(시설의 경우 신축과 보존, 재생의 균형), 문화 관련 시설의 전문가 · 전문단체 위탁 관리화(문화 전문기관, 문화 협동조합 등), 문화 관련 기관 · 단체의 네트워크 강화 및 소통(중앙부처간, 중앙 · 지방정부간, 정부와 단체 간)

문화행정 체계의 제도화 및 문화거버넌스 구축(문화행정 전달 체계의 중복 배제, 지역문화 단체의 자율성 확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문인력 양성(공무원, 단체), 지역문화 컨설팅 시스템 구축, 지역문화 지표 구축 및 DB 구축

지역 콘텐츠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지역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문화정책(주민참여가 필수, 마을만들기 · 도시재생 등), 평가 및 지원체계 개선 등

발제 2에 대한 토론

김용민 송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화정책의 추진체계의 협업시스템과 문화콘텐츠를 통한 문화거버넌스 구축

지역문화정책의 범위는 문화, 문학, 공연예술, 시각예술, 전통예술, 디자인공간문화, 문화예술교육, 대중예술, 공예 등 매우 넓어 다양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며, 이의 효율화가 문화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추진체계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국립문화시설 및 민간문화단체들이 파편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어떻게 묶어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새로운 문화정책을 전달하는 조직을 만들거나 문화정책 기반시설과 단체를 조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함.

뉴욕 주의 미들컨트리공공도서관, 렌코브공공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프랑스 아제르협력망, 복합문예기관인 퐁피두센터, 북미의 많은 도서관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협업은 문화콘텐츠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봄.

기존의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단체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을 효율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사례는 너무나도 많으며, 동종시설 간의 협업뿐 아니라 이종시설 간, 시설과 단체 간 협업 과제를 발굴 · 기획 · 실행한다면, 문화거버넌스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임.

권역별로 역사문화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규모가 크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이 주체가 되어 인근 자치단체,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단체를 아우르는 '권역별 역사문화권 프로젝트'를 제안함.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각 문화시설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프로젝트 내용의 콘텐츠를 개발, 개발한 콘텐츠를 모든 지역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로, 문화시설들은 독서, 유물, 공연, 미술작품을 통해, 문화원 · 단체는 콘텐츠별 주제 개발을 통해 참여함.

2014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

함께 해주신 분들

주최/ 주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
주관	한국문화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한국예술경영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전남대 공공행정연구소

기획/ 행정

기획총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용진 사무처장
행정총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용훈 경영전략본부장 · 박두현 정책평가부장 김창욱 전문위원 · 채경진 박사

원고편집

편집윤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양렬 박사

업무진행

기획총괄 · 디자인 · 편집 · 인쇄

인디엔피 양지용 대표 · 박영미 실장 · 장민혜 실장 · 정연중 실장

업무협조

장소대관 · 대외협력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김성철 조교
현장진행	(주)가나엔터프라이즈 고진영 대표 · 박경환 실장

참여전문가

김경아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욱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성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용민	송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인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재범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
김지원	광주문화재단 기획홍보팀 팀장
김진아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노시훈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신의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 과장
박호재	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 실장
변지혜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사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송희영	서울예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신형덕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안성아	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양지연	동덕여대 큐레이터전공 교수
오자현	국립발레단 공연기획팀 팀장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병훈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이사장
이상빈	한국외대 대학원 비교문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 행정대학원 원장
이용관	대전예술의전당 관장
이형환	중앙대 국악교육대학원 원장
이흥재	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원장
장세길	전북발전역원 부연구위원
정홍익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주효진	꽃동네대 복지행정학전공 교수
최영호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추미경	문화다움 상임이사
하계훈	단국대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교수
한강희	전남도립대 교육복지학부 교수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아르코 문화예술 정책 컨퍼런스

백서